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800-0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2021~2025)

2020. 7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계획관련 소관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한 것입니다.

※ 소관별 과제의 투자계획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 있음

목 차

I.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개요	1
1. 수립 배경 및 근거	3
2. 실천계획 구성 및 평가	4
3.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5
1-1. 계획의 비전과 목표	5
1-2. 국토의 공간전략	6
1-3. 6대 추진전략	7
II.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5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7
1-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21
1-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36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55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77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81
2-2.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88
2-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93
2-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111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123
3-1.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127
3-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138
3-3.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146
3-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156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177
4-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181
4-2.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193
4-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204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231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249
5-1.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253
5-2.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265
5-3.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287
5-4.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97
5-5.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314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329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333
6-2.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350
6-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360
Ⅲ. 기관별 추진 과제	373
1. 총괄 현황	375
2. 기관별 추진과제 현황	376



I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개요

- 1. 수립배경 및 근거 / 3
- 2. 실천계획 구성 및 평가 / 4
- 3.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 5

□ 수립배경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9.12.11일 공고(확정)
 - 동 계획을 구체화하게 될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각 소관기관별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할 필요
- 정기적인 계획집행평가 및 보완체계 구축
 - 집행현황을 연차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매5년)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장기계획의 한계 극복

□ 수립근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기본법 제18조 제1항)
- 소관별 실천계획은 현황 및 문제점, 목표 및 추진전략,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작성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 고

(국토기본법 제18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실천계획 구성 및 평가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의 내용 중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선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6대 전략을 6개 분야로 설정

6대 전략	세부실천과제 수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18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6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23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32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31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8

□ 부처별 세부 실천과제 현황

부처명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과제수	80	3	10	2
부처명	산림청	산업통상 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과제수	4	2	2	17
부처명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계	
과제수	2	16	138	

※ 2개 이상 공동부처 추진과제는 각각의 부처 사업으로 산정함

□ 실천계획 평가

○ 매년 소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12월말 기준)를 제출(다음해 5월)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 (근거) 국토기본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3항

1-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계획의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환경 조성

□ 목표와 전략

○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

-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



□ 기본구상

- ①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 형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획일적인 정책공간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편의·활력·매력이 넘치는 국토 공간 형성 목표
- ② 국토 개발에서 관리의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
 - 성장기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간 형성방식에서 벗어나, 성숙기에 맞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만들어 갈 공간구상을 반영
- ③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준비
 - 국토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춘 향후 지향해야할 공간 전략을 수립

□ 국토의 미래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
 -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서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국토를 위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탄탄한 연대 구축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산업,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민주적이고 소통적인 거버넌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구축
- 공간 연계의 유연함과 강인함
 - 지역 간의 자유롭고 다양한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와 기술변화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강인한 연대를 통해 위기에 직면해서도 지역과 국토의 지속성 및 회복력 유지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지역의 다양한 연계·협력 :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 행정 등에 대해 지역간 협력하여 경쟁기반 확보
 - 지역은 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협력 사업 추진기반 구축, 중앙정부는 광역 연계·협력사업 수요 발굴과 지원
- 지역의 혁신적 성장 촉진 :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주도의 성장전략 마련,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지원기반 개선
 -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수도권 : 지방과의 상생발전,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내 균형발전, 질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방 대도시권 : 인근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중추거점 기능 강화, 주변 지역 간 광역·순환형 인프라 구축
- 중소도시권 :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등 균형발전거점을 속도감 있게 조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소도시 연계형 도시권 육성

□ 농·산·어촌 경쟁력 제고와 낙후지역 지원 강화

- 농·산·어촌 : 생활서비스 집약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매력 제고로 유입·체류인구 정착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향토자원 경쟁력 향상
- 낙후·위기지역 :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역할 강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낙후·위기지역 지원 내실화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 산업혁신 기반구축 :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간·기술간 융복합 등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을 지역과 연계하여 육성,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 미래형 복합공간 확산 :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산업 공간 조성,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 일자리와 연계한 공간 구축
 -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 지역산업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생태계 조성 : 산업단지, 대학 등 지역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등 주요정책과 연계한 산업여건 개선
 - 기존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신산업 도입 등 산업구조 재편
- 노후 산업단지 재생 : 산단 내부에 창업지원, 교류·협력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근로 환경을 개선
 - 노후 산단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적 재생을 추진

□ 매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지역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 :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 발굴하여 지역경제 동반 성장 추진
 -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철도, 프로그램 등 관광기반 정비

- 쇠퇴관광지·시설 재생 촉진 : 콘텐츠 활용과 주변 인프라 정비 등 쇠퇴관광지를 재생, 폐교 등 노후시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도시의 적정개발과 관리 :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도심내 복합개발, 난개발 방지 등 도시계획적 관리 강화
-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 주요 교통·경제축, 잉여 기반시설 계획의 녹지공간 대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재배치 검토
- 구도심 활력 제고 : 도시재생 로드맵에 따라 지역 자산 활용, 신산업 유치 등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사회통합형 생활공간 조성 : 영유아 시설·신혼부부 주거공간 확충,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등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 생활 SOC의 질적 확충 : 국가최소기준 이상 공급
-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 : 1~2인 가구 증가 대비, 소형주택, 공유형 주거 등 확산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 주거안전망 확충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미래형 주거서비스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등 친환경·첨단주택 공급
- 협력적 주거거버넌스 : 지역 주민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 체계 구축

- 전주기 방재체계 구축 : 現 재난발생 직전·후인 재난 대응범위 확장
- 지역별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도시 복합재난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위험관리, 상습 재난 발생·위험지역은 환경정비 계획 수립
- 지능형 국토방재기반 조성 :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지하공간지도 구축 등

(4)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 조성 : 건축물·교통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강화 : 국토 생태축(백두대간, 연안, DMZ 등) 보전·복구, 도시내 녹색인프라의 확충 및 생태축과의 연계 강화
- 오염·방치공간 재생 : 산업쇠퇴로 폐쇄되거나 저이용 지역의 생태자연화, 생활 기반시설 설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등 복원·재생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수자원 :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체계적인 수재해 대응체계 구축, 목적별 용수 수요량 재평가, 수변·수상 문화콘텐츠 등 이용 다양화
- 해양 자원 : 섬 잠재력 극대화와 해양영토의 지속적인 보호, 해양공간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호 등 생태계 조화 및 균형
- 산지 자원 : 파편화 방지와 복원, 친환경적 이용 등 문화공간화
- 에너지 자원 : 연료전지, 태양광 등 증가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효율적인 입지(갈등 최소화)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실현 등

□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

- 국토경관의 정체성 확보 : 산-강-바다의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한옥, 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경관의 복원·관리를 통한 정체성 확보
 -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경관품격 제고
- 도시품격 제고 : 공공건축가제도 확산을 통해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하고, 스카이라인 등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의 경관관리 추진
- 생활경관 향상 : 주거·교육·상업 등 일상생활 디자인을 개선하고, 횡단 보도, 벤치, 도로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 추진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해소

- 국가 간선망의 효율화 : 도로 단절구간 연결,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 공항 확충 등 네트워크 보완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
-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 GTX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심도 지하도로 추진
 - 광역버스 확대와 서비스 향상, 주요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 도로는 자율차와 개인용 이동수단, 철도는 하이퍼루프, 항공은 드론 등장에 대비한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노후 인프라 적기 개량과 유지관리 : 생애주기관리시스템 도입, 적기 투자를 통한 안전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고도화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 속도하향 정착(60→도심50·주택가30), 어린이·고령 보행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교통취약지역(농산어촌 등)의 수요응답형 교통 확산
-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 5G를 활용한 혼잡·사고 등 실시간 정보, 교통이용플랫폼의 통합(MaaS)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

□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물류산업 성장기반 마련 : 도심내 물류인프라 확충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마련, 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물류허브기능 강화 : 국제 공항·항만의 확충과 스마트화를 추진, 배후 지역의 기능 확대(저장→제조, 가공)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지능형 국토·도시 공간 조성

- 스마트시티 조성 :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성장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공간 구축
-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 토지·지하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 블록체인 도입 등 보안시스템 향상 및 기술 개발, 데이터 관리와 정보 개방 관련 법·제도를 정비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협력

- 교류협력의 단계적 이행 :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들은 남북 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 신경제구상 이행 :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 서해·동해 공동특구,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협력, 전문인력 교류와 산업표준화 등 여건에 따라 검토·추진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TCR, TMGR, TSR 등과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협력 확대
-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제고 : 신북방·신남방 정책,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수출 등 관문국가로서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17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77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123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177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249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329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목록

관리번호	세부실천계획 과제 목록	소관부처
1-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1-1-가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국토교통부
1-1-나	지역을 잇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국토교통부
1-1-다	시도간 협력을 통한 광역 협력권 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1-1-라	지역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관광분야)	문화체육관광부
1-1-마	남해안 경관도로 및 명품전망 공간 조성	국토교통부
1-1-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행	국토교통부
1-1-사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지역발전투자협약)	국토교통부
1-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1-2-가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국토교통부
1-2-나	지역경제 거점간 연계성 제고(철도 단절구간 연결 등)	국토교통부
1-2-다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혁신도시 건설)	국토교통부
1-2-라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행복도시·새만금·기업도시 건설)	국토교통부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1-3-가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1-3-나	농촌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1-3-다	산림자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촌 발전 유도	산림청
1-3-라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해양수산부
1-3-마	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활력 제고	해양수산부
1-3-바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부
1-3-사	접경지역·도서지역·특수상황지역 발전 지원	행정안전부

1-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관리번호	1-1-가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김민선 사무관 (044-201-3665)

□ 현황 및 문제점

- 저성장·인구감소가 새로운 표준으로 대두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토공간에도 전반적인 변화 예상
 - 특히,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수요 부족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자체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지역 고착화 우려
- * '18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가 0.5 미만)

□ 목표 및 추진전략

- 인구감소가 지역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기능의 압축(compact)과 연계(network)를 통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인접 시·군을 연계한 생활인프라 향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거점지역과 주변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 등을 연계한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도입방안 마련

지역을 잇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관리번호	1-1-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협조부서	기획재정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김 호 사무관 (044-201-3881)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 관광, 물류 등 지역 연계발전과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국토간선도로망의 선제적 구축이 필요함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16-'20) 계획」 상 국가간선도로망(7×9+6R)은 7,342km로, 고속국도(6,489km)와 자동차전용도로(853km)로 구성
 - (7×9+6R) 총 7,342km 중 4,921km(공용중), 983km(설계, 공사), 1,438km(장래)
 - (지역균형발전 고속도로) 총 776.9km 중 353.7km는 미착수 상태
 - * 성주-대구, 제천-영월, 강진-완도, 영덕-삼척, 무주-성주, 영월-태백, 태백-삼척
 - 전국 170개 시·군 중 20개 지자체는 고속도로 미구축

□ 목표 및 추진전략

-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등)과 하위계획(지역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등에 국가간선도로망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 현재 검토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1-'25) 계획」에 산업, 물류, 관광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신규노선 발굴 및 반영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20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규 및 확장 노선 적극 추진
 - 김해-밀양, 금천-대덕 등(9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노선 예타 추진
- ('21~'25년) 제2차 계획 수립 후 계획에 반영된 신설 및 확장노선에 대해 관계기관(도공, 관련지자체)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
- ('26년~) 국가간선도로망 상위계획(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장기계속, 총 751,761억원*
 - 공공 751,761억원(국비 329,763억원, 도공 421,998억원)
 - * 공사중인 노선 및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 상 수립된 총사업비 기준
 - * 현재 검토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수립 시 투자계획 변경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 고
투자계획	35,985	54,419	52,481	43,317	41,617	
국비	18,503	18,118	16,322	15,677	14,803	
도공	17,482	36,301	36,159	27,640	26,814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0~ 장기	329,763	-	421,998	-	751,761	
- 고속도로망 구축	'20~ 장기	329,763	-	421,998	-	751,761	

□ 기타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도공, 관련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시도간 협력을 통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관리번호	1-1-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협조부서	문체부, 국토부, 과기부
사업기간	(예정) 2022 ~ 2026 *현재 추진중인 협력사업 20년 종료	담당자	고건우 사무관 (044-203-4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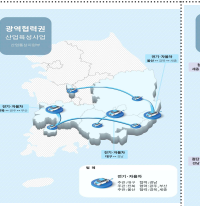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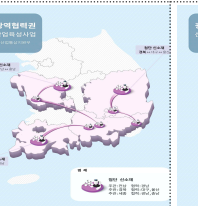

□ 추진현황

- (추진목적) 시도간 자율협력을 통해 구성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 유일의 시도간 협력R&D 사업으로 타 지역의 혁신자원(역량) 활용이 가능하며, 예타면제 결정('14.9월)되어 추진 중('15~'20)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원분야) (1단계) 주력산업 위주의 17개 프로젝트 지원('15~'17) → (2단계) 신산업 위주의 14개 프로젝트 지원('18~'20)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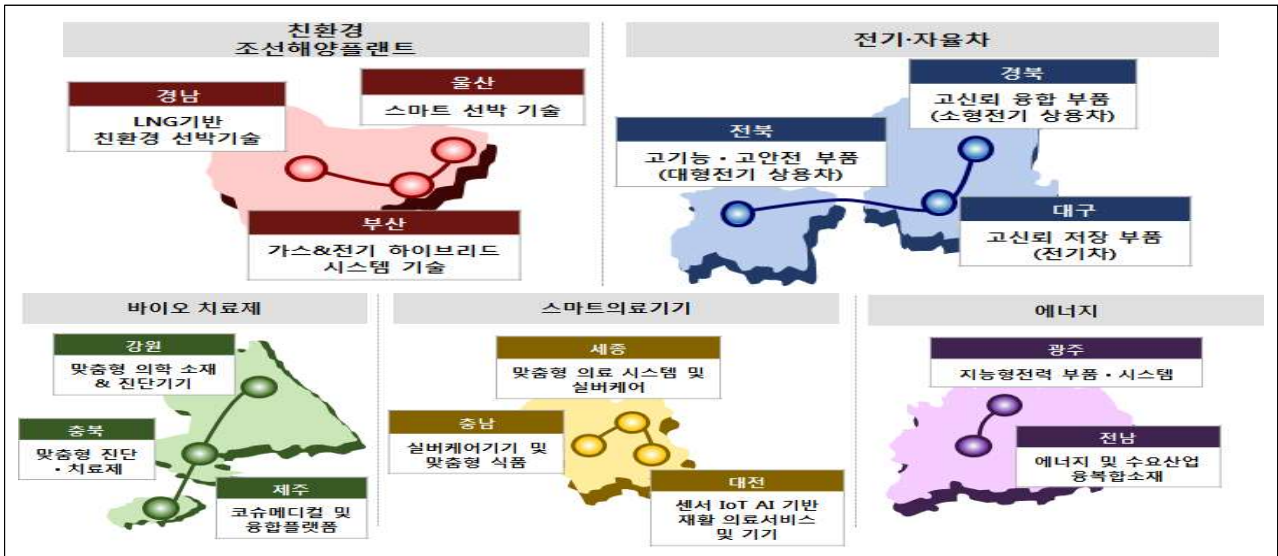
< 2단계 협력산업 현황 >

[바이오헬스]	[스마트·친환경선박]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차]	[첨단신소재]	[프리미엄소비재]
					
① 강원-대전 ② 충남-세종	③ 부산-전남 ④ 경남-울산	⑤ 광주-전북 ⑥ 대전-강원 ⑦ 충북-제주	⑧ 대구-경남 ⑨ 전북-광주-부산 ⑩ 울산-경북-세종	⑪ 전남-경남 ⑫ 경북-대구-울산 ⑬ 세종-경남-충남	⑭ 제주-충북-충남-전북

- (지원내용)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의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R&D)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예산현황) 총 5년간('15~'19) 국비 7,839억원 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후속 협력사업)

- (사업목적) 시도 경계를 넘어선 상생·협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협력산업 선정) 지역산업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주도로 5대 협력산업 선정



- (추진전략) ①국가중점 투자분야와 연계한 협력산업 선정 ②협력권 내 시도 산업역량을 고려한 협력모델 지원으로 차별화 추진 ③5대 협력산업 중심의 추진체계 개편(사업단 도입)으로 효율성 강화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총 9,806억원 지원 예정(국비 6,350, 지방비 2,592, 민자 864)
- 과기부 본 예타 통과 후 총 사업비 확정 예정

□ **기타 사항**

- 현재 예타 기획보고서 보완 중으로 '20년 2~3분기 신청 예정
- 예타 기술성평가 통과('19.4월) ⇨ 본예타 미시행('19.10월) ⇨ 총괄 보고서 보완('20.1월~) ⇨ 시도 기획보고서 보완 및 컨설팅('20.2월~) ⇨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조사('20.4월~)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관광분야)

관리번호	1-1-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협조부서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사업기간	2010 ~ 2028	담당자	장지원 사무관 (044-200-2897)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 중시 분위기 확산 등 국민 여행증가 추세의 관광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대두**
- 자연 친화형·정주형·콘텐츠형 관광자원개발 수요 확대 등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및 관광개발의 환경 변화**
- 관광시설노후화 및 문화관광콘텐츠 부족에 따른 **관광자원의 매력 상실 및 민간투자 부진** 등에 따른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 약화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목표 및 추진전략

- 대구경북권의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권의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DMZ 일원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평화관광벨트** 구축
-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동력 마련
- 충청유교문화권의 유교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충청유교 문화자원** 개발 및 지역관광 신규 자원 발굴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2020년 추진 계획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세계유교선비공원 조성 등 8개 사업 1,031억원 지원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등 11개 사업 58억원 지원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임진강 평화공원 등 10개 사업 92억원 지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등 21개 사업 199억원 지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등 17개 사업 120억원 지원

○ '21~'28년 : 미정

- ※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매년 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균특회계 사업인 관계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0년 ~ 28년(18년간), 총 40,261억원

- 공공 38,345억원(국비 20,768원, 지방비 17,577억원)
- 민간(민자) 1,91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0~2021(12년)
- 사업내용 : 총 57개 사업(관광개발사업 46개, 관광진흥사업 11개)
- 총사업비 : 2조 1,086억원 (국비 12,340 지방비 7,048, 민자 1,669)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사업기간 : 2013~2022년
- 사업내용 :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 총사업비 : 2,670억원(국비 1,199 지방비 1,448 민자 23)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사업기간 : 2013~2022년
- 사업내용 :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안보·역사 자원을 활용,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총사업비 : 2,391억원(국비 1,056 지방비 1,225 민자 110)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사업기간 : 2017~2026년
- 사업내용 :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 성장 동력 마련
- 총사업비 : 6,167억원(국비 2,626 지방비 3,456, 민자 85)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 사업기간 : 2019~2028년
- 사업내용 : 충청유교문화권의 유교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충청유교 문화자원 개발 및 지역관광 신규 자원 발굴
- 총사업비 : 7,947억원(국비 3,547 지방비 4,40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	'10~'28	20,768	17,577		1,916	40,261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10~'21	12,340	7,048		1,699	21,086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13~'22	1,199	1,448		23	2,670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3~'22	1,056	1,225		110	2,391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17~'26	2,626	3,456		85	6,167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19~'28	3,547	4,400			7,947	

남해안 경관도로 및 명품전망 공간 조성

관리번호	1-1-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협조부서	기재부, 문체부 등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담당자	박주영 사무관 (044-201-4549)

□ 현황 및 문제점

- 전남 고흥 ~ 경남 거제간 해안도로 575km 구간의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구상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중 경관이 우수한 지역 15개소 257.3km 구간을 선정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 *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웹사이트 구축, 홍보동영상 제작 등
 -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중에 경관이 우수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대표 전망공간 7개소를 선정하여 디자인 구상 등 사업시행방안 마련
 - * 기존 전망대 리모델링, 주차장 및 화장실, 전망 데크 시설, 지역특산품 판매 등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및 명품전망공간 조성 사업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후 사업예산 확보 필요
 -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해안내륙발전법 연장('20→'30)에 맞춰 2020년 내에 변경(고시)할 계획

□ 목표 및 추진전략

- 남해안 경관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관광객(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소규모 전망쉼터 조성 등 경관도로의 품격 향상 도모
 - * 고흥, 여수, 순천, 남해, 고흥, 통영, 거제 등 남해안 경관도로 주변 국공유지 활용

○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안 해안경관도로를 따라 가면서 쉬어갈 수 있는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 고흥, 여수, 통영, 거제지역의 명품 전망공간(총 4개소)* 사업화 추진

* 고흥 금의시비공원, 여수 갯가노을전망대, 통영 달아전망대, 거제 구조라전망대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해안경관도로 옆 소규모전망쉼터 조성(30개소 내외), 개방형가드레일 개선 등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각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명소, 체험공간 조성사업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명품전망공간(4개소)* 마련

* 고흥 금의시비공원 :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생산·판매시설 마련

* 여수 갯가노을전망대 : 사유지 매입 후 장척마을 내 갯벌체험 공간 마련

* 통영 달아전망대 : 달아마을 내 달아축제 개최

* 거제 구조라전망대 : 폐도부지 활용 등 전망대 내 지역민 소득창출방안 마련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4년(4년간), 총 192억원

- 공공 192억원(국비 96억원, 지방비 9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사 업 명	재원	연차별투자계획				
		2021	2022	2023	2024	합계
총계		18	143	15	16	192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개선	계	10	15	15	16	56
	국비	5	7.5	7.5	8	28
	지방비	5	7.5	7.5	8	28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계	8	128	-	-	136
	국비	4	64	-	-	68
	지방비	4	64	-	-	68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연계·협력지원기반구축	'21~'24	96	96	-	-	192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개선	'21~'24	28	28	-	-	56	
-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21~'22	68	68	-	-	136	

□ 기타 사항

-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 연장('20→'30)에 맞춰 2020년 내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 필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리번호	1-1-바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2025	담당자	천재민 서기관 (044-201-5046)

□ 현황 및 문제점

-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지자체장(광역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법정 계획* 수립
 - * 「광역교통법」 3조 및 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 제1차 광역교통기본계획('13~'20) 및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17~'20) 만료시기 도래로 인해 제2차 기본계획 및 제4차 시행계획 수립 필요
 -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 중장기 법정계획 간의 연계성, 정합성 향상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 계획('21~'40)' 수립(19.12) 이후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목표 및 추진전략

- (기본계획) 광역교통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방향 정립
 - 권역별 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지표 등 현황·전망에 대한 진단과 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하여 광역교통시설 지정의 근거를 명확화
 - 철도중심, 대중교통 운영 강화, 환승체계 개편 등 광역교통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광역교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 제시
 -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한 광역교통 미래상 제시
- (시행계획) 타당성 분석 등 이행 실효성 제고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철도, 도로, 환승시설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시행
- 지자체 건의사업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업 직접 발굴
- S-BRT, 환승센터 등 운영 관련 광역교통시설도 중점 검토
-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
 -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철도, BRT, 환승시설)의 국비·지방비에 대한 계획기간('21~'25) 내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추진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이행력 향상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2020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수립·고시('21.上)
 - *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연구” 용역 추진('19.5~)
- 2021~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 수립('21)과 집행 실적 등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21~'25)

□ 투자계획 : 해당없음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

관리번호	1-1-사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김민선 사무관 (044-201-3665)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역 지원사업은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이상이나, 부처 간 칸막이식·중앙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효율성 저하
 - 기초지자체별로 다수 부처가 추진하는 각각의 사업에 공모하여 다수의 사업들로 쪼개어 시행되면서 지역이 원하는 사업추진에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분권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의 지역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
 - 지자체 주도로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 후 부처-지자체 간 협의·조정 을 거쳐 수평적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의 확대 필요
- 지역발전투자협약은 '18년 균특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거쳐 '19년 11개 시범사업('19~'21, 총 1,000억원) 추진을 시작으로 최초 시행되었음
 - * 11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8개 道별 1개씩 8개, 세종·부산·광주 각1개)
: 서귀포, 거창·합천, 부산, 광주 광산구, 군산, 청주·증평, 세종, 의성, 완도, 강릉, 홍성
-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광역권 연계·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업 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확대하여 지역주도의 자립역량 제고 필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단일지자체-다부처’ 모델을 광역권으로 발전시켜 ‘다지자체-다부처’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 지역간 공동의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복수지역에 동일테마로 묶일 수 있는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간 협력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 계획이 수립된 지역공약 관련 사업 위주로 검토하되, 향후 지자체 수요에 맞게 추가 발굴 가능

< 광역권 대상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

- 동서통합권 : 구례·하동 등 다지자체 협력으로 전남-경남 동서통합지대 조성
- 가야문화권 : 백제·신라 문화권에 비해 미개발된 가야문화권(대구·경북·경남)을 계획적으로 개발·정비하여 관광명소로 발전
- 동해안권 : 고성·속초·강릉·동해 등 최근 낙후도가 심해지고 있는 동해안권을 대상으로 다지자체 협력 개발프로젝트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3,000억원
 - 3개 사업 × 사업당 500억원 국비 지원
 - 국비 1,500억원, 지방비 1,500억원 (매칭 5:5)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600억, '22년 600억, '23년 600억, '24년 600억, 25년 '600억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 지역발전투자협약	'21~'25	1,500	1,500	-	-	3,000	-

1-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관리번호	1-2-가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협조부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
사업기간	-	담당자	공두영 사무관 (044-201-3658)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집중 관리 필요

* 수도권 인구 집중도(%) : ('10) 49.2 → ('13) 49.4 → ('16) 49.5 → ('19) 50.0
 수도권 GRDP비중(%) : ('95) 48.2 → ('05) 48.9 → ('15) 50.1 → ('18) 51.8

- 교통·환경 등 관련 주민 삶의 질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도시권 간 경쟁심화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강화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관리를 통한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

⇒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환경보전과 관리,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 생활인프라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도약

⇒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수도권에 첨단산업 및 혁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 수립·운영

지역경제 거점간 연계성 제고(철도 단절구간 연결 등)

관리번호	1-2-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03 ~ 장기계속	담당자	천홍식 서기관(3953) 신용섭 사무관(3952)

□ 현황 및 문제점

- '20년까지 산·학·연이 정착하는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국토공간구조가 분산화되어 지역간 통행 수요 증가
 - 경부·호남 축을 제외한 내륙·해안지역은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기회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저성장시대 진입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관광 등을 활용한 지역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철도서비스 요구 증가

□ 목표 및 추진전략

- 전국 주요도시권 간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
 -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또는 지역경제 거점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류 가능
 - 고속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화 일반 철도(250km/h급)를 건설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도모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단절구간 연결) 문경~김천, 수서~광주 등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해 지역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열차운행 효율성을 향상 도모
- (고속화 일반철도) 이용자 편의 개선, 속도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0~250km/h급 준고속 철도로 일반철도 건설하고,

- 투자 효과 극대화, 열차운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중인 준고속 철도와 연계되는 기존노선 고속화도 병행 추진

* 선형개량 등 토목공사(고비용)보다는 궤도, 전력, 신호 등 시설물 개량을 통한 고속화(저비용)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03년 ~ 계속, 총 250,825억원

- 공공 250,825억원(국비 250,825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단절구간 연결(합계)	-	22,582				22,582	
- (수서~광주)*	미정(8년)	8,709				8,709	
- (문경~김천)*	미정(8년)	13,873				13,873	
준고속철도(합계)	-	228,243				228,243	
- (송산~홍성)	09~22	41,121				41,121	
- (울산~포항)	03~21	26,715				26,715	
- (포항~삼척)	02~22	34,173				34,173	
- (원주~제천)	03~21	11,775				11,775	
- (도담~영천)	10~22	41,160				41,160	
- (영천~신경주)	10~21	5,618				5,618	
- (이천~문경)	05~23	23,968				23,968	
- (익산~대야)	05~21	4,949				4,949	
- (춘천~속초)	16~27	22,840				22,840	
- (여주~원주)	14~23	5,299				5,299	
- (신창~대야)	18~22	8,229				8,229	
- (진주~광양)	18~21	2,396				2,396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타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확정 예정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혁신도시 건설)

관리번호	1-2-다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협조부서	문체부, 산업부
사업기간	'20 ~ 장기계속	담당자	최승욱 서기관 (044-201-4458)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경제 거점화) 공공기관 이전완료, '혁신도시 시즌2' 추진으로 혁신도시 정주인구 3.4배, 입주기업수 14.4배 증가 등 가시적 성과

* (정주인구, 만명) 5.9('14년) → 15.0('16년) → 19.3('18년) → 20.4('19년)

** (입주기업수, 개사) 99('14년) → 271('16년) → 693('18년) → 1,425('19년)

- 다만,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민간기업 집적 및 산·학·연 연계 등 지역 경제혁신 생태계 구축은 다소 미흡한 실정

* 클러스터 현황 : 계획 3,114천㎡, 분양 2,045천㎡(66%), 실입주 871천㎡(28%)

○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가 큰 상황

* 정주여건 만족도('17년) 평균 52.4점 : 교통 44.5점(최하위), 문화 45.2점

- 아울러,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확대도 필요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중이나, 혁신도시가 아닌 대전 등은 혜택을 받지 못 함

- 아울러, 좁은 지역인재 채용풀 및 지역학생들의 직장선택 폭 확대 등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범위의 광역화 필요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합의로 채용범위 광역화

- (상생발전) '혁신도시 시즌2' 등 혁신도시 개발 가속화에 따른 구도심의 상대적 쇠퇴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간 갈등 여지
 -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성과의 주변지역 확산 등 혁신도시 효과의 공유가 미흡하다는 시각

* (원도심→혁신도시 순유입 인구) ('12년 이전) 약 35천명, ('12년~'18년) 93천명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경제 거점화)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산학연 연계 구축 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창출** 도모

* 입주기업 수 : 1,425개('19년) → 2,000개('22년)

** 지역 일자리창출 : 15,076명('19년) → 23,000명('22년)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주요내용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기업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1개 과제

-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보육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타부처 정주시설 건립도 추진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대전·충청권을 계기로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추진

- 旣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추진하고, 광주·호남권 및 울산·경남 광역화도 추진

- (상생발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이 함께 협력·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新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잠재력 극대화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마다 공간적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상이한 특징을 고려해 혁신도시별 맞춤형 상생전략을 구상

* 혁신도시별 지형적 특성, 도시규모, 지역혁신 기반 및 특화발전 목표가 상이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역경제 거점화) 혁신도시 지역경제거점화를 위해 전략별로 추진

《 클러스터 활성화 》

- 클러스터 분양률('19년말 65.7%) 제고를 위해 기업수요에 맞게 부지규모를 조정*('20.3)하고 용지대금 납부기간 연장('20.6~) 추진

* LH 미분양용지(1,007천㎡)중 106천㎡ 분할분양, 잔여용지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할

- 입주업종 제한*완화('20.6 균형위 심의),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건축물 건립('20.下 선도사업 선정) 등 입주촉진 대책도 시행

* 주택, 종교시설, 숙박·수련·위락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장례식장 등

《 입주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

- 입주기업 시장확보를 위해 계약우대방안 마련('20.5),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 '20년은 공공기관별 자율목표제 도입, '21년은 우선구매 의무화 및 경영평가 반영

-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미래신산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20.6)

* '19년 강원, 광주·전남, 부산 지정, '20년은 부산(동삼지구) 스마트 해양관광 신청 예정

《 정주여건 개선 》

-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급('20.7~)

- 정주인프라(문화, 체육, 복지)와 스타트업·사회적기업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 혁신센터 10개소(혁신도시별 1개소) 건립 추진 ('18년~'21년)

《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주요 시설 》

구분	주요 시설
부산	▪ 전시·공연장, 문화강좌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창업공간, 카페, 어린이집 등
대구	▪ 교육·홍보전시실,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대학 산학협력센터, 기업입주 공간 등
광주전남	▪ 문화·여가시설(수영장, 육아지원시설, 문화교실, 동아리룸,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울산	▪ 체육·여가 시설(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 오픈형 카페, 유아놀이실 등)위주로 구성
강원	▪ 수영장, 문화센터, 북카페,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전시시설, 건강증진지원센터 등
충북	▪ 전반적인 생활인프라(창업·일자리지원센터, 실내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위주로 조성
전북	▪ 30~40대 맞벌이 거주자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학습정보실, 육아나눔지원센터, 북카페 등)위주로 조성
경북	▪ 도서관, 소공연장, 청년취·창업 센터, 실내체육시설, 보육시설, 행정지원시설 등
경남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실험·실습실, 전시실, 기업지원실, 지역홍보관, 보육시설 등
제주	▪ 체육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놀이방, 소규모 카페, 지역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 어린이 교육(체험, 진로, 관계 등)과 가족 휴게공간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지원**(‘21~’24년)
- 다양한 도시문제(에너지·교통·환경·안전 등) 해결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지원**
 - *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18년 전남, ’19년 전북·충북·경북, ’20년 충북 음성),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18년 충북) 선정지원
- 지자체 주도의 **시내교통 활성화 지원, 광역·거점교통 개선, PM*** 활용, **혁신도시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단계별 교통체계 구축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O2O)**** 등 **新모델 검토**
 - * PM : 개인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 ** O2O : 온라인 등을 통한 이동수요에 따른 배차시간 또는 노선이 탄력적인 교통

《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

- 산학연 공동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기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 내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추진**(’20.6)
- * ’19년 경남(항공우주 부품소재) 지정, ’20년 광주·전남(에너지밸리) 추진중
- 이전 공공기관의 기술·정보를 지역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산 공동활용 지침을 마련**(’20.9)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20년 강원, 광주·전남 구축예정인 지역물품 우선구매 플랫폼과 통합 구축

- 산학연 협력·사업기획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 재단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발전기금조성 의무화 근거 마련**(‘20.12)

* '19년 강원혁신도시 발전재단 기 설립, '22년까지 9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완료 예정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既이전기관 포함)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20.5), **균형위 심의**(‘20.8)

- **대전·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화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20.5), **광주·호남권 및 울산·경남 광역화 협의·법령 개정**(‘22)

- 혁신도시 인근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 발전 지원 및 상생발전의 기반 구축**

- (원도심 발전지원) 혁신도시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확대,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등 추진

*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형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 등을 통한 지속 발굴, 지역제품 우선구매 제도개선 및 농림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 (상생발전 기반구축)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발전 협의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구축** 등 추진

* 이전 공공기관, 모도시 및 인근지자체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축, 혁신도시별 적합한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사업 발굴

- (상생발전 확산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추진 주체간 소통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 국비지원** 추진

* 매년 자체에서 상생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 국토부는 상생협력 해당여부, 사업추진 필요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계속, 총 3,381억원

- 공공 3,394억원(국비 1,556억원, 지방비 1,838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복합혁신센터) ~'20 : 1,174억원(국비 587억), '21 : 1,203억원(국비 467억)
- (어린이 특화 생활SOC) '21 : 54.5억원(국비 27억), '22 : 291억원(국비 142억), '23 : 271억원(국비 133억)
- (상생발전 확산사업) '20~'40 : 매년 20억원(매년 국비 10억)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1,556	1,838			3,394	
- 복합혁신센터	'18~'21	1,054	1,323			2,377	
- 어린이 특화 생활SOC	'21~'24	302	315			617	
- 상생발전 확산사업	'21~'40	200	200			400	

※ 세부실천과제내의 단위사업별 사업기간 투자계획을 작성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행복도시·새만금·기업도시 건설)

【행복도시】

관리번호	1-2-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행 복 청 (기획재정담당관)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07~2030	담당자	김봉길 사무관(201-3686) 조인하 사무관(200-3060)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과밀 현상은 여전하고, 지방소멸 등 문제도 가시화되어 균형 발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추진 중
 - '20년은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2단계 건설 사업 평가 및 3단계 발전방향 제시 등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 필요
 - '20년은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향후 행정 중심 및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준비 필요
 - 또한, 행복도시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충청권 인구 과도한 유입현상* 등을 감안하여 세종시만의 발전이 아닌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역할도 필요
- * 인구 유입('19년 22만명) : 수도권 5.6만명(26%), 충청권 13.8만명(63%), 기타 2.5만명(11%)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복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
- * (1단계) 초기활력단계, '07~'15, 15만,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16~'20, 30만, (3단계) 완성단계, '21~'30, 50만

○ 추진전략

- (1단계) 중앙행정기능 이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 (2단계) 대학/연구 등 자족기능 유치 및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향상
- (3단계)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 완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가행정중심도시 기능 강화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22),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1생) 조성('23), 국제기구 추가 유치*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스마트 행정도시로 조성
- *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21 입주) 등 국제기구 지원방안 마련

○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기업 유치 활성화

- 대학재정 부담완화, 산학연 융합효과 극대화 등을 통한 국내외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해 공동캠퍼스 본격 조성('24년 개교)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지원('22 준공예정), 창업·벤처기업, 공공·연구기관 유치* 등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추진
- * 민·관 지식산업센터에 미래차 연구센터, 카이스트 지능형바이오시스템 연구단, 바이오헬스 활성소재 실증센터, 관련 기업 등 입주 추진

○ 지역과 상생하는 광역발전 선도모델 구축

-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 * 국토연구원 및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연구('19.4~'20.12, 18억원)
- 상생발전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10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공동협력 추진

< 10대 선도사업 >

- ▼ (산업과학) ①오송(BT)·천안(IT)·대전(R&D)·세종(자율주행) 연계 첨단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
- ▼ (문화관광) ②충청권 통합관광프로그램 개발
- ▼ (대중교통) ③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도입, ④청주국제공항 광역버스 노선확대 및 ⑤시외버스 노선 증차
- ▼ (광역시설) ⑥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⑦행복도시~내포신도시 연결도로, ⑧행복도시~공주 탄천 연결도로 건설
⑨충청권 광역철도, ⑩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 상생협력의 실질적 정책결정 및 현안조정을 위해 추진체계 정비

*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위상 강화, 경제산업·문화관광·광역교통 등 분야별 협의회 신설 운영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07년 ~ '30년(25년 간), 총 225,000억원

- 공공 225,000억원(정부 85,000억원, 사업시행자(LH) 140,0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부	85,000	58,509	5,674	4,674	6,337	5,583	4,223
사업 시행자	140,000	104,000	7,500	7,500	7,500	7,500	6,00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종시 건설	'07~'30	85,000	-	140,000		225,000	

[새만금]

관리번호	1-2-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협조부서	국조실, 농림부, 환경부, 산업부
사업기간	'11년 ~ 계속	담당자	김영지 사무관(044-201-3689) 유지원 사무관(063-733-1127)

□ 현황 및 문제점

- 새만금사업은 '91. 10월 방조제 착공 후 현재 29년이 경과되었으나, 전체 계획면적(291km)의 38.2%(111.1km) 조성 중이며, 완료면적은 12.7%에 불과
 - * 산업연구(매립중 2.1km², 매립완료 6.2km²), 관광레저(매립완료 6.3km²), 농생명(매립중 66.3km², 매립완료 15.1km²), 환경생태(매립중 0.8km²), 기타(매립중 4.9km², 매립완료 9.3km²)
- 동서·남북도로 외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광역기반시설(공항, 항만, 철도) 조기 구축 필요, 숙박시설·요식업 등 관광인프라 조성 미흡
 - *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8.9)

□ 목표 및 추진전략(새만금 기본계획('14.9) 기준)

- (용지조성) 1단계('20년까지)에서 총개발면적의 72.7%, 2단계('21년 이후) 27.3% 개발
- (기반시설) 2020년까지 신항만 및 배후단지 일부(4선석)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및 동서·남북도로 완료

< 기반시설의 단계별 개발규모 >

구 분		계	1단계	2단계
기 반 시 설	신항만 및 배후단지	18선석(488만 m ²)	4선석(52.4만 m ²)	14선석(435.6만 m ²)
	새만금~전주고속도로	54.3km(4차선)	54.3km	-
	새만금~군산(대야) 복선전철	45km	-	45km
	동서 1축 도로	23.0km(6→10차로)	-	23.0km(6→10차로)
	동서 2축 도로	19.8km(6차선)	19.8km(4차선)	19.8km(2차선)
	동서 3축 도로	공사중	-	-
	남북 1축 도로	완공	-	-
	남북 2축 도로	26.7km(6~8차선)	26.7km(6~8차선)	-
	남북 3축 도로	27.2km	-	27.2km
	순환링 교량	6.5km	-	6.5km
	용수공급시설	51.9만 m ³ /일 송수로 등	51.9만 m ³ /일 송수로 등	-

주) 남북2축 및 동서2축도로는 2020년까지 우선공급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용지조성) 1단계(2020년까지)에서 총 개발면적의 72.7%, 2단계에서 27.3% 개발

-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용지는 2020년까지 개발목표

- 농생명용지 중 농업용지((구)농업용지), 산업·연구용지 북측지역((구)산업용지), 농촌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중 신시~야미용지((구)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방수시설물 등의 경우 1단계 100% 개발 완료

- 기타용지는 투자수요와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① (산업연구용지) 산업연구용지중 산업단지(18.5km²)는 9개 공구로 분할하여 사업추진, 기착수 공구(1·2·5·6)는 농공이 '23년까지 완료하고, 미착수 공구(3·4·7·8·9)는 사업성 개선 등 개발동력 확보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 1공구(1.84km²) 및 2공구(2.55km²) 매립·조성 완료, 5공구(1.81km²) 매립 완료, 6공구(1.9km²) 매립 중(91%)

⇒ 총사업비 25,498억중 7,063억원 투입(27.7%)

② (관광레저용지) 창의적 문화와 풍요로운 수변, 즐거움과 여유 있는 삶을 향유하는 명품수변 관광단지 개발

*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입지('10.1) 및 신시야미용지 선도사업 가시화('21.下 착공), 나머지 용지는 사업시행자 유치 지속 추진

③ (환경생태용지) 새만금을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질 정화 습지, 수변·완충녹지, 생태체험장, 관찰대 설치 등 생태환경용지 조성

*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0.81km²) 발주('17.下), 나머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예정('21~)

④ (국제협력용지) 국제협력, 국제업무기능, 산업·물류, 문화·관광기능 등의 복합적 개발을 추진하여 새만금을 상징하는 거점중심지역으로 조성

* 국제협력용지를 선도지구(6.6km²)를 연내 착공하여 '24년까지 조성

⑤ (배후도시용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 추진('21~)

○ (기반시설 구축)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한 십(十)자형 간선도로망 및 교통물류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광역기반시설 구축 추진

① (도로) 새만금 내부 접근로 제공 및 내부개발 여건 개선을 위한 십(十)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 이내 접근 가능

* (동서도로) '19년까지 공정률 89.1% 달성, '20년 완공 추진

* (남북도로) 1단계는 '19년까지 공정률 43.9% 달성, '22년 완공 추진
2단계는 '19년까지 공정률 20.8% 달성, '23년 완공 추진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8년 8개 공구 착공, '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

② (기타) 신항만·공항·철도 등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건설

* (신항만) 9선석 계획(1단계 '30년까지 6선석, 2단계 '40년까지 3선석 건설)

* (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완료('18.7~'19.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에 포함(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9.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KDI, '19.3~11)

*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완료('18.5~'19.5)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9.12)

* (상수도) 총사업비 253억원(옥구 34천㎡, 장신 5천㎡ / '19~'24년)

□ 투자계획(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22.19조원

- 2020년까지 13.20조원(59.5%), 2021년 이후 8.99조원(40.5%)

① 공공 11.86조원(국비 10.91조원, 지방비 0.95조원)

② 민자 10.33조원

* (항목별) 용지조성비 10.91조원(49.2%), 기반시설 설치비 6.64조원 (29.9%), 수질개선대책비 2.89조원(13.0%), 기타사업비 1.75조원(7.9%)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조원)

구분	총사업비				1단계 계획(20년까지)				2단계 계획(21년부터)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22.19	10.91	0.95	10.33	13.20	7.16	0.65	5.39	8.99	3.75	0.31	4.94
1. 용지조성비	10.91	3.43	0.00	7.48	6.62	2.99	0.00	3.63	4.30	0.44	0.00	3.85
1-1 산업연구용지	2.64	0.00	0.00	2.64	1.51	0.00	0.00	1.51	1.13	0.00	0.00	1.13
1-2 농생명용지	3.24	2.70	0.00	0.54	2.70	2.70	0.00	0.00	0.54	0.00	0.00	0.54
1.3 국제협력용지	2.27	0.00	0.00	2.27	1.35	0.00	0.00	1.35	0.91	0.00	0.00	0.91
1-4 관광레저용지	1.56	0.10	0.00	1.46	0.87	0.10	0.00	0.77	0.69	0.00	0.00	0.69
1-5 환경생태용지	0.63	0.63	0.00	0.00	0.19	0.19	0.00	0.00	0.44	0.44	0.00	0.00
1-6 배후도시용지	0.58	0.00	0.00	0.58	0.00	0.00	0.00	0.00	0.58	0.00	0.00	0.58
2. 기반조성비	6.64	5.03	0.00	1.61	2.80	2.07	0.00	0.73	3.84	2.96	0.00	0.88
2-1. 신항만	2.55	1.41	0.00	1.14	1.05	0.80	0.00	0.26	1.49	0.61	0.00	0.88
2-2. 간선도로망	1.90	1.90	0.00	0.00	0.96	0.96	0.00	0.00	0.94	0.94	0.00	0.00
2-3. 연계교통망	1.86	1.63	0.00	0.22	0.45	0.22	0.00	0.22	1.41	1.41	0.00	0.00
2-4. 생활-공업용수	0.34	0.09	0.00	0.25	0.34	0.09	0.00	0.25	0.00	0.00	0.00	0.00
2-5. 기타사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수질개선비	2.89	2.08	0.65	0.16	2.89	2.08	0.65	0.16	0.00	0.00	0.00	0.00
4. 기타사업비	1.75	0.37	0.31	1.07	0.90	0.02	0.00	0.87	0.85	0.35	0.31	0.20

【기업도시】

관리번호	1-2-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협조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간	2006 ~ 장기계속	담당자	강명준 주무관 044-201-3691 김명순 사무관 044-203-2896

□ 현황 및 문제점

- (태안기업도시) '07.10 착공(공정률 47.7%, '20.2), 골프장 4개소 · 관광숙박 시설 · 화훼보전화센터 입주, 연구시설 2개소 공사중
- (영암 · 해남기업도시)
 - (구성지구) '13.2 착공(공정률 26%, '20.2) '17.8 공유수면매립지 준공, 태양광 발전 운영중, 골프장(18홀) 공사중('21완료), 동측진입도로 공사 중('21완료)
 - (삼호지구) '14.6 착공(공정률 13.7%, '20.2), '18.7 공유수면매립지 준공, '19.10 골프장(2개, 27+18홀) 개장
 - (삼포지구) '10.10 개발계획 승인, '11.9 1단계 F1경기장 준공하여 운영중
- 충주기업도시('12.12)는 준공, 원주기업도시('19.9)는 준공서류 제출 완료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공공주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산업 · 관광 · 문화 등 복합기능의 지역성장거점으로 개발

- 종전에는 주된 기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유형 통합**(기업도시법 개정, '15.6)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충주·원주), 관광레저형(태안·영암해남)

- (추진전략)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계획 대비 추진이 부진한 영암·해남 중점 관리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토부) 기업도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

-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조성을 유도

* ('16년 제도개선 사항)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7년 제도개선 사항) 기업도시 관련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 요청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문체부) 태안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영암·해남은 골프장, 도로 등 주요시설공사 추진

- (태안) 투자유치에 용이한 사업변경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활성화 도모

- (영암·해남 구성지구) 골프장 등 주요시설공사 추진

- (영암·해남 삼호지구) 개발구역내 서측진입도로 준공 및 1단계 사업 준공 예정('20.7),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연계도로 착공('20.10), 골프코스 3번(18홀) 및 단독주택 기반공사 착공('20.4), 2단계 종합개발계획 재수립중

□ 투자계획(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08년 ~ 22년(15년간), 총사업비 4,626억원

- 공공 4,626억원(국비 2,257.5억원, 지방비 2,368.5억원)

*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는 기업도시별 주진입도로 건설비 중 50%를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국토부 지원사업은 완료, 문체부 지원사업(태안, 영암·해남)은 진행중

(단위: 억원)

구분		'20년까지 누계	'21년	'22	'23	'24	'25	비고
국토부	총계	864	-	-	-	-	-	
	원주	578	-	-	-	-	-	'16년 사업완료
	충주	286	-	-	-	-	-	'12년 사업완료
문체부	총계	2,959	680	123	-	-	-	
	태안	646	100	123	-	-	-	
	영암·해남	2,313	580	-	-	-	-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08~'22	2,257.5	2,368.5		4,626	
- 원주기업도시	'09~'16	289	289		578	완료
- 충주기업도시	'09~'12	143	143		286	완료
- 태안기업도시	'08~'22	379	490		869	
- 영암·해남기업도시	'13~'21	1446.5	1,446.5		2,893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관리번호	1-3-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협조부서	국토부
사업기간	'20 ~ 장기계속	담당자	김재경 서기관 (044-201-1516)

□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지향의 국토정책)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은 '개발'에서 '관리' 중심으로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
 -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도시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방 특히, 농촌 지역으로 분산 및 동반 성장이 중요
- (농촌현실) 인구감소·노령화 등으로 소멸위험 지역이 늘어나며 공동화로 인한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생활사막'도 증가
 - * 소멸위험 읍면동 수 : '13년 1,299곳 → '18년 1,503곳
 - ** '18년 고령화율(전년 대비) : 동 13.1%(0.6%p↑) < 읍 15.9(0.4) < 면 29.5(0.9)
 - 주거지와 공장 등의 무질서한 혼재, 농업진흥지역내 축사 등 생산시설 난립 등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문제 노출
 - 반면, 삶의 질,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귀농귀촌·농촌 관광 증가 등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
 - * 귀농귀촌 교육 실적 : ('15) 5,061명 → ('17) 8,182 → ('19) 10,146
 - ** 귀농귀촌 상담·홈페이지 회원 : ('15) 10,076명 → ('17) 21,657 → ('19) 36,384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 이용 등 중장기 국토관리 차원에서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 및 살기 좋은 농촌 구현
- (추진전략) 도시계획 수준의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등 제도를 개편·보완하고 관련 투자도 제도와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용 강구(국토부 협조)
-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실증연구**(‘20년 9개소) 후, 시범사업 실시(‘21)
 - * ‘21년 4개소(시범사업) 후 ‘22년부터 매년 5개소씩 추진(~’35년, 74개소)
 - **(농촌협약)** 제도와 연계하여 정부·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농촌협약**’을 활용,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투자 방식 효율화**
 - **(패키지 지원)** 농촌형 생활 SOC,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지역자원 활용 및 농업·농촌으로 인구 유치 등 관련 사업의 패키지화 검토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14,306억원
 - 공공 14,306억원(국비 7,153억원, 지방비 7,153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3,306억원
 - (‘21) 88억원, (‘22) 374, (‘23) 710, (‘24) 1,034, (‘25) 1,10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7,153	7,153	-	-	14,306	
-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21~’35	7,153	7,153	-	-	14,306	

농촌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

관리번호	1-3-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협조부서	산업부, 기재부, 균형위
사업기간	2020~계속	담당자	배민식 사무관 (044-201-1554)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의 기회) 국토균형개발 촉진, 농촌지역 인구 유입 등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정주여건과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
 - 국토종합계획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워라밸, 반농반X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으로 농촌을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전망
- (농촌 서비스 부족) 농촌지역은 생활 SOC 부족, 교육·문화 등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 발생
 -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18) 수 : 도시 1,184개소, 도농복합시 743, 군 593
 - 최근 귀농귀촌, 청년농 증가 등으로 농촌인구는 증가추세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부족하며 비농업분야의 안정적인 소득원 부족
 - * 농촌 인구 : ('00) 9,381천명 → ('10) 8,735 → ('15) 9,392 → ('18) 9,714
 - ** 귀농가구 26%, 귀촌가구 21%('18 기준 7,206가구 추정)가 임시거주 시설 활용('19년 실태조사)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농촌 거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새로운 유입인구의 정착을 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정주 여건 구축
- (추진전략) 사회적 농장 확대 및 농촌생활 SOC를 정비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선순환 체계도 구축

- ① (삶의 질 제고) 사회적 농장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 ② (정주여건 개선) 365생활권 구축, 교통서비스 지원 등 정주여건 및 서비스체계 구축 지원
- ③ (비즈니스 혁신) 로컬푸드, 융복합산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삶의질 제고) 사회적 농장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 지원 등 농촌주민 삶의질 제고
 - (사회적 농장)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및 거점농장 육성
 - * 사회적 농장 개소수(누적) : ('21) 50개소 → ('22) 70 → ('23~'25) 100
 - ** 거점농장 개소수(누적) : ('21) 7개소 → ('22~'25) 9
 - (의료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응급처치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
 - * 건강보험료 지원(누계) : ('21) 305천세대 → ('22) 710 → ('23) 1,015 → ('24) 1,420 → ('25) 1,725
 - ** 응급처치 전문인력(누계) : ('21) 1천명 → ('22) 2 → ('23) 3 → ('24) 4 → ('25) 5
 -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누계) : ('21) 17천명 → ('22) 34 → ('23) 51 → ('24) 68 → ('25) 85
- (정주여건 개선) 농촌지역의 공간 특성에 맞는 농촌형 생활SOC 거점 구축 및 배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 (생활SOC)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교육·문화·보건 등 서비스 기능이 복합된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조성
 - * 개소수(누적) : ('21) 381개소 → ('22) 451 → ('23) 521 → ('24) 591 → ('25) 661
 - ** 개소수(누적) : ('21) 797개소 → ('22) 900 → ('23) 990 → ('24) 1080 → ('25) 1170
 - (교통서비스) 교통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택시·버스 등) 지원(매년 82개군)
 - (정착지원) 귀농·귀촌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의 집(매년 70개)을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촌 청년보금자리*(매년 4개) 조성
 - * 개소수(누적) : ('21) 8개소 → ('22) 12 → ('23) 16 → ('24) 20 → ('25) 24
- (비즈니스 혁신) 지역 생산·소비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태양광 지원, 노후농공단지 재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농촌융복합)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구축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 지구 구축(누적): ('21) 32개소 → ('22) 36 → ('23) 40 → ('24) 44 → ('25) 48

** 개소수(누적) : ('18) 10개소 → ('19) 30 → ('20) 60 → ('21) 80 → ('25) 100

- (농촌관광) 농촌 체험마을뿐 아니라 농업유산·찾아가는 양조장 등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추진

*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 ('20) 27개소 → ('25) 75개소

- (농공단지) 노후농공단지를 창업·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20년)하고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21년) 추진

* '21년 ~ '25년까지 675억원(15개소), '40년까지 2,700억원(60개소)

** '22년 ~ '25년까지 80억원(80개소), '40년까지 380억원(380개소)

- (농촌태양광) 농촌 태양광의 계획입지를 위해 사업지구에 계통연계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21년) 및 지원 확대 추진

* 계획입지(누적) : ('21) 2개소 → ('22) 6 → ('23) 10 → ('24) 14 → ('25) 18

- (유희시설) 농촌 유희시설을 개조하여 청년·영농인·협동조합 등 에게 창업 및 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매년 20개소 조성)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330,916억원

- 공공 327,887억원(국비 235,363억원, 지방비 92,524억원)

- 민간(민자) 3,09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56,559억원

- ('21) 11,298억원, ('22) 11,828, ('23) 11,475, ('24) 11,085, ('25) 10,874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35,363	92,524	-	3,099	330,916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21~'40	1,056	452	-	-	1,508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1~'40	30,540	-	-	-	30,540	
-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	'21~'40	40	-	-	-	40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21~'40	100	-	-	40	140	
- 농촌 365생활권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	'21~'40	159,880	68,520	-	-	228,400	
- 농촌형교통 모델(자율)	'21~'25	1,845	1,845	-	-	3,690	
- 지역행복생활권	'21~'40	29,040	12,446	-	-	41,486	
- 귀농인의 집	'21~'25	70	70	-	-	70	
- 청년농촌보금자리	'21~'25	650	650	-	-	1,300	
- 로컬푸드 확대	'21~'40	3,735	3,165	-	2,864	9,764	
- 농촌융복합산업	'21~'25	70	70	-	-	140	
- 신활력플러스	'21~'25	3,871	1,659	-	-	5,530	
- 농촌관광활성화	'21~'40	252	156	-	96	504	
- 농공단지 재생사업	'21~'40	2,700	2,700	-	-	5,400	
- 휴폐업공장 대체입주 지원	'22~'40	380	380	-	-	760	
- 농촌태양광 계획입지지원	'21~'40	156	67	-	-	223	
-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40	439	231	-	99	769	
- 기후변화 실태 조사	'21~'40	426	-	-	-	426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21~'25	113	113	-	-	226	

□ 기타 사항

- (농촌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형 FIT 적용 및 계통연계 우선 지원 등 제도개선(산업부, 한전 협조) 필요
- (지역행복생활권)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여건변화에 따라 '취약지역'의 기준 등 사업개편 필요(균형위, 기재부 협조)

산림자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촌발전유도

관리번호	1-3-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9 ~ 장기계속	담당자	조진호 사무관 (042-481-1815)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산촌은 인구가 과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
 - 산촌인구 141만명(19년 기준), 전국의 2.6%, 산촌 고령화율(65세 이상) 31.4%
- 산촌 내 국·공유림(산림자원)과 유·무형의 지역 자산(경관·휴양자원)은 산촌의 특화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필요
- 최근 귀산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촌의 활력증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 역할 기대

□ 목표 및 추진전략

- 산촌의 다양한 주체·조직간 소통협력과 지역내 유·무형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일자리 등 지역 혁신성장 유도
 - 차별화된 산림자원의 활용방안 발굴을 바탕으로 자원 중심의 공간 연계와 이해관계자의 협력구조를 통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 귀산촌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인적자원 발굴, 주민참여 사업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으로 지역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산촌의 사회적 경제 실현체계 구축으로 산촌 활력 제고
 - 협력거버넌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지역협의체가 추진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자문위원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 산촌 지역자원, 산림(국·공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지원
 - * 산림 및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계획하고 지자체, 주민 등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으로 지역공동체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장밀착 지원
 - * 지역공동체(누적수) : ('18) 28개 → ('20) 183개 → ('25) 250개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 * 연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발굴→육성→성장지원) 맞춤형 컨설팅 진행
- 귀산촌 정착 지원 강화
 -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 *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 : ('20~'25) 매년 180억원
 - 귀산촌 희망자의 단계 및 성향에 따라 목적·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시행
 - * 1단계(관심) → 2단계(체험) → 3단계(정착) → 4단계(보수), 연간 2,650명 교육지원
 - 국·공유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거주민의 소득창출 지원
 - * 폐교 리모델링, 산림텃밭 등 임산물 생산기반, 공유림 활용 기반시설 조성 등 공유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지역 특화사업 지원
 -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여 전문가(산림·관광·문화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 구성으로 숲여행 콘텐츠 개발·운영
 - * 덕유산 가문비숲(무주 산골영화제), 대관령 금강송숲(강릉 단오제·커피축제) 등

- ICT 기반 산림복지·관광 분야 통합플랫폼 구축과 헬스케어 기술 확대
 -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산림복지·관광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복지·관광 통합예약 플랫폼 구축(3년 62억원)
 - * 자연휴양림 통합예약플랫폼('18~'20. 63억원)의 2단계 사업으로 전국의 산림복지시스템 통합
 -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국민생활편익 증진 및 관광산업화 유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5,873억원(공공)
- 연차별 투자계획
 - ('21~'25) 연도별 투자계획 : 1,423억원(공공)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합계	'21	'22	'23	'24	'25
계	1,423	285	285	285	284	284
산촌활성화지원	523	105	105	105	104	104
- (산촌진흥)	144	29	29	29	29	28
- (귀산촌지원)	86	17	17	17	17	18
- (산림일자리창업지원)	293	59	59	59	58	58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금)	900	180	180	180	180	180
- (귀산촌인창업자금)	900	180	180	180	180	180

※국비 기준

- ('26 ~ '40) 전체 투자계획 : 4,450억원(공공)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계		4,316	134	-	-	4,450	
산촌활성화지원		1,616	134	-	-	1,750	
- (산촌진흥)	'26~'40	467	134	-	-	601	
- (귀산촌지원)	'26~'40	272	-	-	-	272	
- (산림일자리창업지원)	'26~'40	877	-	-	-	877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금)		2,700	-	-	-	2,700	
- (귀산촌인창업자금)	'26~'40	2,700	-	-	-	2,700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관리번호	1-3-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협조부서	문체부
사업기간	중장기(계속)	담당자	안준영 사무관 (044-200-5251)

□ 현황 및 문제점

- 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30년에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The Ocean Economy in 2030(2016, OECD), 전세계 기준

- 삶의 질 중시, 다양한 여가활동 관심 증대 및 연안 휴식 공간*, 수상·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18. KMI 조사) 증가에 맞춰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

* 연1회 이상 방문 87.3%, 목적: 기분전환·일상탈출/심신안정·휴식(69.7%/18.3%)

** 향후 희망활동: 수상·수중레저(29.8%)/휴식·경관감상(21.5%)

□ 목표 및 추진전략

-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통합·연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23)에 따라 해양관광 육성 추진

*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발표('19.5)

- 해양레저관광 거점·마리나 비즈센터·해양치유센터 등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및 신산업 육성

* 해양레저관광 거점 5개소,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해양치유센터 4개소, 청소년해양교육원 2개소 등 추진 중(총 사업비 약 4,550억 소요 예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
 - (권역화) 우리나라 해안선 U자 라인을 따라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7개 권역*으로 구분(19.5,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 *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힐링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해양레저관광 거점) 권역별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거점으로 조성하여 권역별 중심 플랫폼으로 활용(국비 50%, 지방비 50%)
- 해양치유, 마리나, 수중레저 등 해양관광 핵심 신산업 육성
 -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해양치유 자원법」 시행(21.2.) 대비 제도적·산업적 기반마련* 추진
 - * 하위법령 마련,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운영, 해양치유센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 (마리나, 수중레저) 마리나선박 정비업·정비사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 수립,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 수중레저 활동자 안전 수준 제고 및 건전한 수중레저 활동 기반 마련, 전국 주요 연안에 거점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마리나 산업과 수중레저 활성화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년(4년간), 총 5,525억원
 - 공공 5,525억원(국비 2,784.5억원, 지방비 2,740.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국비)

- '21년 3개 사업(599억원), '22년 3개 사업(787억원), '23년 3개 사업(628억원), '24년 3개 실천과제(174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해양관광육성사업	'20~'24 (계속)	2784.5	2,740.5	-	-	5,525	
- (해양관광인프라조성사업)	'20~'24	2,606.5	2,606.5	-	-	5,213	
- (해양관광콘텐츠 활성화)	'20~'24	48	28	-	-	76	
- (레저스포츠 활성화)	'20~'24	130	106	-	-	236	

□ 기타 사항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경제관계장관회의, '19.5)과 연동

어촌뉴딜 300을 통한 어촌활력 제고

관리번호	1-3-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어촌어항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19~2040	담당자	남우진 서기관 (044-200-6174) 한정수 사무관 (044-200-5659)

□ 현황 및 문제점

- 어촌은 낙후된 어항 기반시설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
 - '19년도부터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300을 본격 추진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구축 및 새로운 활력 제고
 - 현재 190개소*('19년 70, '20년 120)에서 뉴딜사업을 시행 중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낙후된 어항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개발 추진
- * 부산 5, 인천 10, 울산 3, 경기 6, 충남 20, 전남 63, 전북 14, 경남 38, 경북 16, 강원 7, 제주 8

□ 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	---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 '22년까지 30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24년까지 완료(3개년 사업)하여 어촌 개발 및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 * '19년 70개소, '20년 120개소, '21~'22년 110개소
 - '25년부터는 어촌의 지속적인 재생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 지속 추진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등
-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존주민과 귀어·귀촌인 등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漁울림마을**** 육성
 - * 연안 31개 시·군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 추진('17년~)
 - ** 漁울림마을 발굴(총 20개소) : ('19) 5 → ('20) 5 → ('21) 5 → ('22) 5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40년(5년간), 약 4조 2,860억원
 - 공공 약 3조원(국비 약 30,000억원, 지방비 12,860억원)
 - * 단,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활력 제고(합계)	'19~'40	30,000	12,860	-	-	42,860	
- 어촌뉴딜300	'19~'24	21,000	9,000	-	-	30,000	-
- 일반농산어촌개발	'21~'25	2,250	965	-	-	3,215	
	'26~'40	6,750	2,895	-	-	9,645	

□ 기타 사항

- 일반농산어촌개발 과제는 균형위(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과제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리번호	1-3-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2023	담당자	진승준 사무관 (044-200-5673)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성과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을 일부 마련하였으나, 아직 태동기 단계로 산업여건 미성숙
 - * 396개 해양바이오 기업 중 34.7%가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 업체로 연구개발 자금, 전문인력, 연구장비 등 산업화 촉진 인프라 부족
- 해양바이오에 특화된 장비, 시제품 제작·상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산업화 성과가 미흡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산업화 지원에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구축하여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업·인력양성 기관을 집적하여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생물 책임기관), 대학(군산대, 전북대), 산업단지(장항생태단지)와 입주기업을 집적하여 시너지 창출
- 인큐베이터를 통해 해양바이오에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 (인프라) 장비지원(시험분석/인증), 시제품 제작, 입주공간 제공 등
 - (인력·네트워크) 산업계 수요가 높은 실습중심 교육과정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학교·공공연구원 간 공동연구개발로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 해양바이오 기업의 기술 및 특허 인증을 지원하고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제고 도모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해양바이오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사업화 촉진기반 마련
 - 실시설계('20년)를 통해 인큐베이터를 건립('21~'23)하고 입주기업 지원 및 시제품제작·장비 등 서비스를 제공('24~)하여 기업 유치
 - 인큐베이터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장기적으로 해역별(서해 : 갯벌, 남해 : 해조류, 동해 : 어족자원)로 특화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검토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3년(4년간), 총 347억원
 - 공공 347억원(국비 173억원, 지방비 173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합계)	'20~'23	173	173	-	-	347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	'20~'23	173	173	-	-	347	-

접경지역·도서지역·특수상황 지역 발전 지원

관리번호	1-3-사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협조부서	국토교통부
사업기간	2017 ~ 장기계속	담당자	임민태 사무관 (044-205-3508)

□ 현황 및 문제점

-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규제*와 취약한 인구구조**로 인해 지역발전 정체

*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면적은 행정면적의 210%

** 접경지역 생산연령인구비율 68.6%(전국73.1%), 고령인구비율 18.8%(전국13.2%)

- (도서지역) 해양영토 확보, 경제성장 동력, 삶의 터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생활여건 열악

- 유인도서 수는 매년 감소 추세*, 도서주민 삶의 질 만족도(2015년) 6.52점으로 전국평균 6.86점을 하회

* 유인도서 수(제주본도 제외) : ('15년) 472개 → ('17년) 470개 → ('19년) 465개

- (인구감소지역)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생활인프라 위축 등 문제 발생

* ('19년 합계출산율) 서울0.72, 부산0.83, 대전0.88 vs 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 국가 전체 인구가 8% 증가한 '00~'19년 간 전국 시군의 63%(99개*)에서는 인구 감소 발생

* (30% 이상) 4개 (20~30%) 43개 (10%~20%) 32개 (10% 이하) 20개

□ 목표 및 추진전략

-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접근성 향상) 접경지역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 향상 및 경제·문화교류 촉진
 - (성장동력 창출) DMZ 인근의 역사·안보·생태·문화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삶의 질 제고)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도서지역) 도서지역의 가치 제고
 - (소득증대·일자리확충) 관광기반 시설 확충, 수산자원 육성 등 투자 확대로 도서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확충
 - (교통여건 개선) 연도교 및 연륙교 건설, 순환도로 조성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정주여건 개선) 복지·의료·교육 등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원
 - (최소 생활수준) 전국 어디에서나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um) 이상의 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
 - (거주강소지역 육성) 청년층 지원 등을 통한 지역활력 및 소득 제고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거주강소지역 육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접경지역 】

- (접경권 발전지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1~’30)」에 따라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추진
 -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인근에 ‘DMZ 평화의길*’(도보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
 - * 강화-고성(526km) / ’19~’22년
 - DMZ 내 유명 관광지를 연결한 ‘평화누리길*’(자전거길) 및 다양한 지질체험을 위한 ‘한탄강 주상절리길**’(도보길) 조성
 - * 강화-고성(608.7km) / ’11~’21년 ** 연천·포천·철원(42.8km) / ’17~’22년
 - 동서녹색평화도로* 및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 추진을 통해 동서횡단 교통축 조성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
 - * 강화-고성(총 252km) / ’12~’22년 ** 인천 영종도-강화 신도(3.8km) / ’19~’25년
- (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에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
 - 접경지역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 10개소(15개 시·군 대상 공모) / ’19~’24년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소득·일자리 창출사업(특성화사업)* 추진
 - * 단계별 추진(①주민역량강화, ②기초사업, ③활성화사업) / 9개 시·군 17개소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 * ’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신규 추진 / 2개 시·군 1,081세대

【 도서지역 】

- (도서개발 지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8~’27)」에 따라 소득 증대·일자리, 교통개선, 관광활성화, 주민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지원
 - 가스·석유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 * 4년간(‘18~’21년) 8척
 - 섬간 접근성 개선·교류촉진 기반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연도교 건설(전체 14개소)
 - * (‘20년 계획) 당진 난지섬(‘16~’20), 웅진 대이작~소이작(‘20~’24) 등 7개소
- (섬의 날) 섬의 가치 제고, 섬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섬의 날 행사 개최
 - 전국의 주민·관광객과 전문가·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념식 및 정책홍보 전시, 부대행사 등
 - ‘섬 방문 주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등 관광공사 연계 홍보
 - * 매년 8.8일, 제2회 섬의 날 행사 ’20.8.7.~8.9. 경남 통영 예정
-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조사·연구·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인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추진
 - * (추진계획) 타당성심사,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기본계획 수립(‘20년) → 준비위원회 구성·설립(‘21년)

【 인구감소지역 】

- (지원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법적근거 마련 추진
 - * 인구감소지역 정의,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등 규정 신설
- (공모사업 할당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의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quota) 도입
- (지역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투자계획 : 2011년 ~ 2030(20년간), 총 16조 2,815억원
 - 공공 10조 7,019억원(국비 7조 8,946억원, 지방비 2조 8,073억원)
 - 민간 5조 5,79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국비+지방비)
 - 특수상황지역 개발 : 매년 약 1,250억원
 - 접경권 발전지원 : '21~30년 49,177억원
 - 도서종합개발 : '21년 ~ '27년까지 1조 1,038억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 '21년 ~ '25년까지 매년 60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78,946	28,073		55,796	162,815	
특수상황지역개발	'17~'27	11,000 (매년 1,000)	2,750 (매년 250)			13,750 (매년 1,250)	계속
접경권 발전지원	'11~'30	54,099	22,384		55,766	132,249	
도서종합개발	'18~'27	13,115	2,017			15,132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17~'25	366	461		15	842	
- 통합지원사업	'17~'25	318	413		15	746	계속
- 프로그램 지원사업	'20~'25	48	48			96	"

□ 기타 사항

- 균형발전위원회(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법정계획)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법정계획)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목록

관리번호	세부실천계획 과제 목록	소관부처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2-1-가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2-1-나	혁신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캠퍼스혁신 파크 등)	국토교통부
2-1-다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	국토교통부
2-2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2-2-가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국토교통부
2-2-나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구조고도화 추진	국토교통부
2-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2-3-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문화체육관광부
2-3-나	지역맞춤형 해양 레저관광 거점 구축	해양수산부
2-3-다	지역 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관광산업 진흥기반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2-3-라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문화체육관광부
2-3-마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발전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2-3-바	재생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노후관광지 재생, 관광콘텐츠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2-3-사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설악동 재건 사업)	국토교통부
2-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2-4-가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공간 조성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2-4-나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관광거점도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2-4-다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국토교통부
2-4-라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글로벌 수요 창출	문화체육관광부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관리번호	2-1-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18 ~ 2027	담당자	정병찬 사무관 (044-203-4418)

□ 현황 및 문제점

-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 및 지역경제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혁신 기반 지속 확충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조성
 - 지역 혁신활동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리적 근접성을 갖춘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국가혁신클러스터) 하여 신산업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新성장거점으로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 플랫폼의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혁신공간 조성 및 이전 공공기관 협력 유도
 - * 1단계('18~'22), 2단계('23~'25), 3단계('26~'27)를 통해 761개 과제, 8,310억원 국비지원
- 제조업 침체가 뚜렷한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력 강화와 주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역주력산업의 사업전환·다각화, 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지원

* 11개 지역활력프로젝트(6개 시·도) : 2년간('20년~'21년) 610억원 국비지원

○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장비 등 혁신기반을 강화

* 스마트 특성화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 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인력 양성 등 지역 혁신기반 강화

* 1단계('20~'22), 2단계('23~'25) 총 6년간 100개 과제 내외 6,720억원 국비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8년 ~ '27년(10년간), 총 23,258억원
 - 공공 : 21,786억원(국비 15,640억원, 지방비 6,146억원)
 - 민간 : 1,472억원

(단위: 억원)

구분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18~'27	15,640	6,146		1,472	23,258
- 국가혁신클러스터	'18~'27	8,310	2,964	-	1,472	12,746
- 지역활력프로젝트	'20~'21	610	302	-	-	912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20~'25	6,720	2,880	-	-	9,6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18~'20	'21	'22	'23	'24	'25	'26~'27	합계
합계	4,496	3,529	3,868	3,474	2,990	2,195	2,710	23,258
- 국가혁신클러스터	3,230	1,468	1,468	1,074	1,400	1,400	2,710	12,746
- 지역활력프로젝트	456	456	-	-	-	-	-	912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810	1,605	2,400	2,400	1,590	795		9,600

□ 기타 사항

- 동 실천계획에 대해 균형위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기본계획('18~'22년)에 의한 점검 추진

혁신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캠퍼스혁신파크 등)

관리번호	2-1-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협조부서	중기부, 교육부 등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박형재 사무관 (044-201-3663)

□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업 경쟁력은 제조 능력보다는 지식·혁신 능력에 달려 있고, 이는 네트워킹, 인재 채용에 크게 좌우
 - 과거에는 기반시설을 잘 갖춘 저렴한 입지가 기업에게 중요했다면 현재는 지식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도심내 입지가 더욱 필요
- 청년층은 급여수준 외에도 문화, 도시 편의시설의 접근성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내 직장을 선호
 -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노후 산단의 경우 청년 인재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 목표 및 추진전략

- 도심에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산업생태계로 육성
 - 혁신거점을 점단위(개별사업)가 아닌 선, 면 단위(종합계획)로 확장
 -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고밀도로 개발
 - * 도심 개발 특성상 사업성 측면에서도 고밀도 개발이 적정
 - 문화, 편의,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도시 내 가로와 거리 등을 활용한 클러스터 구축

- 판교2벨리 내 주요 가로를 따라 기업 성장·지원 공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시장, 회의장 등) 등을 조성('16~'23)

* 3개동(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2개동) 조성 및 운영중 → 추가 4개동(기업성장센터 추가동, 글로벌Biz센터, ICT융합센터, SW드림센터 등) 조성

- 판교2벨리 모델을 지방 여건에 맞게 확산('19~)

○ 도심, 대학 등을 신산업 입지와 창업,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

- 입지가 좋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에 캠퍼스혁신파크 조성('20~)

- 교통, 주거 등 생활여건이 좋은 지방 도시에 혁신거점 조성('21~)

○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을 개발·확산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판교2벨리 공공 창업공간) 2016 ~ 2023(8년간), 총 13,752억원

- 공공 8,744억원(국비 256억원, 지방비 970억원, 공공기관 7,518억원)
- 민간(민자) 5,008억원

○ (판교모델 지방확산) 2019 ~, 총 4,400억원(민자 별도)

- 공공 4,400억원(국비 400억원, 공공기관 4,000억원)
- 민간(민자) : 별도

○ (캠퍼스혁신파크) 2020~, 총 9,000억원(민자 별도)

- 공공 9,000억원(국비 3,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공공기관 3,000억원)
- 민간(민자) : 별도

○ (도심 내 혁신거점) 2021~, 총 5,000억원(민자 별도)

- 공공 5,000억원(국비 2,000억원, 지방비 1,500억원, 공공기관 1,500억원)
- 민간(민자) : 별도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 선형클러스터 구축	'16~						
- 판교2벨리(공공)	'16~'23	256	970	7,518	5,008	13,572	
- 판교모델 지방확산	'19~	400	-	4,000	-	6,900	민자 별도
○ 혁신거점 조성	'20~						
- 캠퍼스혁신파크	'20~	3,000	3,000	3,000	-	9,000	민자 별도
- 도심 내 혁신거점	'21~	2,000	1,500	1,500	-	5,000	민자 별도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

관리번호	2-1-다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협조부서	산업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김성환 서기관 (044-201-3677)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 대구, 광주, 전남·북의 지역 제조업 생산 80% 이상, 울산, 전남·북 고용의 60% 이상 차지

- 그러나 최근 산업여건 변화*, 도시화 등에 대한 대응부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산업생태계와 부조화 문제 발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AI,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 도시외연 확장으로 도심과 인접한 노후산단이 많지만 열악한 외관, 문화·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인력이 취업을 기피

-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의 원천'인 산단에 대한 구조 전환 요구

- '산단 내 산재된 자원'을 활용, '산단 본연의 집적효과'를 통한 '산단형 제조혁신'을 구현하여, 새로운 혁신동력을 창출할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산업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 정책에서 지역주도의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
 - 산단에 미래성장산업, 신기술 산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인프라 공급 확대 등 지원
 -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 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산단 신규 조성, 재생 시 역사·문화·건축·경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이 추진되도록 지원, 우수 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
-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신산업 유치, 신기술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입주업종 제도, 복합용지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 생산(지식산업센터), 창업(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연구개발, 주거 및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산단 내 공간의 복합화 등 산업생태계 지원
- 지역 산단 중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거점(hub)기능을 하는 산단에 지역별 핵심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주도 산단정책 전환
 -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 등)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
 - 정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부처별 산단 지원 사업을 협업예산의 형태로 결합하여 산단 대개조 추진

□ 투자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한 세부 사항을 지속 논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관리번호	2-2-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7 ~ 장기계속	담당자	박태진 사무관 (044-201-4912)

□ 현황 및 문제점

- 뉴딜사업을 통한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융·복합한 지역혁신거점 조성 등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기반 혁신거점 구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창업·주거·커뮤니티 기반 혁신거점을 구축하여 창업공간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역주도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 조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산업·상업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벤처·청년기업 등 입주 추진(매년 5곳내외 선정)

*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창업·보건·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기능이 지역여건에 맞게 집적된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25년까지 100개소 조성)

* (어울림센터)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창업시설, 주거기능 등을 포함하는 복합앵커시설

- 도시재생 지역의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진(‘25년까지 150개 지정)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차장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추진(‘25년까지 100곳 설립)
- **지역주민이 제안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지원(‘25년까지 300곳 선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7년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 (‘17년 집행) 재정 1,508억원 기금 490억원
- (‘18년 집행) 재정 5,290억원 기금 2,864억원
- (‘19년 집행) 재정 6,512억원 기금 6,057억원
- (‘20년 예산) 재정 7,777억원 기금 9,418억원
- (‘21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12,435억원 기금 11,566억원
- (‘22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11,226억원 기금 12,600억원
- (‘23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10,735억원 기금 12,996억원
- (‘24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8,997억원 기금 13,128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도시재생사업(‘20년)	‘17년~ (계속)	7,777	7,777 ¹⁾	9,418 (기금)	- (미정)	24,972	

1)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을 5:5로 가정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구조고도화 추진

관리번호	2-2-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19 ~ 계속	담당자	안재구 사무관 (044-201-3739)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었으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증가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산업활력 지속 저하
 - 입주기업 영세화 및 부가가치 저하, 문화 및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 인력의 취업 기피 뿐 아니라 도시의 주변확산에 따른 산업단지의 도심편입으로 교통불편, 환경악화 등 도심과 부조화 문제 유발
- 산업단지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부에 핵심거점을 조성하여 그 효과를 주변에 확산 하고
 -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업종고도화 유도 및 근로·정주환경 개선 도모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노후 산업단지 내부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단 전체에 효과 확산
 - 산단내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한 복합개발 추진
- 기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충실히 실행하고 산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련 부처 연계사업을 협업을 통해 추진
- 노후 산업단지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시키고 생활 공감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생사업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단순 기반 시설정비사업에서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산단환경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산단의 공업지역 위주의 경직의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기지로 활용('22년까지 10개소 추진)
-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추진)** 산단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시키고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 추진
 - 노후산단과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강화
 - 근무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유도 및 산업단지 전체의 경관개선 추진하도록 노후공장의 시설 및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융자지원
-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의 솔루션 개발·지원,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 등 노후 산업SOC 스마트화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9,390억원
 - 공공 억원(국비 3,445억원, 지방비 3,445억원, 기타 2,500억원)
 - * 사업비는 사업추진 일정 및 총사업비 변경, 공공기관 투자방향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5년까지는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010	1,020	2,450	2,460	2,45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상상허브, 스마트시티 조성 등(합계)	'21~'25	3,445	3,445	2,500	-	9,390	
- (노후공단재정비지원)	'21~'25	3,445	3,445	-	-	6,890	
- (산업단지 상상허브)	'21~'25	-	-	2,500	-	2,500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관리번호	2-3-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	협조부서	융합관광산업과 지역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이광구 사무관(044-203-2852) 이은주 사무관 임예섭 사무관

□ 현황 및 문제점

- 여가시간 증대 및 워라밸 추구에 따른 '여행이 있는 일상' 수요 증가
-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쇠퇴
- 관광트렌드 변화와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문화여가시설 육성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에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상품' 제공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방문 유도
 - 자연자원(102위)에 비해 높은 문화자원(11위)* 의 관광경쟁력을 활용,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 개발 추진 *'19년 세계경쟁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 매력있는 지역 관광지 및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추진
 -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우리나라 인기 콘텐츠 활용 테마 관광 활성화
- 국정과제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추진
 -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으로서 '문화도시' 가치 확산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발전 견인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역 문화·자연 자원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 지역별 테마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산업 육성
 - △ 한류관광(인기드라마 촬영지 및 인근 관광지 연계 관광 상품화 등),
 - △ 전통시장 관광(지방 및 주요 전통시장별 대표 콘텐츠 발굴), △ 웰니스 관광(지역별 자원 활용,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한방'으로 분류) 등 테마 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
 - 생태·자연 경관의 관광자원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 육성
 - △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 코리아 둘레길 및 문화생태탐방로 활용 활성화 등
- 다양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 문화예술·산업·관광 등 분야별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문화자원 활용
 - △ 문화적 도시재생(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 글로벌 브랜드 구축,
 -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 사업기획·추진
 - * 2020년~사업 종료(5년) 후 문화도시 사업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 지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활용 및 연계
 -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통한 성과를 지역으로 환원(문화관광축제),
 - △ 지방 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확대(테마여행 10선), △ 지역특화 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산업·생활관광, 명사 여행, 레저관광, 시티투어)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5년(6년간), 총 7,050억원
 - 공공 7,050억원(국비 3,984억원, 지방비 3,06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국비)

(단위: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관광자원 개발·활용 및 관광경쟁력 재고	199	199	199	199	199	199	1,194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지역브랜드 육성	100 (7개)	380 (17개)	480 (24개)	600 (30개)	-	-	1,560
지역관광상품 개발	205	205	205	205	205	205	1,23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2020 ~2025	3,984	3,066	-	-	7,050	
- 관광자원 개발·활용 및 관광경쟁력 재고	2020 ~2025	1,194	276	-	-	1,470	
-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지역브랜드 육성	2020 ~2023	1,560	1,560	-	-	3,120	4개년
- 지역관광상품 개발	2020 ~2025	1,230	1,230	-	-	2,460	

□ 기타 사항

- 문화도시 지정 심의 등을 위한 신규 문화도시심의위원회(3기) 구성 및 운영('20.5~)

지역맞춤형 해양레저 관광거점 구축

관리번호	2-3-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19~2024	담당자	임성규 사무관 (044-200-5255)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국 연안 및 어촌지역 인프라는 단순 편의시설, 해수욕장 등 특정 시설에 집중
 - 사계절 가능한 해양레저 상품, 실내 해양레포츠 시설이 부족하여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및 관련 산업 확산에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서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연안에 기본 인프라 확충
- (추진전략)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복합시설 조성 및 인근 관광자원 연계

* <예시>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힐링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권역별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구축
 - 3개소(군산, 제주, 강원 고성)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시설 설계 중, '23년 준공 예정

-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사업계획 및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 2개소 (시흥, 보성)를 추가 선정하여 설계 준비 중, '24년 준공 예정

○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허브로 하여 인근 관광자원 활용

- 해양레저관광 거점, 마리나 항만 등을 연결하는 **해양 관광길** 개발 (K-Ocean Route) 검토
- 해중경관지구 2개소를 지정('18.12, 제주, 강원 고성)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수중레저를 위한 시설 조성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24년(6년간), 총 2,100억원

- 공공 2,100억원(국비 1,050억원, 지방비 1,050억원)

* 단,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공간 창출(5개소)	'19~'24	1,050	1,050	-	-	2,100	
- (시범사업 3개소)	'19~'23	620	620	-	-	1,240	
- (공모사업 2개소)	'20~'24	430	430	-	-	860	

□ **기타 사항**

- 5개소 거점 이외에 추가 조성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협의 예정

지역 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진흥기반 확충)

관리번호	2-3-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협조부서	문체부, 산업부
사업기간	2013 ~ 장기계속 2019 ~ 장기계속	담당자	임종우 사무관 (044-203-2866) 허 권 사무관 (044-203-2867)

□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두레 조성 : 9,996백만원) '13~'19년 기간 동안 73개 지역에서 관광두레PD 102명, 주민사업체 480개 발굴·육성
 -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사업체 확산을 위해 사업지역의 단계적 확대 필요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 10,750백만원) 클라우드 펀딩, 액셀러레이팅, 혁신바우처, 선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
 - 신규 사업이 대다수로, 향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보완 필요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정책이 홍보비 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지역 소재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 4,900백만원) 2019년 부산에 1개소 구축, 금년 3개소 추가 구축할 예정으로 현재 지역선정심사 진행 중
 - 지방비 매칭 및 지자체 관리체계 미비로 지자체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며, 장차 추가구축 난항 예상
 - 선정 후 지자체의 관심도 저하로,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 존재(부산)

□ 목표 및 추진전략

- (관광두레 조성) '22년까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125개 발굴 및 육성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관광벤처공모에 이어 지역소재 벤처기업이 장소·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사다리 구축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전국 광역지자체 당 1개소를 설치하여 (총 15개소, 서울·제주 제외) 지역관광기업의 지원거점으로 기능
 - 향후(~'22년) 서울·제주 제외 15개 광역지자체에 신규 구축 목표
 - 지역센터 기능강화로 지역 연관있는 예비·초기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관광두레 조성)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주민사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단위:개소)

구분	~'19(누적)	'20	'21	'22	합계
신규 지역	73	16	18	20	127
신규 주민사업체	480	190	215	240	1,125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25년까지 연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25년 이후 성장벤처기업(창업 3년~) 및 지역소재 기업을 본격 성장시키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함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25년까지 광역지자체 전역에 1개소씩의 센터를 구축함. '25년 이후 예비·초기관광벤처기업의 육성역할을 담당하며 서울 관광기업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13,747억원
 - (관광두레 조성) 290억원(국비 290억원) *'21~'22년 기간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공공 7,110억원(국비 7,110억원)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공 6,347억원(국비 3,537억원, 지방비 2,81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40	합계
관광두레 조성	130	16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290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151	269	315	375	375	5,625	7,110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119	252	332	332	332	4,980	6,347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21~'40	10,937	2,810	0	0	13,747	
- 관광두레 조성	'21~'22	290				290	미정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21~'40	7,110				7,110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21~'40	3,537	2,810			6,347	

기타 사항

○ 없음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관리번호	2-3-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협조부서	국토부
사업기간	2019 ~ 2027	담당자	조상훈 사무관 (044-203-2893)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위주 개발)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 연계 강화 보다는 신규 시설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고려 부족
- (지역특색 반영 부족) 타 지역 성공사례(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짚라인 등)를 모방하는 개발에 따라, 특색 없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방문 지속성 저하

□ 목표 및 추진전략

- (연계 및 협력 강화) 중앙-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 개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콘텐츠, 관리운영 중심 개발)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도 제고, 콘텐츠 개발 등 유지관리 및 활성화 중심의 개발 추진
 - ※ ▲(인프라 예산 제한) 시설 건립 예산을 제한하여 기존 시설 중심 개발 지양, ▲(사업구성) 콘텐츠 개발, 관리 운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
- (지역특색 반영) 정보습득 제약, 관광전문가 및 전문기관 부재 등 한계 극복과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발, 관리 운영 중심으로 개발 방식 전환을 위한 컨설팅, 조정 등 지원
 - ※ ▲(기본계획 수립 전) 지자체 역량개선 컨설팅, ▲(계획 수립 과정) 지역이 필요한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설계 및 운영~ 성과관리단계까지 필요시 자문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사업 등 3개 유형*의 사업을 패키지로 묶은 지자체 제안서를 공모 선정 후, 계획수립부터 건립 후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사업 유형 : (핵심사업)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사업, (관리운영사업)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인프라개선사업) 핵심, 관리운영사업과 연계된 관광자원 정비 및 개선

- 2023년까지 총 22개 사업지역 선정 및 5년간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대표 여행지 구축

- (사업규모) 1개 사업 당 약 200억원(5년간 국비 100억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총 규모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50%), 직접 수행(단계별 컨설팅 지원)

- (추진단계) 1년차(기본계획수립) → 2년차(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 3~4년차(관광자원 리모델링) → 5년차(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 등)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27년(9년간), 총 약 4,400억원

- 공공 약 4,400억원(국비 2,200억원 이내, 지방비 약 2,200억원)

※ 사업비 총 규모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 연차별 투자계획

- 2023년까지 총 22개 사업지역 선정 및 선정 사업 당 5년간 100억원 이내 지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조건, 컨설팅 지원 별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신규 선정	2개	8개	5개	5개	2개	-	-	-	-	22개
계속 사업	-	2개	10개	15개	20개	20개	12개	7개	2개	
예산규모 (단위: 억)	2	8	105	315	452	603	385	250	80	2,20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19~'27	2,200	2,200	-	-	4,400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9~'27	2,200	2,200	-	-	4,400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발전 종합계획 수립

관리번호	2-3-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지원단 해안권발전지원과)	협조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장경신 사무관 (044-201-4559)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자원을 융·복합한 경쟁력 있는 남해안(시범사업) 등 전국 8개 권역* 지역계획 수립(2018년)
 - * 남해안, 경기남부, 충남, 전북, 전남, 울산·경북, 충북, 강원
- 상위계획 미반영·해안내륙발전법 만료(‘20년)에 따른 사업 예산확보 부진
 - 해안내륙발전법 연장(당초‘20→변경‘30년)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관련사업 반영 및 예산 확보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경기남부 연계협력권) 역사문화자원과 IT·빅데이터 기술 융복합을 통한 지역연계형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시행
- (충남 연계협력권) 금강 생태복원 및 역사문화거점 개발, 해양·바이오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금강권역 스마트문화 재생플랫폼 구축사업,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사업 추진
- (전북 연계협력권) 새만금권 해양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조성사업, 근대시민정신 동학·아리랑 체험학습 벨트조성사업 추진
- (전남 연계협력권) 서·남해안 해상복합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사업,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추진

- (남해안 연계협력권) 남해안 광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해안 경관도로 및 명품전망공간조성사업, 남도2대교 및 유희시설 재활용(폐교) 사업 시행
- (울산경북 연계협력권) 4차 산업혁명 선도 광역 클러스터 구축 및 해파랑길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충북 연계협력권) 남한강(충주호) 수계권역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순환형 연계루트 조성사업, 성장촉진 거점조성사업 추진
- (강원 연계협력권)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강원도 환동해권 관광허브 구축사업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2020~2021: 실행력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지역발전 촉진 도모
 - 지역별 핵심사업 선정 후 각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추진
 - * 현재 각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시행 중
 - 해안권(3개 권역):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 내륙권(3개 권역):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 2021 이후 :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4,677억원
 - '21년 ~ '25년 : 총 2,518억원 (국비 1,259억원, 지방비 1,259억원)
 - '26년 ~ '40년 : 총 2,159억원 (국비 1,030.5억원, 지방비 988.5억원, 민자 14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재원	연도별 투자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6~'40	합계
합계	합계	250	646	536	578	508	2,159	4,677
	국비	125	323	268	289	254	1,030.5	2,289.5
	지방비	125	323	268	289	254	988.5	2,247.5
	민간	-	-	-	-	-	140	140
경기남부 연계협력권	소계	40	40	40	40	40	189	389
	국비	20	20	20	20	20	65	165
	지방비	20	20	20	20	20	35	135
	민자	-	-	-	-	-	89	89
충남 연계협력권	소계	40	40	40	60	60	120	360
	국비	20	20	20	30	30	60	180
	지방비	20	20	20	30	30	60	180
전북 연계협력권	소계	20	40	100	100	100	250	610
	국비	10	20	50	50	50	135	315
	지방비	10	20	50	50	50	115	295
전남 연계협력권	소계	40	48	48	48	48	729	961
	국비	20	24	24	24	24	335	451
	지방비	20	24	24	24	24	343	459
	민자	-	-	-	-	-	51	51
남해안 연계협력권	소계	40	278	88	90			496
	국비	20	139	44	45			248
	지방비	20	139	44	45			248
울산경북 연계협력권	소계	40	100	100	100	100	363	803
	국비	20	50	50	50	50	181.5	401.5
	지방비	20	50	50	50	50	181.5	401.5
충북 연계협력권	소계	20	80	80	80	100	288	648
	국비	10	40	40	40	50	144	324
	지방비	10	40	40	40	50	144	324
강원 연계협력권	소계	10	20	40	60	60	220	410
	국비	5	10	20	30	30	110	205
	지방비	5	10	20	30	30	110	205

* 투자계획은 예산안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합 계		2,278.5	2,258.5		140	4,677	
· 경기남부 연계협력권		165	135		89	389	
- 지역연계형 창업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2021~	165	135		89	389	
· 충남 연계협력권		180	180			360	
- 금강권역 스마트문화 재생플랫폼 구축사업	2021~	104	104			208	
-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사업	2021~	76	76			152	
· 전북 연계협력권		304	306			610	
-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조성	2021~	157	158			315	
- 근대시민정신 동학·아리랑 체험학습 벨트조성	2021~	147	148			295	
· 전남 연계협력권		451	459		51	961	
-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2021~	350	358		51	759	
- 호남선 남해열차 사업	2021~	101	101			202	
· 남해안 연계협력권		248	248			496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및 명품전망공간조성	2021~	96	96			192	
- 남도2대교 및 유희시설 재활용(폐교)	2021~	152	152			304	
· 울산경북 연계협력권		401.5	401.5			803	
-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	2021~	150	150			300	
- 해피링길 관광루트 육상·반 환승	2021~	251.5	251.5			503	
· 충북 연계협력권		324	324			648	
- 순환형연계루트조성	2021~	144	144			288	
- 성장촉진 거점조성	2021~	180	180			360	
· 강원 연계협력권		205	205	-	-	410	
- 환동해권 관광허브 구축	2021~	205	205	-	-	410	

□ 기타 사항

-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 연장(20→30)으로 6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 선정 추진
- 기한 내(20~30)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 필요

재생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노후관광시설 재생, 관광콘텐츠 발굴)

관리번호	2-3-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3 ~ 장기계속	담당자	전수련 사무관 (044-203-2855)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잠재력은 있으나 시설 노후화·관광 콘텐츠 미흡으로 기능을 상실한 관광지에 대한 관광기능 회복 필요
- 일부지역에 편중된 관광객, 오버투어리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관광객의 분산, 지역의 균형 있는 관광개발 필요
 - 무분별한 관광개발은 관광지의 환경파괴, 지역민 경제소외 등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기존 관광시설에 대한 재생은 국토개발 및 관광자원육성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의 노후화된 관광시설*을 활용,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융합기능 강화, 관광시설 재생을 통해 지역관광지의 매력도 제고
 - 관광시설 개량, 관광환경 개선 및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한 관광기능 회복하도록 종합지원**

* 노후화된 관광시설 :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물리적 시간의 경과로 제 기능과 역할이 쇠퇴한 시설을 의미함(물리적 노후 + 기능적 쇠퇴)

** 지원내용: **하드웨어** (시설 내·외관 정비, 동선체계, 공공편익시설 개선 등), **소프트웨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존 종사자·관계자 교육 등), **콘텐츠웨어** (지역고유의 역사문화, 문화예술, 지식정보콘텐츠 등의 스토리텔링 등), **휴먼웨어** (문화콘텐츠 기획자 등 전문인력 자문, 교육 및 홍보인력 교육 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여가수요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노후관광지 재생, 노후 시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 매년 공모를 통해 관광수요, 관광트렌드에 적합한 생태체험관광 콘텐츠 육성('21~'25년, 매년 5개소)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중복투자 방지, 생태관광 브랜드 정립 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중장기지원체계 도입
 - 자생력 있는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기업 등 참여 확대(선정지역 공모평가 시 가점 부여)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70억원
 - 공공 7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콘텐츠 확충 7억원(1.4억×5개 지역), 인프라 개선 7억원(1.4억×5개 지역)
 - ('22년) 콘텐츠 확충 7억원(1.4억×5개 지역), 인프라 개선 7억원(1.4억×5개 지역)
 - ('23년) 콘텐츠 확충 7억원(1.4억×5개 지역), 인프라 개선 7억원(1.4억×5개 지역)
 - ('24년) 콘텐츠 확충 7억원(1.4억×5개 지역), 인프라 개선 7억원(1.4억×5개 지역)
 - ('25년) 콘텐츠 확충 7억원(1.4억×5개 지역), 인프라 개선 7억원(1.4억×5개 지역)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재생을 통한 국내관광활성화(합계)	'21~'25	35	35			70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21~'25	35	35			70	

□ 기타 사항

-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컨설팅단을 운영, 사업수행실적, 추진상황, 사업계획 이행 등 점검 실시(상·하반기)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설악동 재건 사업)

관리번호	2-3-사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해안권발전지원과)	협조부서	기재부, 문체부 등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담당자	홍종현 사무관 (044-201-4568)

□ 현황 및 문제점

- 강원도 속초 설악동은 국내 대표 관광지이나 시설노후화, 체류·휴게 여건 미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시급한 정비·개발이 요구됨
- 설악~금강권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지역관광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거점형 관광기반 조성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관광패턴 변화, 방문객 감소 등으로 쇠퇴, 낙후화된 설악동 일대를 전면 재정비하여 새로운 체험이 가능한 활력있는 지역으로 재건
- 지역 간 교류증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인 대표 관광지로 육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설악동 일대 노후 건축물, 차로, 산책거리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버스킹 광장, “빛”을 활용한 인생야행 거리, 온천 체험지구 등 조성
 - 사업지 내 노후·불량건축물(휴·폐업 등 39동)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 강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 개별사업에 대한 단계별 예산반영 및 민간투자 촉진 등 지원방안 강구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년(5년간), 총 264억원
 - 공공 264억원(국비 132억원, 지방비 13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설악동 재건사업	계	12	41	65	77	69	264
	국비	6	20.5	32.5	38.5	34.5	132
	지방비	6	20.5	32.5	38.5	34.5	132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20~'24	132	132	-	-	264	
- 설악동 재건사업	'20~'24	132	132	-	-	264	

□ 기타 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악동 일대 노후·불량 건축물(휴폐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강구 필요

2-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공간 조성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관리번호	2-4-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협조부서	문화기반과, 체육진흥과, 공연전통예술과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김나나 사무관 (044-203-2631)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시설 격차) 지속적인 문화기반시설 확충('18년 2,749개 → '19년 2,825개) 등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문화향유 시설격차 여전

<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단위 : 개)>

구분	총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1개 시·도당 수
	비율								
계	2,825	100%	1,099	881	258	255	231	101	166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040	36.8%	490	292	102	75	66	15	347
14개 시·도	1,785	63.2%	609	589	156	180	165	86	127

자료 : '19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9.1.1. 기준)

- (문화향유 격차) 대도시-읍면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지속 및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 체육참여율 여전히 낮은 수준

* (문화행사 관람률) 대도시 84.1%, 읍면지역 71.4%(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19)

** (주 1회 이상 체육활동 참여율) '19년도 국민 평균 66.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58.2%, 70세 이상 노인 57.8%, 여성 65.1%

□ 목표 및 추진전략

- (문화시설 등 확충)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 확충 추진 및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한 시설 복합화 유도
 - 지자체 보조를 통한 공립문화시설 우선 확충 → 운영내실화 → 민간 참여모델 마련 → 민간에 의한 문화시설 활성화 유도

* '20년 복합화 시 기본보조율 10% 상향: 공공도서관(50%), 생활문화센터(50%), 작은도서관(80%)

-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의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19년 137만명 → '20년 140만명), 주민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19년 98개 → '20년 172개) 및 지역 공동체 내 협력·소통 촉진을 위한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20년 60개) 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점형·생활밀착형 서비스 시설 확충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도서관 등) 확충
 - * 문화기반시설 확충 목표 ('19년) 2,825개 → ('20년) 2,994개
 -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자체 체육시설 386개소('20년 국비 2,441억원)을 투입, 지역 체육활동 공간 확보
 -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문화균형 지수 고도화 추진 등 지역문화 현황 진단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신나는 예술여행)** 지역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20년 242억)
- 지역 문화주체간 협력·소통 촉진 및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 구축
 -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회원들에게 다양한 체육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 활동 거점을 제공하여 지역기반 스포츠 클럽 육성('20년 172개)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문화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호회 형성 및 교류 지원('20년 60개)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 일반회계, 문예기금, 체육기금 등 사업별 매년 정부 예산·기금(안)에 반영하여 추진

- '20년 예산 : 공공 15,793억원(국비 5,795억원, 지방비 9,998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공간 조성(합계)	'20~계속	5,795	9,998			15,793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0~계속	2,868	4,302			7,170	'20년 예산
- (체육진흥시설 지원)	'20~계속	2,441	5,696			8,137	'20년 예산
- (지역문화실태조사)	'21~계속	1	-			1	'21년 추진
- (신나는예술여행)	'20~계속	242	-			242	'20년 예산
- (스포츠클럽 육성)	'20~계속	224	-			224	'20년 예산
- (생활문화동호회)	'20~계속	19	-			19	'20년 예산

□ 기타 사항

○ 문체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4, '20년 발표)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관광거점도시 육성)

관리번호	2-4-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협조부서	국토부
사업기간	2020 ~ 2024	담당자	조상훈 사무관 (044-203-2893)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대 최고치(1,750백만)를 달성했지만, 대부분 서울에 집중(약 80%)되고 있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도시 육성」 필요**

[한, 일 지역 방문율 비교('17)]

국가	지역1	지역2	지역3	지역4
한국	서울 78.8%	경기 15.6%	부산 15.1%	제주 10.8%
일본	도쿄 46.2%	오사카 38.7%	치바 36.0%	교토 25.9%

* 국정과제 : 73-4-1. 지역 관광명소 집중 육성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19.4월) :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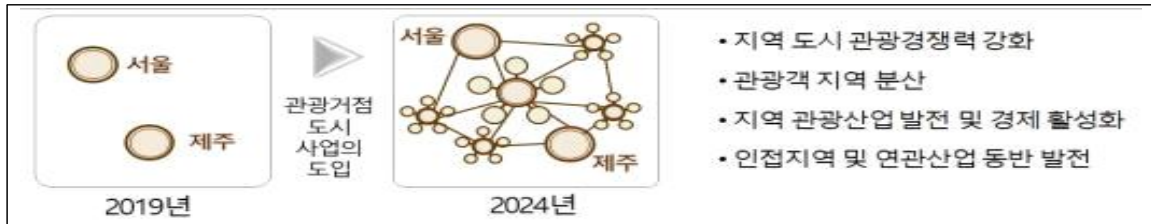
- 세계 여행 시장의 성장* 추세 속에서, 오사카('12년 120위→'19년 30위) 등 새로운 아시아 관광도시가 급성장** 중으로, 한국이 국제적인 관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방한관광 도시 육성 시급

* (세계 여행시장 규모 예측) '19년 2조 5천억 달러 → '24년 약 3조 달러 (유로 모니터 인터네셔널 2019)

* (세계 100대 도시 여행 도시) 1위 홍콩, 2위 방콕, 4위 마카오, 5위 싱가포르, ..., 9위 쿠알라룸푸르, ..., 13위 중국 심천, 14위 도쿄, ..., 24위 서울, ..., 28위 오사카, ..., 95위 제주(유로모니터 인터네셔널 2019)

□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방한 관광객의 지방 확산 실현」
- (기본목표) △방한 관광객의 지역방문 패러다임을 여는 ‘대표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관광객이 고 싶은 ‘모델 도시’ 육성, △지역의 창의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정책 지원



- (추진방향) 세계적 수준의 관광 브랜드와 지역 관광 개발 역량을 갖고,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파급효과를 내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 ① 대표 관광자원 매력 강화 (Attractiveness): 지역 대표 자원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토대로 글로벌 관광브랜드와 매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
 - ② 접근가능한 관광 실현 (Accessibility): 외국인 여행 장벽 해소 및 모두를 위한 관광 실현으로 만족도 향상 및 글로벌 의제 구현
 - ③ 스마트 관광 도입 (Digitalization): 신기술 접목으로 인바운드 관광 수용태세 고도화 등 과제 대응 및 미래 관광도시의 창조적 역량 강화
 - ④ 보이는 관광 추진 (Visualization): 사업을 일정 공간 및 테마에 집약하여 사업효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성공 정책사례 창출
 - ⑤ 지역 도시계획 연계 구축 (Networking):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일체화된 관광정책 추진
 - ⑥ 지역 주도형 관광 추진 (Governance): 지역관광 추진체계 육성 및 지역주도 역량 강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목적지로서 국제관광도시 1개소 및 지역관광 거점도시 4개소 육성

- 일정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를 대상, 세계적 수준의 관광목적지로 도약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도시별 5년 간 총사업비 1,000억 범위에서 지원(중앙, 지방 5:5)

※ 지자체 공모·심사 후 최종 5개 도시 선정완료('20.1월)

- ① 국제관광도시 : 부산광역시
- ② 지역관광거점도시 :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제관광도시) 방한 관광의 관문도시로, 글로벌 수준의 관광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도시

■ (지역관광거점도시)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닌 도시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 수준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를 갖춘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도시

○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육성

- (핵심사업)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의 매력강화 및 관광상품화, 마케팅 사업 등
- (전략사업) 도시 접근성 개선, 여행 환경 및 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정책 추진 역량 강화, ICT도입을 통한 관광산업 대응력 강화 사업 등
- (연계사업) 지역 교통·도시계획 및 문화도시 등 타 부처·부서 관련 사업 등 연계·차별화 사업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년(5년간), 총 약 5,000억원
 - 공공 5,000억원(국비 2,500억원 이내, 지방비 약 2,500억원)
 - ※ 사업비 총 규모는 도시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 연차별 투자계획
 - 도시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5개 도시 당 각 500억원 이내 지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조건, 컨설팅 지원 제외)
 - 2020년은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과 즉시 추진이 가능한 필수적인 관광환경정비 사업으로 편성(국비 129억원, 컨설팅 지원 제외)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20~'24	2,500	2,500	-	-	5,000	
- 관광거점도시 육성	'20~'24	2,500	2,500	-	-	5,000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관리번호	2-4-다 / 5-4-라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부(국제항공과)	협조부서	문체부
사업기간	2021-	담당자	이호준 (044-201-4211)

□ 추진현황

- 내수경제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외국인 인바운드(방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

* '19.12, 국가관광전략회의 계기 VIP께서 '20 방한객 2천만 명 달성 지시('19, 1.7천만)

- 항공산업 측면에서도 그간 성장을 지탱해온 아웃바운드 수요가 인구수 정체·고령화 등에 따라 정체될 전망으로 성장동력 필요

☞ 국가관광전략회의('19.12.12)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12.19) 등에서,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추진목표

- ① 양양·청주·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 ② 운수권 배분, 노선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 시범공항 연계노선 확충

□ 세부추진계획

①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 관계기관 MOU*를 통해 양양·청주·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하여 항공·관광융복합 사업 집중지원

* 지역관광·쇼핑자원 활용 해외홍보, 항공·여행사 인바운드여행객 유치지원, 공항 접근교통 지원 등(국토부·문체부 / 강원·충북·전남도 / 공항공사·관광공사)

- 시범공항 연계 국제노선 개설 및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하여 항공사·여행사 등에 지원 대폭 확대

② 시범공항 연계노선 확충 및 교통·쇼핑 등 여건 개선

- (항공) 상존하는 아웃바운드 수요에 상응하는 노선운영에서, 적극적 방한수요 창출·항공수요 유치를 위한 노선개설로 패러다임 전환

- 항공회담·운수권 배분 시 인바운드 시범공항 우선 고려, 수요가 불확실한 지방인바운드 노선의 최소운항의무 완화로 연계노선 확충

- 이를 위해, 인바운드 노선 개설 항공사에 운수권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운수권 심의위원회*에 관광전문가 포함

* 현재 항공·경영·경제·법률분야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

투자계획 : 해당없음

기타 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상반기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전세계적으로 여객수요 급감, 운항노선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 코로나19 극복 이후 항공수요 회복 시 인바운드 활성화 추진 필요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글로벌 수요창출

관리번호	2-4-라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협조부서	문체부, 산업부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임예섭 사무관 (044-203-2883) 김자영 사무관 (044-203-2829)

□ 현황(및 문제점)

- 방탄소년단(BTS)의 인기 등에 힘입어 전 세계 한류 팬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18년 한류관광객은 약 **143만명**(전체 외래객 1,535만명의 9.3%)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 지속**

* 전세계 한류팬: ('17년) 92개국 7,312만명 → ('18년) 94개국 8,919만명(한국국제교류재단)

** 한류관광객 수: ('14년) 92.3만명 → ('16년) 136.2만명 → ('18년) 142.7만명

□ 목표 및 추진전략

- (한류콘텐츠의 관광상품화) 방한 시 상시 즐길 수 있는 한류콘텐츠의 상설화를 통한 한류 목적 관광시장 확대
 - 연중 민간·지자체에서 개최하는 K-POP 콘서트, 방송사 공개방송, 스타 팬미팅 등 활용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 한류 관련 주요 관광상품 개발지원(여행사 패키지, BTS 등 한류스타 방문 관광지 정보제공 등)
- (한류관광 지역 확산) 한류스타와 연관성 있는 지역 관광지를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탈바꿈, 한류 스타 팬클럽 유치 추진
 - 지역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방한 관광상품 목적지로 개발, 관광 상품 활용을 위한 한류드라마 이미지 이용허락 계약(저작권·초상권) 체결 등 지원
 - 지역 한류드라마 촬영지 안내판·포토존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지역 한류관광 수용태세 개선
 - 'BTS(에시)이 추천하는 한국여행', BTS 촬영 코스, 'BTS 여행체험기' 등 국내 여행지, 음식·맛집, 문화체험 등을 발굴·홍보, FIT 한류팬 방한관광 확대

- (해외홍보) 전략적 방한관광 해외홍보 전개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K-POP 관광 활성화

- K-POP 콘서트 활용 외래객 유치
 - ▲ 후원 대상 K-POP 콘서트 공모 및 선정, ▲ K-POP 콘서트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원, ▲ 주요 K-POP 콘서트 개최 연계 홍보 및 한류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 K-POP 공개방송 및 시상식 연계 한류팬 유치
 - ▲ 주요 K-POP 시상식 연계 상품화 지원, ▲ K-POP 공개방송 프로그램 연계 한류 팬 유치
- K-POP 팬 네트워크 연계 관광 상품화
 - ▲ 한류스타 팬미팅 활용 관광 상품화 및 모객 지원, ▲ 해외 K-POP 팬클럽 회장단 한국 초청 이벤트, ▲ 한류스타 관련 콘텐츠 저작권·초상권 확보 및 한류스타 연계 한류관광 홍보 영상 제작

○ K-드라마 관광 활성화

- 한류 드라마 이미지 저작권 및 초상권 확보, 드라마 촬영지 활용 관광 활성화
 - ▲ 팸투어 및 테마 관광 상품 개발, ▲ 촬영지 관광 홍보 리플렛 제작 등
- 한류드라마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 ▲ 지자체, 여행사, 관광공사 공동 현지 설명회, ▲ 현지여행사 관측 지원
- 한류관광 홍보 및 확대 기반 조성
 - ▲ 해외 TV프로그램 활용 한류관광 홍보 마케팅, ▲ 한류스타 활용 국내외 한류이벤트 개최

○ 새로운 한류 창조와 확산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창출

- (한국관광 해외광고) 해외 시장별(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주) 현지 맞춤형 한국관광 콘텐츠 제작 및 전략적 광고 집행('21~'25)
- (다자간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관광위원회 지속 참가 및 한·러·몽 등 동북아 관광상품 공동 개발 모색을 통한 신규 방한 관광 수요 확대('21~'25)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5년(6년간), 총 2,978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글로벌 수요창출	2020~2025	2,958	20	-	-	2,978	
- K-POP관광 활성화	2020~2025	554	-	-	-	554	
- K-드라마 관광 활성화	2020~2025	133	20	-	-	153	
- 한국관광 해외광고	2020~2025	2,271	-	-	-	2,271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목록

관리번호	세부실천계획 과제 목록	소관부처
3-1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 · 관리	
3-1-가	도시의 적정개발, 관리강화 및 도시공간 구조 개편	국토교통부
3-1-나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	국토교통부
3-1-다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국토교통부
3-1-라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국토교통부
3-1-마	용도지역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	국토교통부
3-1-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기능 강화와 관리	국토교통부
3-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 · 생활 · 주거 공간 조성	
3-2-가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3-2-나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3-2-다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국토교통부
3-2-라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국토교통부
3-3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3-3-가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국토교통부
3-3-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국토교통부
3-3-다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진화	국토교통부
3-3-라	미래형 주택보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3-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3-4-가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3-4-나	소규모 교량 점검 · 진단 및 보수 · 보강	국토교통부
3-4-다	노후철도 시설물 적기 개량	국토교통부
3-4-라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
3-4-마	생활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기반시설 안전투자 강화	국토교통부
3-4-바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사고예방 및 열차안전 운행 확보	국토교통부
3-4-사	지진 대피장소 관리	행정안전부
3-4-아	지하공간 안전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3-4-자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국토교통부
3-4-차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

3-1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도시의 적정개발, 관리강화 및 도시공간 구조 개편

관리번호	3-1-가	구 분	비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이종현 사무관 (044-201-3708)

- 저출산·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인구감소 양상이 지속되나, 지자체별 도시계획 수립 시 목표인구를 **과다 추정*** 하는 등 **인구구조변화 반영 미흡**

*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평균 135% 수준으로 예측(지침상 기준은 105% 이내)

⇒ 과도한 **인구예측 현실화**를 통해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과잉공급은 방지 하되, 인구감소·저성장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추진 필요

-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비도시지역) 위주로 소규모 공장 등의 개별입지 확대 등 **난개발이 집중**되면서 **주거환경 저하·환경훼손** 등 문제 발생

⇒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 위주로(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방안 내실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적 관리 강화** 추진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인구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외 지역기능 등도 고려하여 **개발가능용지**를 산정하고,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용지별(주거, 상업 용지) 물량 산정기준 마련**
- 저성장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계획적 지원을 위해,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적 개발은 지양하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복합·입체 개발 유도**
-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강화, 성장관리방안 내실화** 추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 감소를 반영 하고, 친환경·스마트한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확보 기준 개선
- 광역적 도시계획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권 내 기반시설 부족, 광역적 현안·공통이슈 등을 해결하고, 도시계획적 협력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인구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

-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검토 연구용역 추진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용지별 물량 산정기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가능지 부여 등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도시 지역 내 혁신공간 창출,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복합용도지구·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성장관리방안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환경부 등) 협력을 통해 개별공장의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환경피해 예방 등 관리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 기존의 도시·군 계획시설(공원, 도로 등) 확보기준을 일률적인 양적(면적) 기준에서 지역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한 질적 기준으로 개편
- * (기존) 공원 확보기준 1인당 6㎡, 도로는 주거·상업·공업 면적의 8~35%(도로율)
- GB 조정 관련 절차와 연계하여 환경부 협의, 대국민 공론화, 국무회의 상정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안) 주요내용 》

- (공간구조) 주거·일자리·여가기능이 연계·중첩하는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실제 사회·경제적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서울 생활권을 중첩적으로 포함 하는 7개 생활권 설정
 - (광역교통) 지역간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수도권 내 광역통행권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

관리번호	3-1-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7 ~ 장기계속	담당자	윤성업 서기관 (044-201-4904)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와 경제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심각(전국 읍·면·동 중 68.2%, '18년)

*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 현황) '13년 2,239개 → '18년 2,389개

-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도시재생 로드맵에 따라 지역 자산 활용, 신산업 유치 등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력 제고
-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매년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하여, '22년까지 500곳 내외의 도시쇠퇴지역의 활력 제고 도모
- ('20년) 예산 규모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 혁신 지구·총괄사업관리자 사업 등 실행력 높은 新 뉴딜사업 비중 확대

- * ① (혁신지구)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② (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이 주도하여 도시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 거점 중심으로 재생사업 실시
- * 그간 추진된 공모사업 방식과 동일한 예산규모로(年100곳, 국비 1조), 공모사업 50곳, 新 뉴딜사업 70곳 등 총 120곳 내외 추진('20년)
- (빈집정비·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급한 사회문제(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인 쇠퇴지역 내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 추진('20년)
 -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 * (기금융자 지원) 총 사업비의 50% 한도(공공참여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추가) / (금리) 1.5%('20.6월부터 빈집 연계 시 1.2%로 인하 예정)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사업 발굴(선정 시 가점)
- (창업 및 기업 지원)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운영,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 기금 융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지역청년 창업지원 등) 등 실시
-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역주민 및 지지체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도시재생 청년인턴** 등으로 청년 참여 유도, 협치포럼·도시재생 한마당 등 주민 참여 행사 개최 등
 - * (지역교육) 주민·활동가 등은 기초·광역단위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과정 기획·시행 / (중앙교육) 일관된 수준의 정책방향 이해·공유 등을 필요로 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은 중앙에서 직접 시행
 - ** 대학생 등 청년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턴으로 근무시켜 도시재생 관련 경력을 쌓게 유도하고 향후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참여 유도
- (지역 중심 선정) 시·도에 일반근린, 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20년)
 - * 국토교통부는 시·도 선정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및 국비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7년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 ('17년 집행) 재정 1,508억원 기금 490억원
- ('18년 집행) 재정 5,290억원 기금 2,864억원
- ('19년 집행) 재정 6,512억원 기금 6,057억원
- ('20년 예산) 재정 7,777억원 기금 9,418억원
- ('21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12,435억원 기금 11,566억원
- ('22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11,226억원 기금 12,600억원
- ('23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10,735억원 기금 12,996억원
- ('24년 중기재정계획) 재정 8,997억원 기금 13,128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도시재생사업('20년)	'17년~ (계속)	7,777	7,777 ¹⁾	9,418 (기금)	- (미정)	24,972	

1)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을 5:5로 가정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관리번호	3-1-다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협조부서	농림부
사업기간	2018 ~ 장기계속	담당자	김태웅 사무관 (044-201-4941)

□ 현황 및 문제점

- (빈집)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슬럼화, 주거환경(안전·위생 등)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초래

* 빈집 추이(통계청, 일시빈집 포함) : ('15) 107만호 ('17년) 126만호 ('18년) 142만호

- 지자체별로 자체 재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철거·리모델링 등)를 지원 중

□ 목표 및 추진전략

- (빈집)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자체 자체 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 국비, 지방비, 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여 빈집 철거, 리모델링 등 빈집정비사업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활용 가능한 빈집과 연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용자, 공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뉴딜사업지 내) 추진('20~)
- 지자체 빈집실태조사(빈집법 제5조)를 통해 지역의 빈집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빈집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정비방안 적용('20~)

* 빈집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판정(양호-일발-불량-철거)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빈집 철거비,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비 등을 재정으로 지원 및 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운영 등 추진('20~)
-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빈집법 제4조) 및 빈집밀집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도 추진('20~)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빈집정비사업은 다양한 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에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예산 산출이 어려움

□ 기타 사항

- 도심 내 빈집(국토부)과 농어촌 내 빈집(농림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업 지속 추진

방치건축물 체계적 관리

관리번호	3-1-라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정재형 사무관 (044-201-4752)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간(2년 이상) 공사중단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미관저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비제도를 마련·운영 중*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3.5), 선도사업 추진('15~)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현장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중

- 다만, 선도사업(27곳, 예비사업 포함) 중 6곳에서만 사업이 구체화* 되었으며, 지자체는 현상유지에 치중하여 사업 재개비율은 22%에 불과

* 4곳(과천·원주·광진·용인)은 공사 재개 중, 2곳(거창·종로)은 공사 재개 준비 중

□ 목표 및 추진전략

-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및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 강화 지속 추진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법상 공공지원 근거는 있으나, 국가재정을 고려 계획수립비만 지원하고, 공사착수(토지매입 등)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도시건축 기준 특례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20~)

-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 방치건축물 정비법령 개정(~'21)

□ 투자계획 : 해당없음

용도지역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

관리번호	3-1-마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이종현 사무관 (044-201-3708)

□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상거래 증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 가구 구조변화(1인가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시설물 입지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검토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유연화·분권화
 -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적 공간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지역제도 개선,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 활성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허용용도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도시계획수립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용도지역 유연화를 위한 복합용도지구 제도 개선, 도시내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용도지역 세분화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단계별 확대
- 지도위 심의 등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시 최종 결정전 주민의견 재청취 의무화), 특정용도제한지구 주민 제안 가능규정 신설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체계 전반적 검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기능 강화와 관리

관리번호	3-1-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협조부서	환경부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류경진 사무관 (044-201-3747)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GB)은 '71년 지정되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구역내 환경을 개선*하였으나, 훼손지 발생** 등 관리상 한계도 노출

* 환경평가 1·2등급지 : '00년 2,553km² → '19년 3,009km² (+456km²)

** 불법행위 적발건수 : 2,402('15) → 3,559('17) → 6,454('19)

□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산지원 확대 등을 통해 GB 내 녹지 및 매력 있는 여가공간 조성
- 도시의 계획적 성장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GB의 공적 활용 추진
- GIS·드론 등 새로운 기술 활용한 불법행위 실시간 관리 및 지자체 관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GB 관리체계 확립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GB내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 재정지원을 확대
-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안정성·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민간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주기적인 갱신** 추진

* 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분포·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1~5등급 산정

** (현행) 필요에 따라 갱신 → (개선안) 전체 지표는 5년, 1개 지표씩 1년단위 갱신

○ 항공·드론 GIS 등을 활용하여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관리 실태에 따라 주민지원 예산 차등배분 강화 추진

- 불법 건축물 건설, 불법 벌목 등 훼손 시 일정기간 해제가 금지되는 '해제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고의적 환경훼손을 차단

* 현재는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현황 인정(예: 1등급지 벌목하여 훼손시 5등급 인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21~'25	1,750	421	-	-	2,171	
- 환경평가갱신 등	'21~'25	22	-	-	-	22	

※ 세부실천과제내의 단위사업별 사업기간 투자계획을 작성

사회통합형 도시·생활공간 조성(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리번호	3-2-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협조부서	-
사업기간	1991~계속 (단년도)	담당자	김정열 사무관 (044-202-3545)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9년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324개소, 이용아동은 23만명으로 '17년말 대비 1,000개소 이상, 약 5만명 증가
- (문제점)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음에 비해, 수요 대비 그 개소수는 부족함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
 - *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음(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 '19.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아동은 35.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명 증가하였으며, 총 정원의 133% 수준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21, 차년도 3월 기준)**
 - * (공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18.12.7) 반영
- (추진전략) '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기존 신축 방식 외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 지원하며, 지자체의 확충수요 발굴 독려를 위해 공동주택 내 의무화* 등 제도개선 추진
 -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19.9월 적용

○ **민관협력*** 및 **범부처협력****과 연계 추진 통해 지방 재정부담 경감

* 하나금융 MOU, '18~'20년까지 매년 30개소에 총 1,000억원 사업비 지원

** 생활SOC 3개년계획(관계부처 합동, '19), 향후 3년간('20~'22) 복합화 시 국고보조율 +10%p 인상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40년(21년간), 총 4조 8,702억원

- 공공 4조 8,702억원(국비 2조 4,433억원, 지방비 2조 4,26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0) 1,491억원(국비 748억원, 지방비 743억원), ('21) 1,801억원(국비 904억원, 지방비 897억원), ('22~'24) 매년 2,390억원(국비 1,199억원, 지방비 1,191억원)

* '21~'24년의 경우 '20년 중기재정계획(부처 요구안) 기준

- ('25~'40) 매년 2,390억원(국비 1,199억원, 지방비 1,191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40	24,433	24,269	-	-	48,702	
- 어린이집 확충	'20~'40	24,433	24,269	-	-	48,702	

□ **기타 사항**

○ 저출산위(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보위(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보위(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균형위(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충)

관리번호	3-2-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17~ 계속	담당자	차용민 사무관 (044-202-3537)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격하게 증가 중

(단위: 만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5년	'30년
65세 이상	676	712	737	769	1,051	1,298
추정 치매환자	66	70	75	79	108	137

-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

* (행동심리증상, BPSD)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 망상, 배회 등 증상

□ 목표 및 추진전략

- 치매국가책임제(국정과제 43-3)의 일환으로 BPSD 치매환자 집중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전문병동* 확충 추진

* (치매전문병동) 프로그램실, 공용거실, 목욕실, 상담실, 1인실(입원실)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구비된 치매환자 전용병동

- BPSD 치매환자 단기간 집중 치료·관리를 통해 조기에 지역사회 복귀 시킴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 부담 완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 우선 확충

* 치매국가책임제(국정과제 43-3)의 일환으로 '17년(추경)부터 확충 시작, '19년말 현재 43개소 공사완료

- '20년까지 5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하고, '21년 이후 매년 5개소 내외 추가 설치

○ 공립요양병원(79개소, 77개 시·군·구)이 없는 지역(149개 시·군·구)은 민간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 추진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7년 ~ '24년(8년간), 총 917억원

- 공공 917억원(국비 640억원, 지방비 277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3년까지 매년 5개 치매전문병동 설치, 46.5억씩 투자

- '24년 4개 치매전문병동 설치, 37억 투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충	'17~'24	640	277	-	-	917	
- 치매전문병동 확충	'17~'24	640	277	-	-	917	

□ 기타 사항

○ 민간요양병원(149개 시·군·구)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예산 또는 건강보험 지원) 모색 필요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관리번호	3-2-다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김민선 사무관 (044-201-3665)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 생활 SOC 3개년 계획(4.15, 국조실) : '22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 투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 그동안 생활SOC는 부처별·시설별로 각각의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되어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공급
- 또한,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지역간, 지역내 격차가 현저하고, 낙후지역·비도시지역 등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

* 지역간 격차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의 64.7%가 비수도권('17년, 복지부)

** 지역내 격차 : 실내체육시설 1개소당 인구 ⇄ 신도시·중심지 1.3~26만명 VS 구도심 4.5~10만명

□ 목표 및 추진전략

- 낙후지역, 비도시지역에도 최저기준 생활SOC를 공급하여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형평성 실현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 필요
- 부처별·시설별 공급기준을 비교·검토하고, 도시·비도시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인프라 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마련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역이 수립하는 시·도별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생활SOC 국가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확충 계획을 포함
- 접근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SOC 취약지역에 균특회계 우선 지원 등 지역투자 확대
 - 하위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이 집약된 생활SOC 집중 육성 추진
- 기존 부처별·시설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 국토 생활SOC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SOC 취약지역 파악 및 최적의 계획 수립을 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2,000억원
 - 10개 사업 × 사업당 100억원 국비 지원
 -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매칭 5:5)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400억, '22년 400억, '23년 400억, '24년 400억, 25년 '400억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 (생활SOC)	'21~'25	1,000	1,000	-	-	2,000	-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관리번호	3-2-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협조부서	복지부
사업기간	2016 ~ 장기계속	담당자	김선영 사무관 (044-201-4517)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복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로서,
 - 영구임대주택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건에 따라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
-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고령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추진
 - *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 등이 주택 수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주택 및 복지공간 제공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혹은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자체 등이 희망시 국민·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세대 혼합 공간으로 조성
 -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고령자복지 주택을 '19년부터 매년 10개소 공급 추진
- 자체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후 사업대상지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승인

□ 투자계획

-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포함

□ 기타 사항

-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공모 시행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관리번호	3-3-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주거복지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8 ~ 장기계속	담당자	김병채, 좌명한 사무관 (044-201-4514, 4506)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 * ('13~'17년) 연평균 11만호 수준 공급, ('18~'25년) 연평균 13만호 이상으로 확대 공급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였으나, 아직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서,
 - * 장기공공임대 비율(%) : 한국(7.1%), OECD(8%), EU(9.2%), 영국(17.8%), 프랑스(18%)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강화 및 임대주택의 안정적 재고확대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지속적 이행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좋은 입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
- 공급자 위주의 획일화·단순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로드맵 이후 발굴 신규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공급계획을 '25년까지 확장(현행 年21만호 공급규모 유지)
- (공공임대) '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 200만호 시대를 열고, '25년에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착수
- (공공지원)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9.3만호)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5만호 입주자모집 추진(임대기간 장기화 등 공공성 강화 지속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4년(4년간), 총 807,601억원
 - 공공 807,601억원(국비 807,601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4년까지 년도별 투자계획 ('20~'24 중기사업계획 부처안 기준)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807,601	-	-	-	807,601	
공적임대주택	21년	201,256	-	-	-	201,256	
*소규모주택정비, 집주인임대 주택 등 도시계획 제외 ('20~'24 중기사업계획 부처안 기준)	22년	206,750	-	-	-	206,750	
	23년	196,006	-	-	-	196,006	
	24년	203,589	-	-	-	203,589	

□ 기타 사항

- 교육부(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복지부(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저출산위(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관리번호	3-3-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협조부서	복지부
사업기간	2015 ~	담당자	김대영 사무관 (044-201-3359)

□ 현황 및 문제점

-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임
 - '19년 기준 임차가구 95.2만가구에 월평균 13.5만원을 지급하고 자가가구(총 8.8만가구) 중 2.2만가구의 주택수선 완료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수급대상자 확대, 기준임대료의 인상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속적인 수요발굴과 매년 복지부 주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통해 대상 확대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로 '25년 130만* 가구 까지 지원 확대 추진

* '18년 94만 → '19년 104만 가구 → '20년 113만 → '25년 130만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을 통한 수급대상자 확대,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인상 검토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해당없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20년	15,910	3,844	-	-	19,754	
	21년	17,163	4,119			21,281	
	22년	18,606	4,465			23,072	
	23년	20,168	4,840			25,009	
	24년~	21,916	5,260			27,176	

기타 사항

○ 복지부(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진화

관리번호	3-3-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협조부서	국조실, 농림부, 지자체
사업기간	장기계속	담당자	김병채 사무관, 송승민 사무관 (044-201-4514, 4506)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노후공공임대 슬럼화, 임대주택 선입건 등으로 신규 공급시 지역 사회 반대현상 지속
- 반면,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수요는 높으나, 적정 부지확보 곤란 및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에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디자인 혁신, 생활 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허브로 조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여유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

대규모 커뮤니티(서울양원)	커뮤니티팜(화성병점)	카페+도서관(파주운정)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등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작은도서관

- (신규단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임대와 문화·복지 등 지원 프로그램 복합(국조실·관계부처 협업)

- * 건설임대 단지 시범사업('21년내 착공가능) 2곳 공모선정 추진(~'20.9)
- * 매입임대는 중대형 건물 민간 매입약정시 시범사업지 별도 선정

< 생활SOC -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공모사업 추진방안 >

구분	현행 구조	개선
사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수립(지자체) ▪ 공모신청(지자체) ▪ 사업선정(국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수요 협의(국토부·LH ↔ 지자체) ▪ 사업계획수립(지자체 + 국토부·LH) ▪ 공모신청(지자체)·사업선정(국조실)
예산	중앙정부 → 지자체	중앙정부 → 지자체 → LH(건설비)
역할	지자체 단독 사업	LH: 생활 SOC 부지제공·공공임대·운영 지자체: 생활SOC 편의시설 운영

○ (기존단지) 단지내 노후 임대상가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 SOC 확충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제공

* (모델예시) LH소유 노후임대상가→상가리모델링(LH) + 도서관 등 생활SOC(지자체)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해당없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20년	550					
	21년	500					
	22년	500					
	23년	650					
	24년~	500					

미래형 주택 보급 확대 추진

관리번호	3-3-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협조부서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육인수 사무관 (044-201-3369)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국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을 추진 중으로,

*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 ('12년) 현 수준 대비 30% 감축 → ('17년) 60% 감축(패시브하우스 수준) → ('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

- '09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대상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설기준 강화

* 단열·기밀 등 건축적 요소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여 '09년 주택 대비 에너지를 60% 이상 절감한 주택 수준

※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50~60%) → '19년(60%)

- (미래주거 경쟁 심화) 스마트홈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및 관련 산업 참여군 확대 등으로 스마트홈에 대한 국제경쟁 심화

-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다양한 가전에 적용되고, 스마트 기기간 연동 등 전방위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범위 확대 추세

- (기존 주택건설산업 한계) 현장 습식시공 중심의 기존 주택건설 방식으로는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한계

* 근로시간 단축, 타 산업대비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 건설산업 폐기물이 전국 폐기물의 47%, 건설 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 등

- (주거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 국민의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쾌적성·편의성이 높은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 증가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미래형 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주거의 질 향상
- (추진전략) '25년까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의무화하는 등 미래형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정비, 플랫폼 등 기술개발 추진 등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①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산

- '25년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녹색건축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수준*으로 의무화 추진
 -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20~40%) 이상의 건축물
-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주요 패시브 건축자재(창호, 세대현관문, 단열신소재 등)를 연구·개발하여 제로에너지주택 비용최적화 도모
 - * 제로에너지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성능·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18.4~'21.12)
-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액티브 설비(태양광 발전설비 등) 설치 등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절감

②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정비, 플랫폼 등 기술개발 추진 및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 홈네트워크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필수설비를 축소하고,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 정책연구(과기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국토부·과기부·산업부) 합동 검토

- 주거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및 스마트 주거서비스·유지관리 기술개발 추진('20~'23)
 - * 안전(화재·방범), 쾌적(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관리), 편의(벽체·바닥·천장·외파·창호 등), 유지관리(설비운영·점검이력 등)
- 공동주택 거주자의 건강정보를 측정하여 주거공간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사업 추진('20.7~'21.7)
 -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실시간·양방향 서비스 플랫폼과 연동

③ 모듈러·장수명 주택 활성화

-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및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 (서울 가양) 30세대(4~6층), '16.11~'17.11, (천안 두정) 40세대(6층), '18.4~'19.4
 - LH 주택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하여 모듈러 건설방식 확산을 지원하고, 모듈러 최적 발주방식 검토
 - * ('20년)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 600호 추진
 - 모듈러 주택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14.9~)에 따른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
 - *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106세대, 13층)
- (장수명 주택) 실증단지 평가 및 필수 설계요소 등 기술 검토를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정 및 장수명 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 비용절감·성능향상·거주자 만족도 향상 등 실증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편익향상 효과가 높은 장수명 주택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
 -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3년(4년간), 총 283억원
 - 공공 252억원(국비 252억원)
 - 민간 31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모듈러주택) '21년 96억원(국비 70억원, 민자 26억원)
 - (친환경주택) '21년 19억원(국비 14억원, 민자 5억원)
 - (스마트홈) '21년 미정(국비 42억원, 민자 미정), 22년 미정(국비 42억원, 민자 미정), 23년 미정(국비 55억원, 민자 미정)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0~23	252			31	283	
- 주거환경연구사업 (단위사업)	20~22	84			31	115	
- 시 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단위사업)	20~23	168			미정	168	민간 투자액 미정

□ 기타 사항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을 위한 국정과제*(79-3) 추진
 - * 액티브 설비 도입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자재 개발 등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국정과제*(47) 추진
 - * 단기간에 모듈러주택 건설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지원 강화 가능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 국토교통부)
 - * 주거공간 및 주거단지에 IT를 접목하여 안전, 편리, 즐거움 등의 가치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프라·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홈 구현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관리번호	3-4-가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김준 사무관 (044-201-4989)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에서 풍하중, 지진하중 등에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설계풍속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최근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등 강풍이 설계기준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관련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
- * (예시) 설계풍속 44.5m/s(흑산도 기준), '19년 13호 태풍 링링 최대풍속 42.1m/s

□ 목표 및 추진전략

- 태풍 등 강풍에도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기준 상향 등 내풍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구조기준」 개정 추진
- 또한, 노후건축물의 외장재 탈락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장재 시공기준 등 관련 기준도 정비할 계획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건축구조기준 개정 등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21)

□ 투자계획 : 해당없음

소규모 교량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관리번호	3-4-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	협조부서	행정안전부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나귀용 사무관 (044-201-3922)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교량은 규모가 큰 1, 2종 시설물에 비해 진단·점검 등의 관리 수준이 낮아, 주요 하자를 상당기간 방치할 가능성 있음
- 1, 2종 교량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정밀진단 용역(전문가 실시)을 실시하는 반면, 소규모 교량은 단순 육안조사에 의한 정기점검만 실시
- 특히, 국도상 소규모 교량 비율은 66.3%(5,158개, 전체 7,779개)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관리에 소홀할 경우 도로이용자 안전에 위협은 물론, 추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소규모 노후교량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위험 사각지대 해소
- (전략) 체계적 점검체계 확립 및 보수·보강 실시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소규모 노후교량의 적정 점검체계 수립
 - 정기점검 결과에 근거한 적정 정밀점검 대상 선정
 - * 우선순위 평가: 공용년수, 건전성, 교고, 교통량, 교차조건 등 고려
 -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차기 정밀점검 시기 결정
 - * 위험도 평가: 안전등급 변화, 교통량 변화, 사고가능성, 피해규모 등 고려

○ 정밀점검 결과를 활용한 보수·보강 및 개축계획 수립

- 교통량, 위험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산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계	486	506	526	546	566	2,630
점검·진단	86	86	86	86	86	430
보수·보강	400	420	440	460	480	2,20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소규모 교량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21~25	2,630	-	-	-	2,630	

※ 세부실천과제내의 단위사업별 사업기간 투자계획을 작성

□ 기타 사항

* 종별 현황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기타	합계
개소(비율)	1,103 (14.2%)	1,518 (19.5%)	2,462 (31.6%)	2,696 (34.7%)	7,779

노후철도 시설물 적기 개량

관리번호	3-4-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05 ~ 장기계속	담당자	최재기 사무관 (044-201-4625)

□ 현황 및 문제점

- '19년 기준, 준공된지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터널이 전체 시설의 37.8%이며, 이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 전기설비가 27.8%를 차지
- 노후 시설물 균열·손상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열차사고·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열차운행 안전에 위험이 우려
- * 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은 설비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20년으로 규정

□ 목표 및 추진전략

- 노후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집중 개량을 통해 열차운행 안전 확보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열화, 피로균열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후 철도시설물 적기 개량을 통해 노후율을 감축하고, 열차운행 및 이용객 안전을 확보
-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노선(7개)*의 전기설비를 집중 개량하여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 *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경인선, 경원선, 경부선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05년 ~ 계속, 총 124,630억원

- 공공 124,630억원(국비 124,63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기투입	'21	'22	'23	'24	'25	이후
노후철도시설 안전투자	27,631	6,675	7,459	9,753	10,369	9,825	52,918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노후철도시설 안전투자	'05~계속	124,630					

기타 사항

○ 철도시설 노후율 조기 감축 및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적정 예산 확보 필요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관리번호	3-4-라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 ~ 장기계속	담당자	이기세 사무관 (044-201-3587)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인프라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중·대규모 시설물 위주의 관리체계임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상존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터널·건축물 등의 시설물 (1·2·3종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과
 - * 이 외 소규모시설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안전관리 실시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소규모시설물까지 포함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 (추진전략) ①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③시설물 보수보강 등 관리체계 개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3종시설물(중·소규모)의 대상기준에 대해 상향입법(지침→시행령)하고, 3종 시설물 지정·관리절차별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누락시설물 방지('20~)
 -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대상으로 포함토록 추진('20~)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복지시설, 농어촌교량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무상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관리미흡 시설물에 대해 3종 지정 권고(20~)

○ 시설물 보수보강 등 관리체계 개선

- 난간, 이음새 파손, 건축물 외벽 노후화 등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구조물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보수보강 의무화(20~)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생활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기반시설 안전투자 강화

관리번호	3-4-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협조부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과기부, 농림부
사업기간	'20~'24	담당자	성언수 사무관 (044-201-4997)

□ 현황 및 문제점

-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요소 사전 발굴·해소 필요
 -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정착 및 안전투자 확대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기반시설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한 국토환경 구축
- (추진전략) ①노후 인프라의 생활안전 위험요인 조기 발굴·해소, ②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 ③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통한 체계적 관리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노후 인프라의 생활안전 위험요인 조기 발굴·해소
 - 생활안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긴급 점검,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SOC 시설물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20~)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
 -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노후 교통SOC에 대한 목표 성능을 설정하고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와 개·보수 시행, 안전시설의 현대화('20~'25)

- 댐·저수지·하천 등 방재시설의 안전투자 확대, 상수도·하수도·열수송관 등 노후관로 조기교체 개·보수, 통신구·공동구 등 지하구의 난연 케이블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20~)
-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의 안전 투자를 촉진('20~)

○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위해 노후 SOC의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별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20~)
-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은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20~)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년(5년간), 총 65조원 내외(매년 13조원)
 - 공공 63조원(국비 25조원, 지방비 25조원, 기타 13조원)
 - 민간(민자) 2조원

※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

□ 기타 사항

- 동 실천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 여부
 - 기반시설관리위, 국무회의(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사고예방 및 열차안전 운행 확보

관리번호	3-4-바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김언찬 사무관 (044-201-4617)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 폭염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비하여 선로 등 철도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폭설,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 확립하여 철도사고 예방과 열차안전 운행 확보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상황반 운영)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현장 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열차운행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 등 모니터링

* (풍수해, 폭염) '5.15~10.15, (대설, 한파) 11.15~다음해 3.15
(인원)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2~4명

- (폭염 대비) 선로 안전성 강화, 취약구간 레일온도 저감을 통해 열차 서행을 최소화하고, 폭염 취약시설 사전점검

- 선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장대레일 재설정, 도상자갈 보충 등)을 실시(5월)하고, 폭염특보 시 열차순회 주기 단축(주1회→매일)
- 통풍불량구간에 차열페인트 도포, 살수 등 레일온도를 저감하고, 레일온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일정온도(55℃) 이상시 열차를 서행

○ (풍수해 대비) 폭우, 강풍, 낙뢰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일제점검을 시행(5~6월)하고, 폭우·강풍시 열차운행을 제한

- 선로침수·유실, 낙석, 역사침수·누수 등 폭우로 인한 수해예방을 위해 선로·사면·역사 등 일제정비 및 사전조치* 시행

* 배수로정비, 비탈면 보호, 낙석 사전제거, 집수정 점검, 역사 누수개소 보수 등

- 강풍에 대비하여 선로변 지장수목 제거, 건축마감재 결박상태 점검

- 전기·신호·통신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고 누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접지설비 기능점검, 절연저항 측정을 시행

○ (대설, 한파 대비) 차량, 선로, 전차선 등 분야별 사전 안전점검 실시

- (감속운전) 적설량에 따른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 감속운전 시행

<적설량에 따른 열차운행 속도 기준>(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일간 적설량	7cm~14cm	14cm~21cm	21cm~	눈에 덮여 레일면 확인불가
운행속도	230km/h 이하	170km/h 이하	130km/h 이하	30km/h 이하

- (수목제거 및 히팅장치 점검) 폭설 등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선로변 수목제거 및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사전점검(10월 중)

- (열차운행관리) 외부온도 영하 5℃ 이하 시 화물열차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장대화물 편성 감속운행(40량→35량)

* 기온 급강하 시 축전지 및 디젤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기동 유지

□ 투자계획 : 해당없음

지진 대피장소 관리

관리번호	3-4-사	구 분	비예산
주관부서	행정안전부(지진방재관리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상시	담당자	김은미 주무관 (044-200-5192)

현황 및 문제점

- 지진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관리* 중
 - 대피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위치정보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지진 옥외대피장소 : 10,352개소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 640개소('20.3월 현재)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진·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토록 조치 및 인명피해 최소화
 -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
 - 전국 지자체 전수점검 및 중앙 표본점검 실시(연1회 이상)

투자계획 : 해당없음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

관리번호	3-4-아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1 ~ 장기계속	담당자	황병철 사무관 (044-201-3474)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아현동('94), 대구 지하철('95) 가스폭발 사고, 서울 송파구('14) 등 전국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급증
 - 이에 개별관리 기관이 구축하는 15종의 지하공간정보*를 통합, 입체적으로 지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공간 정보화사업을 추진중
-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15종
- 실제 지하안전사고는 매설물의 노후화, 굴착공사시 안전관리 미흡 및 부주의, 정보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

□ 목표 및 추진전략

- 굴착공사시 지하시설물, 지반·지질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
- * 상·하수도, 통신, 가스, 공동구, 지반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3D 지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85개)·군(77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24년부터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 수정·갱신
- * '21년까지 85개 市 구축, 22~23년 77개 郡 지역 완료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5년 ~ 장기계속

- 국비 계속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21~'23년까지 총 222억원, '24년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수정갱신 계속 투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 지하공간지도 구축	'21~ 장기계속	계속	-	-	-	계속	-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리번호	3-4-자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 ~ 장기계속	담당자	이기세 사무관 (044-201-3587)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를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등의 의무 이행사항과 공공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 제공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 (추진전략) ①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확대, ②통계 제공서비스 고도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확대

- 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련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공개범위, 공개대상 등)하여,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20~)

○ 통계 제공서비스 고도화

- 기존 시설물 안전통계 외 건설단계, 주변 지하안전 정보까지 연계·제공하여 다각적인 안전정보 제공 및 지자체 등 정책수립 지원('21~)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년(5년간), 총 71억원(국비 71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비용으로 '20년 7.3억, '21년~'24년 동안 연평균 약 16억원 비용 투자(중기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20~'24	71				71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관리번호	3-4-차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협조부서	행안부,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사업기간	2015 ~ 2027	담당자	하철호 사무관 (044-201-3557)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인프라 증가와 유지·관리 미흡

- 1970~198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주택·건축물과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민 안전 위협

* '18년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 기반시설(46,286 개소) 중, 경과연수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중은 17.6% 이나, 10년 이내에 40.6%로 급증 예상

*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추정 결과 '16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53.4조원 예상

- 지하공간 개발 증가와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대형 복합재난 우려

*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원인의 60% 이상은 지하시설 파손) → 도로침수·손상 등

* 통신구 화재(KT, '18), 열수송관 파열(백석역, '18) 등 대형 피해사고 지속 발생

- 첨단기술 접목, 스마트 인프라*(지능화, 관리자동화) 확대 등에 따라 기술 융·복합형 스마트 유지관리 수요 증대

*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 지적능력을 갖게 되고,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 단계를 거쳐 향후 20년 내에 달성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17)

○ 대형 복합재난 증가와 선제적·통합적 대응 부족

-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 태풍·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난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8.6배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약 78% 감소

- 기후변화가 계속되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해 대비를 위한 선제적·통합적 관리체계는 부족
- 기반시설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는 시설물간 유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시설물간 정보단절, 분절적 관리체계 등 한계 존재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및 지하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및 종합관리 기술 개발
 -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지반침하 발생률 저감, 기반시설 수명 향상 등 달성
- (추진전략)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 및 기반 시설에 대한 토탈케어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유지관리 기술 고도화(22~)
 - * 기반시설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한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과 선제적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종합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 (유지관리 고도화) 노후 기반시설을 대비한 성능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 (지하 안전관리 기술 확보) 개별 기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지하 안전 및 기반시설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한 입체적인 안전관리 기술 개발

【 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개발 방향 】

As-is		To-be
개별적, 분절적 관리		입체적(시설·시설, 시설·지반) 연계·통합관리
결함 진단 등 위험 위주 관리	⇨	잠재위험 및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정보의 단절		디지털 정보의 연계·활용
경험 의존 예측·수동 관리	⇨	데이터 기반 예측·자동 관리
사후 대응형 고비용·저효율 유지관리		선제 대응형 저비용·고효율 유지관리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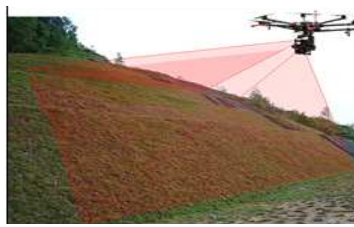
○ 기반시설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융·복합형 유지관리 기술 개발(~'22)

- IoT·드론 등을 활용하여 교량 상태 진단, 비탈면 위험 자동 추출, 지반 탐사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 건설기술연구사업 내 무인장비(드론) 활용 교량외관조사 등 유지관리 R&D 6건 시행중('15~'22, 600억원)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비탈면 조사용 드론>



<지하공동 및 매설물 복합 탐사>

○ 지하공간 정보 구축 및 공유를 통한 안전체계 구축(~'23)

- 지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지하 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정보 공유 추진

* 지하공간 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기술개발 R&D('20~'23)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토탈케어 기술 개발('22~'27)

- 시설물 관리정보의 디지털화 및 BIM, IoT, Big Data,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한 성능 평가·예측·개선 및 자산관리, 선제적 유지관리 등 성능 중심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 (기반시설) 모니터링 및 점검/진단, 성능예측 및 의사결정, 보수보강, 디지털 정보체계 고도화 및 실증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주기에 대한 종합기술 개발

* (지반·지하시설) 시설물간 상호 영향 등을 고려한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 지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공동구를 활용한 지하시설 공동관리 기술 개발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5년 ~ '27년(13년간), 총 5,900억원

- 공공 4,718억원(국비 4,718억원)

- 민간(민자) 1,18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능형 국토방재 기반 구축과 유지·관리 고도화 (합계)	2015 ~2027	4,718	-	-	1,182	5,900	-
- 건설기술연구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개발)	2015 ~2022	600	-	-	150	750	-
- 지하공간 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2020 ~2023	118	-	-	32	150	-
- 지하 및 기반시설 토탈 케어 기술개발 사업	2022 ~2027	4,000	-	-	1,000	5,000	-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목록

관리번호	세부실천계획 과제 목록	소관부처
4-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4-1-가	전국의 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4-1-나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환경부
4-1-다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및 IoT 활용 대기배출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4-1-라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설치 지원사업	환경부
4-1-마	지능형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환경부
4-1-바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국토교통부, 환경부
4-2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4-2-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행 점검	환경부
4-2-나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
4-2-다	수소철도차량 기술개발	국토교통부
4-2-라	미세먼지 정보관리기반 구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환경부
4-2-마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환경부
4-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4-3-가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국토교통부
4-3-나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산림청
4-3-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관리	국토교통부
4-3-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환경부
4-3-마	수돗물 안전성 확보	환경부
4-3-바	하수 재이용 사업	환경부
4-3-사	해상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환경부
4-3-아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 이용체계 구축	환경부
4-3-자	연안 및 해양환경의 관광자원 활용	해양수산부
4-3-차	연안정비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4-3-카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4-3-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국토교통부
4-3-파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강화 (재생에너지사업 갈등 관리)	환경부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4-4-가	개성과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국토교통부
4-4-나	해양 생태축 관리	환경부
4-4-다	통합적 관리를 통한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국토교통부
4-4-라	자연과 조화된 농산어촌 경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4-4-마	전통마을숲 복원 및 산림경관숲 조성	산림청
4-4-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4-4-사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경관 향상	국토교통부

4-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전국의 생태축 복원사업

관리번호	4-1-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계속	담당자	황세연 사무관(044-201-7231)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백두대간, DMZ일원, 도서·연안, 5대강 유역의 핵심생태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관리·복원
 - 백두대간 등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개별법에 따라 각 관계부처에서 보호지역 지정, 생태계조사 등 관리
 - 핵심생태축 내 2,449개소 단절·훼손지에 대해 부처합동 생태축 연결사업, 국립공원 생태축훼손지 복원사업 등 복원 지속 추진
- **(문제점)** 기관별로 상이한 생태계조사·분류 등 통합적이지 못한 현황 관리, 백두대간에 한정된 복원대상 등

□ 목표 및 추진전략

- 전국의 생태축과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복원하여 자연과의 공존,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 광역핵심생태축 조성을 통해 4대 핵심생태축과 5대 생태권역을 연결하는 국가차원의 생태네트워크 완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백두대간 및 정맥 등 주요 산줄기, 수생태축 및 도서·연안의 훼손 지역에 대해 폐도복원·생태통로 조성 등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 부처 합동으로 경관생태학적 가치, 야생동물 서식여부, 단절 정도 등에 따라 주요 생태축 단절지 81개 선정·복원 추진('19~'23)
 - 훼손된 수생태계(수변구역) 및 하구역, 해안사구 등 도서·연안으로 복원사업 확대(~'24)
- 훼손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생태공간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에게 질높은 생태계서비스 제공
 - '20년 2개소(밀양, 곡성)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이를 확대하여 매년 5개소 대상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단위 : 억원)

연도	'21	'22	'23	'24	'25
국비	87	253	350	350	350
지방비	37	108	150	150	150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40년, 총 11,980억원
 - 국비 8,386억원, 지방비 3,59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1~'40	8,386	3,594			11,980	
- 생태축 복원사업	'21~'40	1,596	684			2,280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1~'40	6,790	2,910	-	-	9,700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관리번호	4-1-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15년 ~ 계속	담당자	강미정 사무관(044-201-7326)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들의 공원·녹지 확대*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도시지역 공원면적은 감소** 하는 등 도시지역 녹색공간 확충 필요성 증대

* 사회조사(13세이상인구, 복수응답) : 공원녹지('09년 31.4%→'19년 47.8%)

** 도시공원 결정면적 : '07년 1,179km² → '18년 927km²(21.4% 감소)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나날이 증가하는 도시지역의 옥상과 같은 인공지반을 녹지로 조성하여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도심홍수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추진전략)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옥상을 도시소생태계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옥상에 녹지공간 조성
- '20년 5개소 신규 조성('15년~, '21년까지 누적 38개소)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80억원 ('21~'25년)

-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40	40			80	
- 도시소생태계 조성 (옥상공원)	'21~'25	40	40			80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및 IoT 활용 대기배출관리시스템 구축

관리번호	4-1-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협조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
사업기간	'19년 ~ '24년	담당자	신영수 서기관(044-201-6874) 송태곤 사무관(044-201-6905)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12년 이후 정체·악화되어 선진국 대비 2배 나쁜 상황*

* 서울 미세먼지(PM10) 농도($\mu\text{g}/\text{m}^3$) : ('02) 76 → ('12) 41 → ('16) 48
('16년 기준 일본 도쿄 $21\mu\text{g}/\text{m}^3$, 영국 런던 $20\mu\text{g}/\text{m}^3$, 프랑스 파리 $22\mu\text{g}/\text{m}^3$)

-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2조원('16, 대기환경학회), 특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피해가 심각

○ 발전·산업분야 미세먼지 감축은 경제적 여건 및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추진

- 대규모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여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

*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자동 측정하는 기기

-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비용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대기오염물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등으로 예보 정확도의 제고 추진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업종별, 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계측기 설치를 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도서 및 선박 등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정지궤도 환경위성('20.2월 발사), 항공 관측 등을 통해 수집한 대기오염물질 관측자료 활용(계속)
- 대기오염물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도입 추진
 - ※ '22년까지 예보시스템 연구개발, '23년 이후 현업예보 활용(검토)
-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NEAS)* 개발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영향 규명('20~'22)

* NEAS : 대기 중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이동·확산을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 사물인터넷(IoT) 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마련('20~)
 - * 전력계, 차압계, 통신장비 등을 조합하여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감시하는 장비(약 3백 만원)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약 1.2억원) 대비 저렴
- 사물인터넷 계측기에서 생산된 방지시설 상태 정보를 원격으로 수신·관리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20.上)
- 중소기업장 계측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22~'24)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20~'22년까지 총 25억원 투자
-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19~'24년까지 1,069억원 투자('19년 23억)

- (중소사업장 IoT 계측기 설치) '22~'24년까지 총 450억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사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
세부실천과제(합계)	16	30	355	500	620	1,521
-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10	10	5	-	-	25
-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20	200	350	470	1,046
-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 지원			150	150	150	45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1,544	450	-	-	1,994	
-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20~'22	25				25	
-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9~'24	1,069				1,069	
-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 지원	'22~'24	450	450			900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설치 지원사업

관리번호	4-1-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협조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
사업기간	'19년 ~ '30년	담당자	조영희 사무관(044-201-6709)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제품 개발시 시제품 제작 및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 등 제한적 방식의 실증화 지원
- 설치실적(reference) 부재, 상용화 비용부담 등으로 어렵게 개발한 혁신기술·제품이 실제 산업현장에 보급되는데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대기·폐기물 분야 혁신 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장 설치비용 등 현장실증 직접 지원*
 - * 상용화 前단계의 환경분야 신기술·설비(환경R&D사업에서 성공한 기술·설비 및 환경신기술 인·검증 기술 등)에 ICT 기반의 운영관리체계를 접목한 기술·설비
- '19년 추경 신규사업에서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환경설비의 국산화율을 제고하여 내수활성화에 기여
 - * '19년 추경예산에 63억원 확보(13개사 지원중), '20년 예산 총 123억원 반영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자원순환 분야 혁신기술·설비 개발기업 대상 현장 실증화 지원 확대 및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 * 총 사업비의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 지원(기업당 최대 6억원 지원)

- (대기)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에 IoT, ICT 기반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설비의 현장 실증화 지원('20년 81억원)

* (지원대상) 비산먼지 저감, 전구물질 저감, 실내 미세먼지 측정·저감 분야

- (자원순환) 자원순환 분야에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사업화 지원('20년 42억원)

*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소각, 매립), 폐기물활용(선별기 등 재활용설비, 폐기물 자원화 설비), 부대설비(악취저감 설비) 등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1,380억원('19~'30)

○ 연차별 투자계획 : 매년 120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1,380				1,380	
- 혁신설비 설치 지원사업	'19~'30	1,380				1,380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리번호	4-1-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협조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
사업기간	'19년 ~ 21년	담당자	김정민 주무관(044-201-7362)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 불법배출·처리 등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 인수·인계정보 위·변조 방지 및 이동경로 추적 방안 부재

□ 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장폐기물관리 분야에 실시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행정신고를 간소화하고,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방지하며 안전처리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활환경 안전 확보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지능형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구분	2019년(1단계)	2020년(2단계)	2021년(3단계)
목표	원격감시기반 마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기경보체계 구축
세부 사항	- 자동계량장비 시범구축	- 자동계량장비 확대설치 - 관제시스템 구축	- 폐기물 이상거래 탐지·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8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184				184	
- (지능형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19~'20	184	-	-	-	184	-

국토-환경분야 정책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관리번호	4-1-바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협조부서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업기간	계속	담당자	김부병 사무관(044-201-4744) 송향수 사무관(044-201-7279) 김영환 사무관(044-201-6679)

□ 현 황

-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쾌적한 삶에 욕구가 증대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이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 * ('15)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16) 「국토기본법」 개정, ('18.3)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
-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19.11)을 적용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19.12)

□ 목표 및 추진전략

- 국토-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간 연계 등 관리주체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토-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수립지침 개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 추진
- (업무매뉴얼 마련) 지자체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을 공동 개발·보급하여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등 추진 지원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범사업 추진('19~, 환경부)
- (공간정보 강화) 지적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지역의 국토환경 공간정보 구축·활용을 지원하여 통합관리 작동기반 강화
- (정책 환류 강화) 국토-환경계획의 상호보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평가 및 정책 조정 등에 활용하는 환류체계 마련
 - 국토모니터링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추진('20, 국토부)
 -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분야) 검토 매뉴얼 마련 연구 추진('20, 환경부)

투자계획 : 해당없음

기타 사항

- 동 계획은 환경부가 수립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에도 반영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행 점검

관리번호	4-2-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협조부서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사업기간	'20 ~ 계속	담당자	고덕규 서기관(044-201-6647)

□ 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온실가스 통계 구축·관리 체제를 구축·운영 중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 부처합동) 수립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 수단 및 이행체계 마련

□ 목표 및 추진전략

- 파리협정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감축 등에 대한 이행 노력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IPCC 지침을 기반으로 6대 직접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매년 공표
 -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공개

*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추진('20년~,매년)
 - 국조실, 환경부 주관 하에 부문별 이행지표 목표 달성 실적 및 2030 온실가스 로드맵 배출목표를 비교하는 종합평가 실시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20년~	3	-	-	-	3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

관리번호	4-2-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협조부서	기획재정부
사업기간	2019 ~ 2022	담당자	신우철 사무관 (044-201-3874)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휴게소 등 고속도로 상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수소차 보급·확산 활성화 및 수소차 이용자들의 장거리 이동 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충전소 확충 시급

□ 목표 및 추진전략

-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심각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수소전기차의 보급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조속 구축
 -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환승센터 등 주요거점에 수소충전소 총39기 구축 (국비 구축분)
 - * '18.2.2, VIP 지시 “수소차량이 더 많이 보급되려면 수소충전 시설이 곳곳에 있어야”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서 수소자율주행차 시승 후)
 - * '18.5.17, VIP 지시, “전기차와 수소차는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늘려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18년부터 '2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60기 수소충전소 확대 추진
 - '18년 8기, '19년 13기, '20년 13기, '21년 13기, '22년 13기 착수 목표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22년(4년간), 총 357.5억원

- 공공 357.5억원(국비 357.5억원), 민간58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0년 130억, '21년 130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	~						
- 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	19~22	357.5	-	-	585	942.5	

□ 기타 사항

○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도공, 민간사업자 등과 다각적인 방안 지속협의

수소철도차량 기술개발

관리번호	4-2-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18 ~ 2022	담당자	허원석 사무관 (044-201-3949)

□ 현황 및 문제점

- 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저탄소 체제 구축이 시급
 - * '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37%로 상향('15.12, 파리 기후변화정상회의)
 - 타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적 철도*로의 교통체계 전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 디젤철도차량의 대안으로서 친환경 수소철도차량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필요
 - * 승용차 대비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 17.7% 수준

□ 목표 및 추진전략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17)」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철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수소열차 개발을 추진
 - 친환경 수소철도차량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디젤차량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전력인프라가 서로 다른 구간을 운행가능하여 향후 전력인프라 구축·유지보수비 절감 등도 기대
 - * 경원선(연천~월정리 29.9km) 등 기존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사업 지속 추진중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앞서, '18년도부터 철도 산업분야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기술개발 착수
 - 수소열차용 추진시스템 및 수소연료전지 등 설계, 수소열차 시험차량 기본설계 및 임시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19.12월)
 - 시험차량(2량 1편성) 제작 및 시험용 충전소 상세설계, 수소연료전지 동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을 거쳐 수소열차 확대 보급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8년 ~ 22년(5년간), 총 252억원
 - 공공 220억원(국비 220억원)
 - 민간(민자) 3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 55억원, '22년 : 32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18~'22	220	-	-	32	252	
수소 철도차량 기술개발	'18~'22	220	-	-	32	252	

□ 기타 사항

- 산업부 주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포함·추진중

미세먼지 정보관리기반 구축 및 친환경차 보급

관리번호	4-2-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협조부서	국토교통부
사업기간	'11 ~ 계속	담당자	송석섭 사무관(044-201-6882) 김태규 연구관(043-279-4560)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을 위해 배출량 자료 산출 공정 및 인프라 개선으로 배출원 관리 기반 구축
 - 배출량 자료 산출 공정 및 인프라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내실화 및 대기질 모델링의 신뢰성 향상 필요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차('11년~), 수소차('13년~) 보급 중
 -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충전시설 확대 등)에 힘입어 '19.1~3분기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6위 달성
 - * (수소차) 韓 2,145 > 美 1,538 > 日 539 > 獨 50 > 佛 49 > 英 46
 - ** (전기차) 中 493,061 > 美 160,413 > 노르웨이 38,796 > 獨 37,842 > 佛 27,874 > 韓 23,053

□ 목표 및 추진전략

-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통계 개선 및 원인규명 강화
 - 체계적인 통계관리 등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전문성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및 신뢰도 향상

- '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누적) 보급
 - ※ 2030년 전기·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 ('30년 목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9.10)

-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충전인프라 구축 등 수요정책과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등 공급정책을 병행 추진

* 자동차 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차 판매의무를 부과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관리 기반 구축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전문분야에 기반한 배출원 특성·현황·저감방안 연구, 민간차원 국제협력, 중앙·지방 연구기관간 협업 추진('20~장기계속)
 - 미세먼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누락 배출원 발굴, 미산정 배출량 보완 연구 추진('19~장기계속)
 -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NEAS)* 개발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영향 규명('20~'22)
 - * NEAS : 대기 중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이동·확산을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친환경차 보급 추세와 연계하여 수소충전소는 '22년 310개소,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당초 계획('22년 1만기)에서 진전된 '25년 1.5만기 구축 추진
- '21~'25년까지는 보조금 등 수요정책 위주로 보급 활성화를 추진 하되,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비용균형 달성시점('25년경)에는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위주의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보급 활성화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미세먼지 정보기반 구축) '20년~'24년까지 총 1,120억원 투자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31,536억원, 수소차 35,591억원 투자 전망(국비 기준)

* '26년 이후부터는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 미확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세부사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
세부실천과제(합계)	11,621	14,177	16,663	15,093	12,001	69,735
- 미세먼지 정보기반구축	125	114	230	248	223	1,120
- 전기차(전기충전기 포함)	8,002	8,211	8,731	6,564	4,461	35,969
- 수소차(수소충전소 포함)	3,494	5,852	7,702	8,281	7,317	32,646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68,247	33,564	-	-	101,811	
- 미세먼지 정보기반구축	'20~'24	1,120	-	-	-	1,120	
- 친환경차 보급 확대	'11년~	67,127	33,564	-	-	100,691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관리번호	4-2-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국제협력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년~계속	담당자	한명실 서기관(044-201-6564)

□ 현황 및 문제점

- (다자/양자 환경협력)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 환경협력(청천계획),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연구(LTP) 등 미세먼지 저감 등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체계적인 환경협력 계획 이행관리 체계 구축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다양한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 강화·확대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청천계획) 협력사업(3대 분야 6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체계적으로 이행 점검(계획확정→이행점검→이행결과보고)

* ①대기오염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대기오염물질 입체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관측 및 수치모델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8대 우선 협력분야*에 대한 3국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25) 수립('20.11월) 및 이행상황 점검·공유

* ①대기질 개선, ②순환경제, ③해양·물 환경관리, ④기후변화 대응, ⑤생물 다양성, ⑥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⑦녹색경제로의 전환, ⑧환경 교육, 대중인식과 참여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년~	4	-	-	-	4	-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관리번호	4-3-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협조부서	부동산평가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문영훈 사무관 (044-201-3399)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형평성 저하

- 토지소유자의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하는 등 토지 소유의 편중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우려
- 공시가격은 과세·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나, 낮은 시세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불균형으로 공시 전반에 비판 제기
 - * '19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추진 중이나, 제도 도입('89년) 시부터 누적된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한계
-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휴토지가 증가하는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 발생

□ 목표 및 추진전략

○ 토지의 공적기능 실현과 토지시장 질서 확립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운영 및 토지 정보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등으로 토지시장 질서 확립
-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일관된 제고를 통해 유형·가격·지역 등에 따른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제도개선
- 공시가격의 정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정기준,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토지의 공적기능 실현과 토지시장 질서 확립 추진

- 전담조직 신설 등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운영 및 토지정보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20)
-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역기능 발생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21)
-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일관된 제고를 통해 유형·가격·지역 등에 따른 불균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정보공개 확대('20)
 - * '20년 공시부터 세종시에 대해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초자료 제공 시범사업 시행, '21년부터 공개항목·지역 지속 확대 예정
- 공시제도의 전반적 제도개선 및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편('20~21)
 - * 부동산공시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KRIMS)·개별(KRAS) 시스템 연계, GIS 도입으로 토지 특성정보 입력 자동화 및 산정가격 검증체계 고도화 추진 등

○ 토지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주거지 상실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생활보상 강화, 영농산업 및 장례문화 변화 등을 고려한 영농보상 개선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손실보상 기준 정비('20)

○ 국·공유지, 유휴토지 자원의 활용과 공공토지 비축의 효율성 제고

-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국·공유지 등의 활용방안 강구('21~22)
- 토지특성 및 여건에 따른 활용 방안 마련('21~22)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조절용 토지비축 및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20~21)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100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합계)	'21~'25	100	-	-	-	100	
-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편	'21~'22	100	-	-	-	100	통합서버 구축 등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관리번호	4-3-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산림청 (백두대간 보전팀)	협조부서	-
사업기간	장기계속	담당자	김일숙 사무관 (042-481-8813) 권순오 사무관 (042-481-4246) 나병인 사무관 (042-481-4224)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와 경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생태계 건강성 악화 및 생물종이 감소로 생태복원의 필요성 부각
 -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접경국간 산림복원 등 글로벌 패러다임 확산
 - * UN의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 선언('19.3),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해 30%의 생태계 복원(베이징 회담, '19.11), 접경국간 산림협력으로 세계평화 증진(PFI 출범, '19.9)
-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 부각
 -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 악화에 체계적 대응 필요
 - *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16)26 $\mu\text{g}/\text{m}^3$ → (17)25 $\mu\text{g}/\text{m}^3$ → ('18)23 $\mu\text{g}/\text{m}^3$)하고 있으나,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mu\text{g}/\text{m}^3$),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 $\mu\text{g}/\text{m}^3$)의 2배 이상임

□ 목표 및 추진전략

- 한반도 및 부속도서의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 백두대간, DMZ 일원, 도서·해안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 생태계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
 - 산림보호지역을 산림생태계서비스 핵심지역으로 기능 및 역할 강화
- 도시내 녹색 생태계 구축 확산
 - 도시숲 대상지의 규모·유형 등 여건에 따라 숲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도시숲 네트워크를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한반도 핵심생태축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복원 사업 추진
 -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기능과 구조를 회복시켜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 백두대간지역, DMZ일원, 도서지역, 도시생활권 등 산림생태복원(295ha/연)
 -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의 마루금을 연결·복원하여 민족의 상징성 및 산림경관 회복
 - * 단절된 백두대간 및 정맥마루금의 연결 복원(2개소/연)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보호구역 확대 추진
 - 전국 산림보호구역 규제지역을 현행화하고 공간정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도시 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대기순환을 유도하여 도시 외곽의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바람숲길** 조성(시공 11개소, 설계 6개소)
 - 산업단지, 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와 생활권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유입을 억제(15개 시도, 93ha)

< 산업단지 주변 완충숲 조성 사례 >

-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과 비교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짐*
 - * 미세먼지 12%, 초미세먼지 17% 낮아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18.3월)
 - * 시화공단 완충숲 : 2006~2012년 조성(약 24ha)



□ 투자계획(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30,211억원(공공)

○ 연차별 투자계획

- ('21~'25) 연도별 투자계획 : 8,966억원(공공)

(단위 : 억원)

세부 실천과제	계	'21	'22	'23	'24	'25	비고
계	8,966	2,692	1,989	1,451	1,417	1,417	
○ 산림복원	2,186	172	519	521	487	487	
- 산림생태복원	1,589	105	371	371	371	371	
- 백두대간생태축복원	597	67	148	150	116	116	
○ 도시내 녹색 생태계 구축	6,780	2,520	1,470	930	930	930	
- 도시 바람길숲	2,130	1,590	540	-	-	-	
- 미세먼지 차단숲	4,650	930	930	930	930	930	

- ('26~'40) 전체 투자계획 : 21,255억원(공공)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2,540	9,166	-	-	21,255	
○ 산림복원		5,565	2,191	-	-	7,305	
- 산림생태복원	'26~'40	3,896	1,669	-	-	5,565	
- 백두대간생태축복원	'26~'40	1,218	522	-	-	1,740	
○ 도시내 녹색 생태계 구축		6,975	6,975	-	-	13,950	
- 도시 바람길숲	-	-	-	-	-	-	
- 미세먼지 차단숲	'26~'40	6,975	6,975	-	-	13,950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관리

관리번호	4-3-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한시겸 사무관 (044-201-3615)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및 호우 발생 빈도 증가*로 홍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시행할 필요

* 집중호우 발생빈도(30mm/hr 이상) : 80년대 연간 6.6회 → 2010년대 연간 11.4회(73%↑)
 호우·태풍 피해액 규모(재해연보) : 2009년 이후 연 평균 3,000억원 이상

- 또한, 지방하천정비사업* 이양에 대응하여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의 정비에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

*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 : 3.1조원(연간 0.6조원 내외)

□ 목표 및 추진전략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사·계획·설계·정비·유지관리 등 하천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재구축하여 최적의 하천관리를 실현
-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하천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
 - 더불어,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국토 조성에 기여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하천 관련 법·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전주기적 하천관리를 실현
 - 계획단계 :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을 통해 권역별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적 홍수방어 제도 뒷받침을 위해 하천변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방안 마련
 - 정비단계 : 국가하천정비종합계획(M/P) 재수립 및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가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친주민 사업도 적극 시행

- 유지관리단계 : 생애주기 개념을 반영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화
 -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련 데이터를 공간정보화하여 RIMGIS(하천정보 관리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하천 정보를 관리·분석·제공
- 지자체의 원활한 지방하천 관리를 지원토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 추진
- 지방재정 여건 상 지자체가 시행하기 곤란한 대형 정비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지방하천을 점진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
 -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신속한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13.3조원
- 정비 : 공공 7.0조원(국비 7.0조원)
 - 유지관리 : 공공 6.3조원(국비 6.3조원)
- 연차별 투자계획
- 정비 : '21년 3,400억원, '22년 3,400억원, '23년 3,400억원, '24년 3,400억원, '25년 3,500억원
 - 유지관리 : '21년 2,033억원, '22년 2,133억원, '23년 2,233억원, '24년 2,333억원, '25년 2,433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132,600	-	-	-	132,600	-
- 국가하천정비	'21~계속	69,600	-	-	-	69,600	-
- 국가하천유지관리	'21~계속	63,000	-	-	-	63,000	-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관리번호	4-3-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관리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19년 ~ '23년 '20년 ~ '23년	담당자	문종진서기관(044-201-7624) 배기철사무관(044-201-7652)

□ 현황 및 문제점

- 이상기후 등에 대비 하천유역별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 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필요
- 공급자 중심의 단순 홍수정보 제공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일반 국민, 지자체, 유관기관 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미흡

□ 목표 및 추진전략

-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 등 5대 권역별 이수·치수·하천환경을 총괄하는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추진
* 수립기간 : '19. 12. ~ '22. 12. 사업비 : 133억원
- **(홍수정보체계 개선)** 수요자(일반국민, 지자체, 유관기관 등) 중심의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으로 홍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관측값 위주의 단순 홍수정보 제공이 아닌 실제 홍수위험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별 다양한 홍수정보를 전국 단위로 제공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19~'22)**
 - (이수관리계획) 유역내 장래 물공급과 물수요를 분석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을 확인하고, 물부족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제시

- (치수관리계획)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주요 구역별 홍수방어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적·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책 제시
- (하천환경관리계획) 하천의 물리특성 및 수생태, 수질 현황에 따라 하천환경을 평가하고, 하천환경 개선방안 제시

○ 홍수정보체계 개선

- 친수활동, 홍수 이력 및 통계 등 수요자 중심의 홍수정보 콘텐츠 개발('20~'21)
- 홍수통제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수정보 웹사이트를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일괄된 형태로 제공('22~'23)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19~'22) 133억원,
- 홍수정보체계 개선('20~'23) 7억원 등 '23년까지 140억원 투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140.2				140.2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9~'22	133	-	-	-	133	
- (홍수정보체계 개선)	'20~'23	7.2	-	-	-	7.2	

수돗물 안전성 확보

관리번호	4-3-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17년 ~ 계속	담당자	이지선 사무관(044-201-7114)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19.5), 서울 문래동('19.6) 적수사고 등 수돗물 안전 사고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 확대

□ 목표 및 추진전략

-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게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관망 현장조사 강화, 관망 진단 결과 사후 조치 의무화 및 노후지역 중점관리 등 관망 관리, 정비 시설 선진화 및 노후관리 정비사업 확대 실시 추진
 - 관망 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전 지자체로 확대(市→郡까지)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누수복구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의무화('20)
 - 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원)으로 기 추진 중인 노후관 정비사업(갱생, 교체)의 목표 달성기간 단축 추진('17~'28년 → '24년)
 - 전국 노후관 추가 정밀조사('19.10~'22, 3년간)를 통해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정비대상을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22~)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30,96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17,880	13,082			30,962	
- (먹는물 안전성 확보)	'17~'24	17,880	13,082			30,962	

하수 재이용 사업

관리번호	4-3-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협조부서	예산
사업기간	'11년 ~ 계속	담당자	박상수 사무관(044-201-7024)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간 수자원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고질적인 물 분쟁 해소 및 국지적인 물 부족* 대처방안 마련 등 합리적 물 배분 중요성 대두
- * 도서, 산간지역 등 일부지역은 연간 1.9~4.0억^m 물부족 전망('20년 가뭄빈도 기준)
- 수질·수량 전반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 및 대책 마련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용수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낭비 없는 물 순환체계를 위해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활용한 물이용 건전성 제고
-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 필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물 재이용 공급에 의한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래 국가 물 공급 안전망 확보를 위해 2단계 국가 물 재이용기본계획 ('21~'30) 수립중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1년~20년(10년간), 총 7조 251억원

- 공공 4조 6,847억원(국고 2조 2,402억원, 지방비 2조 4,445억원)

- 민간(민자) 2조 3,40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8월경 소요예산 추정 가능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하수재이용사업)	'11~'20	22,402	24,445	-	23,404	70,251	

* 1단계('11~'20) 기본계획이 종료될 예정으로 2단계('21~'30) 기본계획 수립 중(~'20.12)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관리번호	4-3-사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1년 ~ '25년	담당자	이명순 사무관(044-201-7313)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 외부유입 오염원 등 환경이슈에 대한 대처 한계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 및 해양오염발생 지속 증가
- 해양공원 관리의 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 조사·연구 미진
 - 인위적 교란 요인(미세플라스틱, 해양레저행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부족

□ 목표 및 추진전략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환경이슈 대응 조사·연구체계 강화 (4개 공원 '23년)
-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 인위적 교란요인 조사·연구 강화(7개 분야, '23년)
- 해양 관련 기관·단체 연구네트워크 구축(30개 기관)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를 위한조사·연구체계 확립
 -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무인 수온-염분 관측시스템 운영(홍도 등 7개 도서)
 - 무인 수온-염분 관측시스템 연차별 확대('20년 7개소→'23년 18개소)
 - 해양 기후변화 지표종 추가 선정 및 모니터링 추진(총 20종)
 -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으로 조사방법 간소화·표준화('20년)
- 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장기모니터링

- 태안지역의 해양환경, 해양생물 등 16개 분야 계절별 조사 수행
- 국립공원 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진단(총 52개 정점)
 - 공간별·계절별 양상, 플라스틱 유형분류를 통한 발생원 추정 등
- 인공구조물 및 유해 교란생물 관리 강화
 - 폐어업시설, 옹벽, 인수관 등 인공구조물 철거 및 경관개선(6개소)
 - 갯줄풀, 불가사리 등 유해·교란생물 제거(7개소)
- 해양-육상 단절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시행
 - 향포구 인근 훼손지 복원사업(17개소) 및 대추귀고동, 갯계 등 해안지역 국가보호종 서식환경 개선(3개소)
- 조사·연구 협력을 통한 해양공원 보전 역량강화
 - 해양공원별 산·학참여형 조사연구협력체 구축(6개사무소, 30개기관)
 - 바이오블리츠 프로그램형 현장교육 시범 도입(년 2회)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183억원('21~'25)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출현	기타			
○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	183	-	-	183	
- 인공구조물 및 유해생물 관리	'21~'25	-	116.5	-	-	116.5	
- 단절생태계 복원	'21~'25	-	19	-	-	19	
- 조사연구 협력강화	'21~'25	-	15	-	-	15	
- 해양기후변화 동향연구	'21~'25	-	12.5	-	-	12.5	
- HS 유류유출 장기모니터링	'21~'25	-	20	-	-	20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 이용체계 구축

관리번호	4-3-아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협조부서	과기정통부
사업기간	2017~2021	담당자	김정자 사무관 (044-200-5318)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개발계획 등 해양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점식 난개발로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이 훼손
- 해양공간의 생태계 기반 계획적·통합적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정책지원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전 해역의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공간분석체계 구축
- (추진전략)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21)
 - * (2017~2018) 대표생태태계서비스 평가 및 시스템 설계
 - (2019) 가상 의사결정시스템 시범해역(남부해역) 적용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전 해역 생태기반의 해양이용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양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해양공간 분석 기술 개발(~'21)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7년 ~ '21년(5년간), 총 170억원(전액 국비)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 이용체계 구축	'17~'21	170					
-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 분석·활용기술 개발	'17~'21	170					

연안 및 해양환경의 관광자원 활용

관리번호	4-3-자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협조부서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사업기간	2021~2024	담당자	윤복근 사무관 (044-200-5277)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우리나라에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고, 아름다운 경관·고유 생태계·문화 등 관광 콘텐츠로서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섬관광 활성화 미흡**
 * 섬 관광객 수도 '08년 이후 큰 변동없이 정체 상태('08년 521만→'18년 551만)
- (문제점) 접근성·편의시설 부족, 고비용 등 **장애요인과 부처별 정책 분산***, 개발 규제 중심의 도서 정책으로 **관광 여건 개선이 어려움**
 * 무인도(해수부), 유인도(행안부) 및 개별사업(예: 정주여건-행안부, 도로·교량-국토부) 기준 크게 4개 부처 연관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 선도사례 육성) 지역 교통 거점(KTX역·공항)이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섬 관광 자원을 갖춘 권역을 **섬 관광 활성화 지역 선도사례**로 육성
 * 예시) 서남해안(다도해상국립공원) 권역(목포 KTX역-무안공항 연계)
 - 어촌뉴딜(해수부), 관광거점도시(문체부), 지자체 자체 사업 등 기존 추진 사업 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섬 관광 장애요인 개선) 접근성 개선 및 고비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 **접안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요트 등 레저선박, 국제크루즈선박(텐더보트 연계), 국내 연안크루즈, 수상항공기 등
 - 구체적인 **섬관광 프로그램**을 상정(청년그룹과 협업)하고, 이를 구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실효성을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섬 관광 명소 조성('20~)

- 미술관(예: 일본 나오시마, 테시마 등), 한류스타 드라마·영화 촬영지 등을 활용한 휴양·체류형 테마 섬 조성

- 관광객이 여러 섬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호핑투어*'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섬 호핑투어 상품 개발

* (Hopping Tour)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면서 해양레저, 먹거리, 휴양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

** 기재부 현장밀착형 선도모델 사업(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과 연계 추진

○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20~)

- 이동수단 연계(KTX·항공 ↔ 레저선박·연안여객선) 기반으로 공항 또는 KTX역 인근 및 주요 섬 선착장 내 레저선박(요트·파워보트 등) 계류 시설 조성, 짐 보관소·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 확충(해수부)

- 연안여객선 현대화 및 여객선 할인권 다양화(해수부) 등

○ 연안크루즈 도입 및 체류환경 개선('21~)

- 연안크루즈를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의 섬관광 편의성*을 제고하고, 크루즈터미널이 위치한 지방과 연계하여 기항지 관광도 활성화

* 크루즈로 외국인 관광객의 섬에 대한 접근성 높이고, 섬에 부족한 편의시설 보완

- IOT 연계 이동수단(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빈집 등을 활용한 특화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 관계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20~)

- '섬 관광 활성화 MOU'('19.2, 해수부-문체부-국토부-행안부) 협의회 정례화 및 참여 범위 확대(농림부·지자체 등)

- 섬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특히 청년여행가·청년여행벤처 등과 협업체계 구축·활용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4년(4년간), 총 4,110억원

- 공공 4,250억원(국비 3,405억원, 지방비 845억원)

* '21년도 신규사업은 예산당국 협의 후 반영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11개 실천과제(910억원), '22년 9개 실천과제(1,260억원),

'23년 3개 실천과제(540억원), '24년 1개 실천과제(200억원)

*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 기투자금액('16~'20년 1,340억원 제외)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연안 및 해양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합계)		3,405	845	-	-	4,250	
섬 관광 명소 조성		745	745	-	-	1,490	
- (가고싶은 섬 조성)	'21~'24	505	505	-	-	1,010	
- (호핑투어 상품 개발)	'21~'21	10	10	-	-	20	
- (K-POP 바다분수)	'21~'22	100	100	-	-	200	
- (K-Fish거리 조성)	'21~'22	25	25	-	-	50	
- (해양테저체험시설조성)	'21~'22	100	100	-	-	200	
- (국제요트대회 유치)	'21~'21	5	5	-	-	10	
접근성 개선 사업		2,520	100	-	-	2,620	
- (연안여객선 현대화)	'16~'22	2,420	-	-	-	2,420	
- (목포내항 마리나 항만 조성)	'21~'22	100	100	-	-	200	
연안 크루즈 도입 등		140	-	-	-	140	
- (연안 크루즈 시범 운영)	'21~'23	90	-	-	-	90	
- (크루즈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	'21~'23	30	-	-	-	30	
- (크루즈 관광객 편의성 개선)	'21~'22	20	-	-	-	20	

연안정비사업 추진

관리번호	4-3-차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항만연안재생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2029	담당자	노소영 사무관 (044-200-5985)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10년마다) 및 시행
 - 제2차 연안정비사업('10~'19) 시행 결과, 2차 침식에 대한 고려 부족, 과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 친환경적인 대응 노력 미흡 등에 한계
 - * 제2차('10~'19)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 목표 및 추진전략

- 연안침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설물 계획을 반영하고 토지 매입 등 친환경 모델 도입하는 제3차 연안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 (2차침식 방지) 재해 대응 구조물 설계 과정에서 2차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부적 배치 계획을 배제하고 표사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 *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모래 유·출입 등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역 범위
 - (친환경적 대응) 시설물(수중방파제 등) 설치 위주의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양빈 등 친환경 공법을 확대하고 신규사업모델(몽돌해변 등) 검토
 - (친수연안사업) 매립 및 과도한 인공구조물 조성 사업을 배제하고, 2차 침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수사업 반영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대한 연안 283개소 사업을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연안보전)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249개소
 - (친수연안)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산책로 등 연안자원 활용도 제고 및 연안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친수시설 사업 34개소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9년(10년간), 총 2조 3,009억원
 - 공공 2조 3,00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0년 65개소(1,233억원), '21년 17개소(1,393억원), '22년 22개소(1,944억원), '23년 36개소(1,947억원), '24년 20개소(2,050억원), '25년 20개소(2,175억원)
 - '26~'29년 103개소 12,267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연안정비사업(283개소)	'20~'29	16,725	6,284			23,009	
- 연안보전사업(249개소)	'20~'29	16,021	5,515			21,536	
- 친수연안사업(34개소)	'20~'29	704	769			1,473	

□ 기타 사항

- 제3차 연안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연안심의위원회 (해수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고시 예정(6월초)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리번호	4-3-카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구본찬 사무관 (044-200-5261)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해양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개별 수요가 발생하면 허가하는 식으로 이용·개발되어 오면서 바다에서의 갈등 증가
-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각 해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국가계획체계 구축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추진전략]

1.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체제 구현
2.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3.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4.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5.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인프라 강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역별 특성과 현안,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통합관리 기반 구축
- (해양공간특성평가 고도화) 특성평가 활용정보와 분석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해양활동간 상호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해 상층정도 지속 분석
 - *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특성평가 수행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22)
-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구축) 해양공간정보의 산업적 활용 등을 위한 생산·제공·분석을 지원하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 * (~'22)해양수산정보(770종) 수집·연계 → (~'23)해양공간정보의 생산·제공 표준체계 구축 → (~'25)해양공간정보의 분석 및 전달을 위한 시각화(3D) 기술 개발·보급 → ('26~'40) 해양공간정보 분석·활용 기술(디지털트윈 등) 개발
- (국제협력 강화) 여건성숙시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남북 해양공간관리 협력기반 구축 및 접경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추진
- (전문성 강화, 인식 증진)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등 대상 교육·홍보를 통해 정책공감대 형성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 '20년 :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플랫폼 구축(47억원)
 - '21년~ : 예산당국과 재정투자계획 협의 예정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합계)	-	47	-	-	-	47	
-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플랫폼 구축	'20	47	-	-	-	47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관리번호	4-3-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협조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김용수 사무관 (044-201-3769)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향, 에너지전환정책 등 여건이 변화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건축 정책 강화 필요
 - '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건축물부문은 '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32.7% 감축*이 요구됨
 - *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18.7) : 28.7백만톤 추가 감축(18.1% →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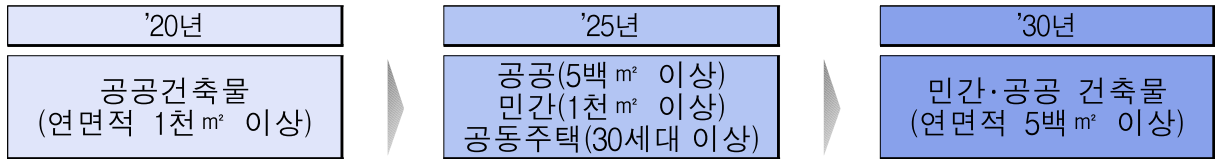
□ 목표 및 추진전략

- 에너지전환정책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건축의 역할 확대 필요
 - (신축 건축물) 다양한 요소기술*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확대
 - * 패시브기술(고단열, 고기밀창호, 외부차양 등), 액티브 기술(BEMS, LED, 고효율설비 등)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태양광패널, 태양열급탕, 지열냉난방 등)
 - (기존 건축물) 지원다양화 및 관련 산업 기반확충 등을 통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모
 - *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녹색건축법 제27조)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20년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선도사업 시행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의 성과 확산

* (사업지구) 구리갈매, 성남복정, (주요일정) 지구단위 기본계획 수립('20.6) → 착공('20년말) → 준공('23년)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2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21이후 단계별 추진) 및 민간건축물 지원방안 다각화('21~)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모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계속('40년까지 약 7,800억원)

- 공공 2,528억원(국비 2,500억원), 민간 5,300억(국비 5,3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155억), '22년(168억), '23년(183억), '24년(200억), '25년(217억)

- '26~'40년 약 7,200억원 예산 투입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합계)	-					7,838	
- 제로에너지 신산업 육성	장기계속	1,560	-	-	-	1,560	-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장기계속	960	-	-	5,310	6,270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업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투자계획은 '20년~'40년까지 작성

□ 기타 사항

○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20~'24)」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강화 (재생에너지사업 갈등관리)

관리번호	4-3-파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협조부서	산업부, 산림청
사업기간	'20년	담당자	한상욱 주무관(044-201-7278)

□ 현황 및 문제점

- 풍력발전은 주력 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대폭 확대 예정이나 보급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 사회적 갈등 문제 심화
 - 풍력자원 풍부, 저렴한 지가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설의 산지 입지 선호로 자연생태 및 경관훼손, 재해 우려 등 주민갈등 야기

□ 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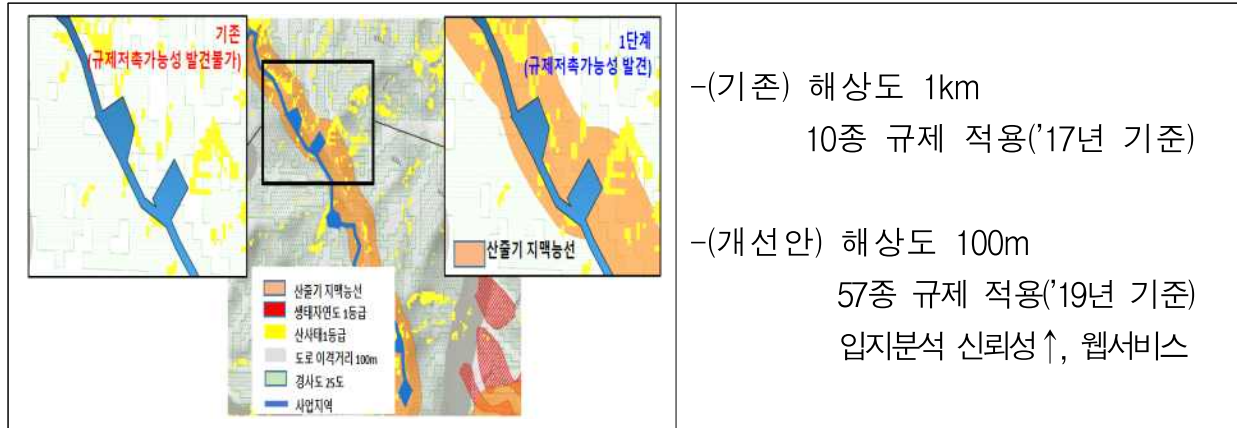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회적 갈등 해소
 - 육상풍력 입지지도 구축, 재생에너지 계획적 입지 유도 등으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지원 및 환경성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육상풍력 예정부지의 풍황,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우리부 1억)
 - 지자체, 사업자가 발전사업 입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환경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

- ▶ (1단계, ~20.3월) 풍황, 환경규제 정보 통합 및 업데이트
- ▶ (2단계, ~21.말)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산림규제 구체화, 웹서비스 등

<육상풍력 입지지도 구축안(예시)>



○ 재생에너지 추진 문제점 분석 및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21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성, 지속가능성 및 주민수용성 등의 확보 방안 마련

※ 재생E 계획적 입지를 위한 환경성평가 방법 연구용역 실시('19.12~)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1.4억원('20~'21)

※ 육상풍력 입지개선 방안(1억), 재생에너지 환경성 평가 방법(0.4억)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출현	기타			
○ 재생에너지 환경성 제고		1.4	-	-	-	1.4	
- 육상풍력 입지개선 방안	'20-'21	1.0	-	-	-	1.0	
- 재생에너지 환경성 평가방법	'20-'21	0.4	-	-	-	0.4	

개성과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관리번호	4-4-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협조부서	지자체
사업기간	2020~2033년(13년)	담당자	정문희 사무관 (044-201-3779)

□ 현황 및 문제점

- 경남 남해, 전남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우수한 경관자산을 발굴·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일부 경관자원이 우수한 지역들 중 무분별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 빈번
 - 지역의 훼손경관을 복구하고 지역성을 가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간계획이 반영된 지역 디자인 관리가 필요
 - * 해외의 경우 지역 특색을 지닌 경관 지역에 어울리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디자인 관리를 병행해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 다수
- 한옥 등 보전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이 지역의 관리역량 부족 등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훼손 되고 있어 우수 경관자원으로서 체계적 관리 필요
 - * 최근 건축자산과 유사한 근·현대 산업유산 및 100년 내외 건축가 작품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추세(예_스페인 ‘가우디 건축작품’ 등)

□ 목표 및 추진전략

- 우수 경관자원 조사·발굴을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형성 유도 및 DB 구축 등을 통한 선진화된 국토경관 자원관리 기반 구축

- 국민 참여수단 다양화, 경관협정 활성화를 통한 국민 경관관리 인식 개선 및 지역 우수 경관자원의 지속적 선순환관리 체계 마련
- 공공선도사업 추진과 우수경관 지정을 통한 경관자원 관리·활용 도모
 - 지역별 고유 경관자원에 대한 지속적 경관관리 수준 진단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전 국토의 경관디자인 수준 및 관리역량 강화
- 국가 주요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한 다기능화와 경관 품격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토 경관자원 조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우수 경관자원을 발굴·관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 마련
 - * 국토 전체에 대한 경관관리 일원화를 위한 경관자원특성화도 작성
 - 지역에서 조사·발굴 된 경관자원 중 보존가치가 높은 우수경관을 선정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 * (예시) 지역 으뜸경관 10선 선정, 해안경관도로 15선 선정 등
- 국민이 요구하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경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 지원
 - 국민 참여가 필요한 공공지원 사업 시행 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경관관리 환경 조성
- 국가 대표경관 및 지역 우수경관 선정 등 국토 고유 경관자원(자연, 문화재 등)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국토의 매력도 제고
- 경관형성·보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의 경관자원 관리 등에 대한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수준진단 및 평가 실시

- 국가 중요 기반시설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 추진 시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SOC 통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는 경관 시범사업(예_경관도로)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33년(13년간), 총 357억원
 - 공공 357억원(국비 205억원, 지방비 15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25년) '21년: 7.5억원, '22년: 6억원, '23년: 4.5억원, '24년: 7억원, '25년: 55억원 ☞ 총 80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25억원)
 - ('26~'40년) 277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27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개성과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합계)	2020~2033	205	152	-	-	357	-
- 경관자원 발굴조사 지원	2021~2030	42	-	-	-	42	-
- 국가·지역 우수경관 선정	2023~2033	2	2	-	-	4	-
- 국민 참여수단 구축 지원	2020~2023	5	-	-	-	5	-
- 경관관리 평가체계 마련	2020~2024	3	-	-	-	3	-
- 국가 핵심 기반시설 경관개선 사업	2022~2030	153	150	-	-	303	-

□ 기타 사항

- 단계별 성과관리 체계(1단계: 실적 취합 → 2단계: 평가·활용)를 마련하여 세부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추진

국립공원 해양 생태축 관리

관리번호	4-4-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년 ~ 계속	담당자	이명순 사무관(044-201-7313)

□ 현황 및 문제점

- 개별 해양국립공원의 조사·모니터링은 이뤄지고 있으나 생물종 서식지 중심의 광역 해양연안생태축 관리는 미흡
- 비가시적인 해양환경의 특성을 첨단 기술 활용으로 극복하여 해양 국립공원의 도서·해중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출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해양생태축 기본조사 강화를 통한 서식지 단위의 관리 정책 수립
- 가시화된 해양서식지 정보 취득을 통한 생태경관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 시행(태안~한려, 98개 정점)
 - 수온, 염분 등 해양환경 특성 분석 및 연체동물 등 7개 분류군의 현존량과 종조성 등 해양생물 분포 특성 조사
 - 해양지형·기질도 제작을 통한 가시화된 서식지 정보취득(한려해상)
 - 정밀음향측심기 운용과 영상분석을 통한 조하대 지형·기질도 제작(195km²)
 - 드론 정밀 측량 등을 활용한 조간대 지형·기질도 제작(284.3km²)
 - 공간정보 기반의 해양생태자원도(202개 주제도) 제작 착수('21년~)
- ※ 해양생태자원도는 해양지형기질도 + 생물 및 해양환경 특성정보가 병합된 자료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135억원('21~'25)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출현	기타			
○ 해양생태축 관리			135			135	
- 해양생태축 기본조사	'21~'25	-	110	-	-	110	
- 해양지형기질도 제작	'21~'25	-	25	-	-	25	

통합적 관리를 통한 도시공간의 품격제고

관리번호	4-4-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협조부서	지자체
사업기간	2020 ~ 2029(10년)	담당자	방대혁, 정문희 사무관 (044-201-3778,9)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은 도시미관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자원이나, 개발시대 양적성장에 치중하면서 디자인이 획일화되고 사용자 배려가 부족
 - '18년 기준 30년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약 5만동(전체 23.8%)수준으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디자인 및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 필요
- 현재 대다수의 지역들이 단발성으로 추진되는 일회성 사업들로 인해 지역 전체를 고려한 조화롭고 개성 있는 지역경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인해 천편일률적인 낙후된 이미지를 양산해 내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분야별(도시, 건축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전문가가 총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확대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확대) 우리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및 지자체 대상 교육 등 지속적 독려로 전국적 위촉 확산 추진

* '20.1월 기준, 전국 총괄건축가 23명('19년초 5명), 공공건축가 559명 위촉

- (공관관리 소외 해소 필요) 도시경관 취약지역의 정비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등을 통한 경관관리 소외대상 해소
- (경관심의 내실화 등) 새로운 경관 조성 시 기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내실화 하고 경관관리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민간전문가 지원확대) 총괄·공공건축가가 기관 내 디자인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조성
 - 지자체의 디자인 관련 업무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대상'을 '20년부터 10개소 확대운영 지원'
 - * '19년은 8개소(광역3/기초5)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창출 도모(총 5.28억)
 - '20년은 지원 대상을 10개소로 확대하여 제도 정착 및 확산 도모(총 10억)
 - **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가 활용 의무화('19.7), 전문가DB 구축 및 '민간전문가 제도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19.7)
-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경관관리가 미흡한 비도시지역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관된 타 계획·제도와 연계하여 총체적 관리 강화
 - 주요 관리대상은 경관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타 법의 정책과 협업체계 구축
- (경관관리 구역·지정 활성화) 집중관리 대상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방안 마련
- (경관제도 운영 효율화) 경관 심의 기준과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사전 검토 제도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경관제도 운영 도모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9년(10년간), 총 609.6억원
 - 공공 609.6 (국비 309.6억원 , 지방비 3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0~'25년) '20년: 61억원, '21년: 63억원, '22년: 64.2억원, '23년: 61.2억원, '24년: 60.2억원 ≡ 총 309.6억원(국비 159.6억원, 지방비 150억원)
 - ('26~'29년) 240억원(국비 120억원, 지방비 120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0~29	309.6	300	-	-	609.6	-
- 민간전문가 지원확대	20~29	300	300	-	-	600	-
-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20~23	5	-	-	-	5	-
- 경관관리 구역·지구 활성화	20~22	1	-	-	-	1	-
- 경관제도 운영 효율화	20~24	3.6	-	-	-	3.6	-

자연과 조화된 농촌 경관 조성

관리번호	4-4-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협조부서	환경부, 기재부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정수진 사무관 (044-201-1558)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경관 정비) 농촌 환경을 재정비하고,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다움을 제고할 수 있는 농촌 경관 정비 필요
 - 국토종합계획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 경관 향상 등으로 매력있는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
- (농촌경관 훼손)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 등 유휴시설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축산 악취 발생 등 농촌 경관 훼손
 - 경관인식조사에 따르면, 농산어촌 경관관리가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
 - * 경관 중 관리미흡 부분 : 농산어촌경관(29.7%), 자연경관(23.1%), 시가지경관(21.8%), 역사문화경관(16.3%), 도시기반시설경관(9.1%)(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 가축 분뇨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악취·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노후 농기계 사용, 비산 먼지 등 미세먼지도 농촌 오염의 원인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환경적 가치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이 즐겨 찾고 거주민이 행복한 농촌 경관 조성 및 관리
- (추진전략) 빈집 철거, 유휴시설의 재생 및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농촌경관을 정비하는 한편, 오염원 관리로 생활환경 정비

- ① (농촌다움 제고) 경관작물 재배, 농업유산 등 농촌 경관 활성화 지원 추진
- ② (환경저해요소 관리) 가축분뇨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원·교육 추진
- ③ (농촌환경정비) 빈집·유휴시설 정비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농촌다움 제고) 경관작물 범위 확대, 최소 면적기준 완화 및 재배면적 확대** 지원하고 마을경관관리활동비 등 **경관보전 사업 신설**(‘21년)
 - * 지원면적 : (‘21) 13,600ha → (‘22) 13,600 → (‘23) 16,130 → (‘24) 16,130 → 16,130
 - 경관·생물다양성 등 농업의 중요 유산 지속 발굴(‘21년 2개소) 및 자원 보전·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 * 농업유산 보전관리 : 국가중요농업유산 8개소 보전관리 5.6억, 모니터링 1.6억원
- **(환경저해요소 관리) 가축분뇨 위탁처리·악취저감시설 확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악취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공동자원화시설 : (‘21) 87개소 → (‘25) 97, ICT장비 설치 : (‘21) 340개소 → (‘25) 740
 - (인식개선) 농촌지역 영농잔재물 수거, 소각방지 등 농업인의 인식개선 교육 및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실시
 - * ~’40년까지 홍보물 600만장 배포(미세먼지 저감 포스터 및 농업인 행동요령 등)
- **(농촌환경정비) 농촌마을 빈집(매년 7천동) 철거 및 마을단위 종합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21년)하고 유휴시설은 농촌경관과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건축전문가 지원(매년 20동)**
 - * 빈집철거 : ’21~’25년까지 3.5만동(750억원), ~’40년까지 14만동(3,000억원)
 - 유휴시설 리모델링 : ’21~’25년까지 100개소(225억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49,750억원
 - 공공 46,840억원(국비 32,897억원, 지방비 13,943억원)
 - 민간(민자) 2,911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9,160억원
 - (‘21) 1,606억원, (‘22) 1,780, (‘23) 1,906, (‘24) 1,934, (‘25) 1,934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1~'40	32,897	13,943	-	2,911	49,750	
- 농촌빈집정비	'21~'40	-	3,000	-	-	3,000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21~'25	113	113	-	-	226	
- 가축분뇨처리지원	'21~'40	29,762	8,331	-	2,911	41,003	
- 소각 방지 교육·홍보	'21~'40	20	-	-	-	20	
- 경관보전직불	'21~'40	2,304	2,304	-	-	4,608	
- 농업유산	'21~'40	698	195	-	-	893	

□ 기타 사항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필요(기재부, 환경부 등)

전통마을숲 복원 및 산림경관숲 조성

관리번호	4-4-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장기계속	담당자	나병인 사무관 (042-481-4224)

□ 현황 및 문제점

- 농산촌의 개발로 인해 보존되어 오던 전통마을숲의 훼손 심화
 - 전통마을숲은 역사·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생태·경관적으로 보전하고 잘 관리할 필요
- 전통마을숲 및 산림경관숲 조성 사무가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산림청에서는 주요 정책 방향 결정 및 사업 지원 역할만을 수행

□ 목표 및 추진전략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숲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문화·환경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원 확대
-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경관숲 조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전통마을숲 발굴 및 복원 확대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숲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문화·환경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원 확대
 - 전통마을숲 중 역사·문화·전설·토착신앙 등의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례 발굴·확산

- 전통마을숲 활용 및 관리 체계 마련
 - 지역 내 주변 관광지 연계 등 마을숲 특성화로 활용 확대
 - 마을숲별 스토리텔링 구축, 전국 전통마을숲 DB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전통마을숲 명소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지역 특화 경관숲 조성 및 관리
 -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경관숲 조성
 - * 조경수 전시포, 야생화원, 무궁화원, 도로변 꽃나무 식재 등

□ 투자계획(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총 760억원(공공)
- 연차별 투자계획
 - ('21~'25) 연도별 투자계획 : 190억원(공공)

(단위 : 억원)

세부 실천과제	계	'21	'22	'23	'24	'25	비고
전통마을숲 복원 및 산림경관숲 조성	190	38	38	38	38	38	

- ('26~'40) 전체 투자계획 : 570억원(공공)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전통마을숲 복원 및 산림경관숲 조성	'26~'40	-	570	-	-	570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

관리번호	4-4-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9~장기계속	담당자	명상순 사무관 (044-200-5302)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톤* (초목류 제외 시 8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8~9만톤만 수거·처리

* 육상기인 65%, 해상기인 35% → 초목류 제외 시 해상기인 60%

- 수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섬 지역 등 사각지대 관리체계 및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 (목표)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각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수거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정책으로 전환

-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 발생량 저감을 통해 '30년까지 해양쓰레기 현존량 50% 저감을 추진

* (현존량) '18) 14.9만톤 → ('30) 6.4만톤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발생예방) 폐어구·폐부표, 하천 유입 쓰레기, 외국 기인 폐기물 등 발생 원인별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 (수거·운반체계 개선) 도서 등 사각지대 관리방안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참여 독려, 기술 개발 등 수거체계 효율화를 통한 수거·운반 체계 개선
- (처리·재활용 촉진) 보관시설 확충, 재활용 의무율 상향 및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등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재활용 활성화
-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해양폐기물법 하위법령 제정,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대국민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등 관리기반 강화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23년(5년간), 총 10,687억원
 - 국비 8,121억원, 지방비 2,56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합계)	~	8,121	2,566	-	-	10,687	-
- 발생예방	'19~'23	2,090	931	-	-	3,021	-
- 수거·운반체계 개선	'19~'23	4,657	1,254	-	-	5,911	-
- 처리·재활용 촉진	'19~'23	959	381	-	-	1,340	-
- 관리기반 강화, 국민인식 제고	'19~'23	415	-	-	-	415	-

*제3차 해양쓰레기 기본계획 상 투자소요로, 추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경관 향상

관리번호	4-4-사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협조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간	2021~2024년(4년)	담당자	정문희 사무관 (044-201-3779)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주거·교육·상업·업무시설 등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도시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생활기반시설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도시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예_영국 런던 페컴도서관)

-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어진 시설들이 공급자 중심의 계획일변 등으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획일적인 디자인을 조성

* (예시) 학교건축의 경우 획일적 형태, 펜스 설치로 지역사회와 부조화 야기

□ 목표 및 추진전략

-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터, 일터 등 일상생활 속 경관개선

- 일상공간 경관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경관사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상업이나 업무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경관개선사업 발굴·지원

- 근린생활권 내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등 다양한 여가공간 및 각종 공공시설물(가로환경 등) 등의 생활기반시설 디자인 개선
- 옥외광고물, 교통표지판 등 공공디자인법(문체부)의 공공시설물일 경우,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한 경관디자인 개선 추진
- *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시행기간: 2018~2022년, 법적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5조, 수립주체: 문체부)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4년(4년간), 총 58억원
 - 공공 58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2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25년) '21년: 4억원, '22~'24년: 매년 18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환경 향상(합계)	2021~2025	29	29	-	-	58	-
- 생활경관 개선사업 추진	2021~2025	29	29	-	-	58	-

□ 기타 사항

- 단계별 성과관리 체계(1단계: 실적 취합 → 2단계: 평가·활용)를 마련하여 세부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추진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목록

관리번호	세부실천계획 과제 목록	소관부처
5-1	기간교통 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5-1-가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도로분야)	국토교통부
5-1-나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철도분야)	국토교통부
5-1-다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
5-1-라	도로 네트워크 보완 및 효율적 운영	국토교통부
5-1-마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국토교통부
5-1-바	협력·조정형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	국토교통부
5-2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5-2-가	노후 인프라의 적기개량을 통한 안전성 제고	국토교통부
5-2-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
5-2-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국토교통부
5-2-라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개량 추진	국토교통부
5-2-마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일반국도 횡단보도설치)	국토교통부
5-2-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철도이용편의 시설확충)	국토교통부
5-2-사	교통취약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5-2-아	도서관 여객선 운임 및 해상운송비 지원	해양수산부
5-2-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해양수산부
5-3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5-3-가	전국 주요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확대	국토교통부
5-3-나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응한 교통체계 개편	국토교통부
5-3-다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국토교통부
5-3-라	자율운행선박 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부
5-4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4-가	물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5-4-나	도시물류 거점 육성 및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	국토교통부
5-4-다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	국토교통부
5-4-라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국토교통부
5-4-마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해양수산부
5-4-바	동북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해양수산부
5-4-사	해운금융 및 선박관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부
5-5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5-5-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편리한 생활공간 창출	국토교통부
5-5-나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국토교통부
5-5-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국토교통부
5-5-다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축과 운영	국토교통부
5-5-라	공간빅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국토교통부

5-1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도로분야)

관리번호	5-1-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협조부서	기획재정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김 호 사무관 (044-201-3881)

□ 현황 및 문제점

- (단절구간) 재정-민자 間 간선도로망 미연결 구간으로 인한 우회 거리 발생 등 간선도로 네트워크의 기능 및 효율성 저하
- (나들목) 현재 국내 IC 접근시간은 주요 선진국의 1.5배 수준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의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IC 추가 설치 필요
- (환 승) 고속도로 상 환승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대도시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도시경쟁력 저하에 따라 환승체계 구축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단절구간) 수도권 재정-민자 미연결 구간의 추가 연결*을 검토하여 정체완화·연계성 개선 등 고속도로망의 기능과 효율성을 향상
 - ① 재정-민자 교차지점 미연결구간 연결, ②단절구간(Missing Link) 연결
- (나들목) 하이패스IC 확대를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 '25년까지 100개소 확충으로 2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 100개소 확충시 국내 IC 접근시간 : 25분 → 20분

- (환 승) 대도시권 고속도로 주요 거점에 승용차·철도·버스·공유 교통 등 다양한 수단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승체계 구축 추진
 - 고속도로 기능 개편 및 국민 교통편의 제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단절구간) 미연결구간 연결 추진
 - ('20년) 미연결구간 연결을 위해 대상지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
 - * 장래 교통수요 예측, 차로수, 연결로 선형, 사업효과 등 검토
 - ('21년~) 미연결구간 연결을 위한 정부 및 민자사 협의 추진
- (나들목) 하이패스IC 대상지 발굴 및 전국 확대
 - ('20년) 하이패스IC 신규 편익 발굴 및 지침개정 검토
 - *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논리 개발(공공성 강화, 지역균형발전, 교통복지 등)
 - ('20년~) 하이패스IC 대상지 발굴을 통한 전국 확대 추진
- (환 승) 환승거점 발굴 및 환승시설 구축 추진
 - ('20년) 환승지점 발굴 및 환승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설정
 - ('21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고속도로 환승시설 구축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장기계속
 - 현재 계획단계로 투자계획 미수립

□ 기타 사항

- 민자-재정 연결 가능구간에 대한 국토부 및 민자사 등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추진 여부 결정
 - 국가계획 반영(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연결방안, 통행료 수납, 수익 배분 등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철도분야)

관리번호	5-1-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8 ~ 2025	담당자	이상욱 사무관 (044-201-3961)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철도 고속화) 국민들의 더 빠른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 증으로 400km/h급 고속철도 적극 도입 추진

*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추이(만명): ('05) 3,237 → ('18) 8,510 → ('25) 13,943 (예상치)

- 경부,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가 합류하여 중용하고 있는 평택~오송 병목 구간은 선로용량 확보와 동시에 400km/h급 고속철도 우선 도입

- (고속철도망 구축) 호남권, 경기남부권역 등 고속철도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네트워크 확대 추진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4건* 설계중이며, '20년 하반기 설계완료 후 '21년부터 공사 추진 예정

* 호남 2단계(광주송정~목포), 인천발KTX, 수원발KTX, 평택~오송 2복선화

□ 목표 및 추진전략

- (400km/h급 MP 수립)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 및 고속열차 개발 수준 등을 분석 후 중장기 초고속철도 구축 종합계획(MP) 수립

- 고속철도 설계기준 개정, 열차 제어 시스템(KTCS-2) 상용화, HEMU 차량 기술보완 등 핵심사항 현황 분석 및 방향 정립 추진

- (고속철도 적기 개통) 설계 중인 고속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기간내 개통으로 고속교통 서비스 기반 마련

* 호남 2단계('18~'25), 인천발·수원발('18~'24), 평택-오송('19~'25)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고속철도 기준마련) 400km/h급 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되는 분야별 설계·시공 기준 마련
 -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구간내 노반, 전차선, 신호, 통신 등 각 분야별 400km/h급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 추진
- (사업관리)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4건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예산 및 공정 등 일정관리 적극 추진

<고속철도 사업별 주요 일정 >

- (호남고속 2단계) '20년 하반기 설계완료 후 공사 추진('21~'25)
- (인천발·수원발KTX) '20년 하반기 설계완료 후 공사 추진('21~'24)
- (평택~오송 2복선화) '20년 하반기 기본계획 완료 후 터키 추진('21~'25)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고속철도) '25년말('18년~'25년, 8년)까지 총 65,867억원 투자예정
 - 총사업비 65,867억원 중 국비 33,887억원(51.4%),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연금 31,980억원(48.6%) 투자 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고속철도(합계)		33,887	0	31,980	0	65,867	
• 호남고속철도2단계	'18~'25	12,376	0	12,376	0	24,752	
• 인천발KTX	'18~'24	2,715	0	1,221	0	3,936	
• 수원발KTX	'18~'24	1,558	0	1,144	0	2,702	
• 평택~오송 2복선화*	'19~'25	17,238	0	17,239	0	34,477	

* 평택~오송은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예산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센터 구축

관리번호	5-1-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광역환승시설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09년 ~ 장기계속	담당자	김성수 사무관 (044-201-5132)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혼잡 해소 및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센터 구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보조금 30% 지원

□ 목표 및 추진전략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시설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환승편의 제고, 환승거점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 조성
 - 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환승서비스*(LOS, Level Of Service) 수준 향상으로 빠르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 환승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상태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민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5개권 환승 거점별 균형있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지속 구축
-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GTX역 등 광역철도 중심의 환승센터 구축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5년간), 총 3,413억원
 - 공공 3,413억원(국비 1,024억원, 지방비 2,38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4년까지는 년도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환승센터 구축 지원	'20~'24	1,024	2,389	-	-	3,413	

※ 중기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변경 가능 있음

기타 사항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예정

도로 네트워크 보완 및 효율적 운영

관리번호	5-1-라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도로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	담당자	김창기 사무관 (044-201-3876)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도로를 지향하여 국가간선도로망(7X9 + 6R) 계획에 따라 건설 중심의 도로정비
- 광역권 중심의 국토공간 구조 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건설 위주에서 도로 기능·서비스·관리 최적화를 위해 기존 국가간선 도로망(7X9 + 6R) 보완·재정비, 효율적 新네트워크망 구성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도로 기능·서비스·관리 최적화를 위해 효율적 도로 네트워크망(이용자 중심의 기능형 도로 네트워크 구축, URN) 구성

* URN : User oriented Road Network in Korea

- 기능형 도로망 체계 구성 :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 등

- (전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을 통해 新네트워크망 제시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고시('20.12)

□ 투자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구용역 중('19.2~'20.8)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관리번호	5-1-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16 ~ 장기계속	담당자	이광민 서기관 (044-201-3940)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의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 여건변화 분석, 신규 철도노선 반영 등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
 - '16.6월 수립·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따라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음
- 현재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 그간의 여건 변화, 신규 철도노선 등 반영을 위해 효율적·체계적인 차기계획('21~'30) 수립 중

□ 목표 및 추진전략

-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구현을 목표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3차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구축을 추진중
- 장래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반영, 건설 부분에 편중된 기존 계획의 틀을 넘어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부각하는 신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공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연결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국토공간을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철도망 구축
 - 권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X자형 국가 철도망(서울-강릉-광주-부산) 추진
 - * 서울-강릉 1시간7분, 서울-부산 2시간30분, 서울-광주 1시간30분, 강릉-광주 3시간, 강릉-부산 2시간30분, 광주-부산 2시간20분 소요(3차망 사업 완료시)
 -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수도권 내 고속통행 실현으로 통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여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 해소
 - 경부선 등 철도용량 부족 해소, 단절구간 연결, 전철화 등 시설 수준 동일화를 통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 용량 확보 :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평택~오송 2복선화, 중앙선 용산~망우 단절구간 연결 : 수서~광주, 전철화 : 경전선, 장항선, 동해선 개량 등
- 국토공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한 체계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 권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을 수립, 고속 서비스 지역확대 및 낙후철도 고속화 등을 통한 포용 성장 실현
 - 철도 용량부족 해소, 단절구간 연결, 동일노선 시설 수준 동일화 등 투자 대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연계노선 지속 발굴
- 경의선, 동해선 등 남북철도 연결 추진,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거점역사 개발·정비방안 등을 검토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 등 외교적 네트워크 강화

□ 투자계획 (3차망 계획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6년 ~ 25년(계획기간 10년), 총 70.4조원
 - 공공 506,676억원(국비 431,000억원, 지방비 30,959억원, 기타 44,717억원)
 - 민간(민자) 197,76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4차망 계획 수립에 따라 '21년 이후 투자계획 변경 가능)
 - 계획기간 내('21년~'25년) : 704,440억원(국비 431,000억원 포함)
 - 계획기간 후('26년 이후) : 202,821억원(국비 144,007억원 포함)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16~25	431,000	30,959	44,717	197,764	704,440	

□ 기타 사항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실천과제 이행 등을 위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1~'30)」 수립 추진

협력·조정형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

관리번호	5-1-바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계속	담당자	천재민 서기관 (044-201-5046)

□ 현황 및 문제점

- 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교통문제 발생
 - 수도권외의 경우 지정체와 함께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다른 대도시권의 광역 통행량도 지속 증가
- 국가(지역간) ↔ 지자체(도시부)로 이원화된 정책구조에 따라 광역교통 문제는 책임주체 없는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형성
 - 광역교통의 경우 인접 지자체 간 의견대립이 잦고 책임소재 불분명
 - * 광역교통망 건설 자원분담 문제, 환승시설 정비,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 목표 및 추진전략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위원회(분위원회, 권역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갈등조정자문위원회 등)를 운영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심의 안건>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②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 및 변경, ③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자체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광역대중교통 계획 수립, 광역BRT 계획 수립 등), ④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분담률의 변경, ⑤광역철도의 지정·고시·지정 폐지, ⑥광역교통시설(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지정·고시, ⑦BRT 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 ⑧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 광역교통 정책결정과 사업추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및 심의·조정 기능 보강을 위해 “갈등조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안건에 따라 회의시 갈등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안전 심의를 분기마다 개최(최소 1회 이상)하는 등 적극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새로운 광역교통 서비스 및 제도* 도입

* S-BRT, 고속 btx, 광역버스 준공영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대책지구 등

- 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변경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1~'25) 확정 및 변경
- 제1차 간선급행 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수립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의 결정 및 변경
-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갈등의 조정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인력풀 구성('20)
 - 회의시 마다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안전에 따라 필요시 대광위 실무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

□ 투자계획 : 해당 없음

노후 인프라의 적기개량을 통한 안전성 제고

관리번호	5-2-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협조부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과기부, 농림부
사업기간	'20~'24	담당자	성언수 사무관 (044-201-4997)

□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체계) 해당 기반시설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감독
→ 개별적·산발적 관리에 따른 정책 방향성 연계 부족
 - * 총괄조직, 계획·이행체계 미흡 → 종합적 관리가 곤란
- (관리방식) 중대형 SOC는 관리 우수, 지하시설물 관리수준은 다소 상이
→ 시설·주체별 관리수준 상이, 환경변화 대응 미흡
 - * 새로운 재해·재난, 기준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대응력 미흡
- (투자 재원) 투자는 지속 증가하나, 급격한 노후화에 대한 대비는 부족
→ 선제적 안전투자 저조 및 투자 불균형 발생
 - * 골든타임인 10년 이내 투자 확대가 요구되나, 정확한 실태진단 및 비용추계 미비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① 새로운 기반시설관리 거버넌스 정립, ②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③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기반시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 (추진전략) ①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관리체계),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관리대상·방식), ③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투자·재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노후 인프라의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생활안전 위협요인 제거를 위해 긴급 점검,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SOC 시설물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20~)
-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 등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시설물 점검 내실화 및 소규모 취약시설 등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20~)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

-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노후 교통SOC에 대한 목표 성능을 설정하고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와 개·보수 시행, 안전시설의 현대화('20~'25)
- 댐·저수지·하천 등 방재시설의 안전투자 확대, 상수도·하수도·열수송관 등 노후관로 조기교체 개·보수, 통신구·공동구 등 지하구의 난연케이블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20~)
-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의 안전 투자를 촉진('20~)

○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위해 노후 SOC의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별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20~)
-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은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20~)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4년(5년간), 총 65조원 내외(매년 13조원)

- 공공 63조원(국비 25조원, 지방비 25조원, 기타 13조원)

- 민간(민자) 2조원

※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

□ 기타 사항

○ 동 실천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 여부

- 기반시설관리위, 국무회의(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관리번호	5-2-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협조부서	행안부,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사업기간	2015 ~ 2027	담당자	하철호 사무관 (044-201-3557)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인프라 증가와 유지·관리 미흡

- 1970~198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주택·건축물과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민 안전 위협

- * '18년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 기반시설(46,286 개소) 중, 경과연수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중은 17.6% 이나, 10년 이내에 40.6%로 급증 예상

- *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추정 결과 '16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53.4조원 예상

- 지하공간 개발 증가와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대형 복합재난 우려

- *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원인의 60% 이상은 지하시설 파손) → 도로침수·손상 등

- * 통신구 화재(KT, '18), 열수송관 파열(백석역, '18) 등 대형 피해사고 지속 발생

- 첨단기술 접목, 스마트 인프라*(지능화, 관리자동화) 확대 등에 따라 기술 융·복합형 스마트 유지관리 수요 증대

- *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 지적능력을 갖게 되고,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 단계를 거쳐 향후 20년 내에 달성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17)

○ 대형 복합재난 증가와 선제적·통합적 대응 부족

-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 * 태풍·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난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8.6배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약 78% 감소

- 기후변화가 계속되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해 대비를 위한 선제적·통합적 관리체계는 부족
- 기반시설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는 시설물간 유기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시설물간 정보단절, 분절적 관리체계 등 한계 존재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및 지하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및 종합관리 기술 개발
 -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지반침하 발생률 저감, 기반시설 수명 향상 등 달성
- (추진전략)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 및 기반 시설에 대한 토탈케어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유지관리 기술 고도화(22~)
 - * 기반시설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한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과 선제적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종합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 (유지관리 고도화) 노후 기반시설을 대비한 성능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 (지하 안전관리 기술 확보) 개별 기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지하 안전 및 기반시설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한 입체적인 안전관리 기술 개발

【 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개발 방향 】

As-is		To-be
개별적, 분절적 관리		입체적(시설·시설, 시설·지반) 연계·통합관리
결함 진단 등 위험 위주 관리	⇨	잠재위험 및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정보의 단절		디지털 정보의 연계·활용
경험 의존 예측·수동 관리	⇨	데이터 기반 예측·자동 관리
사후 대응형 고비용·저효율 유지관리		선제 대응형 저비용·고효율 유지관리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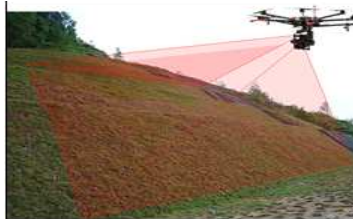
○ 기반시설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융·복합형 유지관리 기술 개발(~'22)

- IoT·드론 등을 활용하여 교량 상태 진단, 비탈면 위험 자동 추출, 지반 탐사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 건설기술연구사업 내 무인장비(드론) 활용 교량외관조사 등 유지관리 R&D 6건 시행중('15~'22, 600억원)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비탈면 조사용 드론>



<지하공동 및 매설물 복합 탐사>

○ 지하공간 정보 구축 및 공유를 통한 안전체계 구축(~'23)

- 지하의 모든 시설에 대한 지하 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 간 정보 공유 추진

* 지하공간 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기술개발 R&D('20~'23)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토탈케어 기술 개발('22~'27)

- 시설물 관리정보의 디지털화 및 BIM, IoT, Big Data,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한 성능 평가·예측·개선 및 자산관리, 선제적 유지관리 등 성능 중심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 (기반시설) 모니터링 및 점검/진단, 성능예측 및 의사결정, 보수보강, 디지털 정보체계 고도화 및 실증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주기에 대한 종합기술 개발

* (지반·지하시설) 시설물간 상호 영향 등을 고려한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 지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공동구를 활용한 지하시설 공동관리 기술 개발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5년 ~ '27년(13년간), 총 5,900억원

- 공공 4,718억원(국비 4,718억원)

- 민간(민자) 1,18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지능형 국토방재 기반 구축과 유지·관리 고도화 (합계)	2015 ~2027	4,718	-	-	1,182	5,900	-
- 건설기술연구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개발)	2015 ~2022	600	-	-	150	750	-
- 지하공간 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2020 ~2023	118	-	-	32	150	-
- 지하 및 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개발 사업	2022 ~2027	4,000	-	-	1,000	5,000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관리번호	5-2-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협조부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업기간	'21~'25	담당자	이정식 사무관 (044-201-3864)

□ 현황 및 문제점

-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 수준 감축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18.1)'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나,
 -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인구 고령화, 자동차 대수 증가, 기상 악화로 인한 대형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 요인 상존

*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7년) : 35개국 중 **32위**
 (노르웨이) 2.0명, (스웨덴) 2.5명, (영국) 2.8명, (일본) 3.5명, (한국) 8.1명('19년 6.5명)

□ 목표 및 추진전략

-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OECD 상위 30% 수준)수준 감축을 통한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 보행자·교통약자(어린이·고령자 등), 사업용 차량 등 사고 취약 분야 대책 추진 및 도로인프라 개선 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 전환

- 도심부 속도 하향* 구간 지정, 시설 개선 등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지자체 컨설팅 실시 및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20~'21)

* 도시부도로 제한속도 하향(60km/h→50km/h)을 위한 도로교통법 '21.4월 시행 예정

- 야간 운전자의 보행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국도 상 횡단보도 조명 시설 설치 및 정비 추진

* ('21) 150개소, ('22) 150개소, ('23) 150개소, ('24) 150개소, ('25) 150개소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조사업 추진

* (장애인 콜택시) ('21) 237대, ('22) 237대, ('23) 237대, ('24) 237대, ('25) 237대
(저상버스) ('21) 2,000대, ('22) 2,000대, ('23) 2,000대, ('24) 2,000대, ('25) 2,000대

○ 안전 중심의 국가도로망 계획 및 도로이용자 중심의 도로안전 시설 확충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고시('20.12)

-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졸음쉼터 확대 설치 및 시설 개량 추진

* 고속국도 ('21) 8개소, ('22) 9개소/ 국도 ('21) 10개소, ('22) 10개소, ('23) 10개소, ('24) 10개소

- 사고 잦은 곳, 도로 구조 취약 위험 구간 등 개선 추진

* (사고 잦은 곳) ('21) 65개소, ('22) 65개소, ('23) 65개소, ('24) 65개소, ('25) 65개소
(위험도로) ('21) 169개소, ('22) 177개소, ('23) 190개소, ('24) 205개소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지속 실시

* 비상자동제동장치 ('21) 1,042대, ('22) 1,059대

- 주행 중 차량간, 도로-차량간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확대

* 수도권 고속도로(경부·외곽·중부 85km), 지자체 주요도시(서울·제주·광주·울산 총 672.3km)에서 실증사업 추진('18~'21) 후 전국 주요도로 C-ITS 단계적 확대 구축 착수(~'22)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32,917억원

- 공공 27,663억원(국비 17,499억원, 지방비 9,471억원, 기타 693억원)

- 민간(민자) 5,25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17,499	9,471	693	5,254	32,917	
- 횡단보도조명시설설치 (단위사업)	'21	102	-	-	-	102	
	'22	102	-	-	-	102	
	'23	102	-	-	-	102	
	'24	102	-	-	-	102	
	'25	102	-	-	-	102	
- 저상버스 도입보조	'21	1,000	1,100	-	-	2,100	
	'22	1,000	1,100	-	-	2,100	
	'23	1,000	1,100	-	-	2,100	
	'24	1,000	1,100	-	-	2,100	
	'25	1,000	1,100	-	-	2,100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장애인콜택시)	'21	100	110	-	-	210	
	'22	100	110	-	-	210	
	'23	100	110	-	-	210	
	'24	100	110	-	-	210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25	100	110	-	-	210	
- 위험도로 개선사업	'21	1,364	-	-	-	1,364	
	'22	1,432	-	-	-	1,432	
	'23	1,533	-	-	-	1,533	
	'24	1,655	-	-	-	1,655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21	224	-	-	-	224	
	'22	224	-	-	-	224	
	'23	224	-	-	-	224	
	'24	224	-	-	-	224	
	'25	224	-	-	-	224	
- 졸음쉼터 확대(고속국도)	'21	-	-	228	-	228	도공 자체 예산
	'22	-	-	293	-	293	
- 졸음쉼터 확대(국도)	'21	150	-	-	-	150	
	'22	150	-	-	-	150	
	'23	150	-	-	-	150	
	'24	150	-	-	-	150	
- 비상자동제동장치 보조지원사업	'21	1,303	1,303	-	2,606	5,212	
	'22	1,324	1,324	-	2,648	5,296	
- C-ITS 전국 확대	'18~	579	397	86	-	1,062	
- 고속도로 실증사업	'18~'21	-	-	86	-	86	
- 지자체 실증사업	'18~'21	579	397	-	-	976	
- C-ITS 전국 확대	'22~	투자계획 마련 예정					

□ 기타 사항

- 국조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등을 통해 「교통안전 종합
대책」 과제 점검 실시(분기별)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개량 추진

관리번호	5-2-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협조부서	기획재정부
사업기간	2019 ~ 2022	담당자	신우철 사무관 (044-201-3874)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신규 설치·개량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 휴게소간 간격이 먼(25km 초과) 구간 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졸음쉼터 설치 및 기존 시설 개량
 - 졸음쉼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개선, 보행공간 확장 등 졸음쉼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 안전확보를 위해 가드레일 보완 등 안전시설 보완, 가로등 개선 및 안내표지판 개선 등 안전시설 보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20~'22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신규설치 총32개소(재정19개소, 민자13개소), 시설개량 총63개소(재정60, 민자3개소)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신규설치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사업 규모	재정	8	8	3	3	3	7	9	
	민자	5	5	-	-	12	1	-	
투자계획		-	-	611	611	-	-	-	

*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법인 자체예산으로 설치

** '19년 611백만원은 민자고속도로 12개소 보상비(국비)

○ 시설개량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사업 규모	재정	60	60	53	53	60	-	-	
	민자	1	1	-	-	3			
투자계획									

*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법인 자체예산으로 시설개량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일반국도 횡단보도설치)

관리번호	5-2-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7 ~ 2021	담당자	박선훈사무관 (044-201-3926)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도로이용자 중 야간보행자 시인성 확보 곤란 등으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
- (문제점) 도로횡단 중 사망자가 전체 보행자 64.5% 차지, 주간보다 야간에 1.7배 이상 높음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도로이용자 중 야간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 (추진전략) 교통사고 예방(감소)을 위하여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실천과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 (세부추진계획)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계획에 맞추어 일반국도 상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보강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국비)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7년 ~ '21년(5년간), 총 24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43	55	52	51	45	246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철도이용편의시설 확충)

관리번호	5-2-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05 ~ 장기계속	담당자	최재기 사무관 (044-201-4625)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의 고속화, 다양화 등으로 철도이용율 증가 및 이에 걸맞는 철도 이용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감 증대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지속 확충 필요

《 최근언론보도현황 》

-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투신사고 “스크린도어 미설치…사망사고” (국제신문)
- “지하철 리프트는 살인기계...철거하고 승강기 늘려 달라” (경향신문)

□ 목표 및 추진전략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에 필요한 승강설비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설비(핸드레일, 유도타일, 계단 논슬립 등)도 지속 확충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철도역 등에 승강설비를 확충 하여 교통약자 등 이용편의 향상 및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 인구 집중도가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승강설비 및 안전시설 등을 우선 개량하여 안전을 확보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05년 ~ 계속, 총 4,420억원
 - 공공 4,420억원(국비 4,42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기투입	'21	'22	'23	'24	'25	이후
철도역 승강설비 및 안전시설 확충	1,644	378	390	429	472	519	588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철도역 승강설비 및 안전시설 확충	'05~계속	4,420				4,420	

기타 사항

- 해당없음

교통취약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관리번호	5-2-사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년~장기계속	담당자	윤주석 사무관 (044-201-3826)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보존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조해왔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비효율적 문제로 유지에 한계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 **(추진전략)**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보호 및 개선
 - **(보호)** 벽지노선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하여 노선 폐선을 방지
 - * 그간 지자체에서 보존해 온 벽지노선 운행손실(여객법 지원 근거)에 대해 국비 지원
 - **(개선)**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을 통한 유동적인 버스 운영을 확산
 - *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취약지역 노선을 간선 중심으로 조정,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 심야 등 특별시간대 한정 운영버스 등에 대해 지원

□ 세부추진계획

- 벽지노선지원 사업
 - 여객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선정·지원중이던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20년~, 보조율 30%)

* 여객법 제23조 : 시·도지사는 벽지노선·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명령 가능(손실 보상)

** '20년 287억원 지원(보조사업 282억원, 용역 5억원), 8개道 지역 대상

○ 도시형교통모델

- 취약지역인 도농복합·농어촌 중심으로 **노선효율화**(적자노선 감축) 등에 대응·지원** ('19년~, 보조율 50%)

* '20년 공공형버스 예산 : 국토부(市 단위) 209.6억원, 농림부(君 단위) 214억원

< 노선 개편 및 대체교통수단 투입 사례 >

- 사례1) A - B - C(중심) - D - E - F 등 총 6개 지역을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 수요 등을 감안하여 B-E로 조정, 사각지대 발생하는 A, F지역에 대체수단 등 투입
- 사례2)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을 주민 수요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전세버스 대체 등으로 서비스 제공
- 사례3) 출퇴근 시간·심야시간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콜버스·셔틀버스 운영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해상운송비 지원

관리번호	5-2-아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협조부서	지자체
사업기간	'06~ 계속	담당자	전재경, 주민호 사무관 (044-200-5734, 5735)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여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자 도서민에게는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 수행
 - 최근에는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서지역 축제 활성화(임자도 톨립축제 등)로 **섬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여 여객선의 역할 더욱 부각
 - * 연간 여객수송객(천명): ('15) 15,381 → ('16) 15,423 → ('17) 16,910 → ('18) 14,625
('18년도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송실적 감소)

- (문제점)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연안여객선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요구** 지속
 - 도서민 여객운임은 평균 약 **4천원**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의 약 **3배 수준**
 - * 교통수단 운임: (시내버스) 1,300원, (지하철) 1,250원, (연안여객선 평균) 3,898원
 - 차량과 여객운임을 각각 지불해야 하는 여객선 특성상, **평균 2만원** (최대 약 18만원)에 달하는 도서민 차량운임으로 **부담 가중**
 - * (예시) 격포-위도/5톤 화물차/2인: (차량) 86,400원 + (여객 2인) 9,800원 = **96,200**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여객선에 대해 **육상교통 수준의 해상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 하고, 가스·유류 등 생필품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복지 증진

- (추진전략)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운송비 지원으로 **복지 향상**
 - 여객선 운항 구간 중 생활구간과 차량 운임할인을 확대하고, 해상 운송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여객운임 할인)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개 생활구간* 운임을 70%**까지 할인하여 도서민 교통비 절감

* 생활구간: 전체 1,803개 연안여객운임 구간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1,252개)

** 생활구간 도서민운임 할인율(선사 20%) : (기존) 40%(국10%+지10%) → (확대) 70%(국25%+지25%)

- 도서민 이용객의 3분의 2(연 230만명)가 3천원 미만 운임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중 20%(46만명)는 1천원 미만 운임으로 여객선 이용

* 연간 도서민 여객선 이용인원('18 기준): 361만명 (생활구간 이용: 230만명, 64%)

○ (차량 운임할인 확대) 도서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 운임을 50%까지 할인하여 도서민 생활편의 향상

* 수혜대상: 5톤 미만 화물차 24만대 / 할인율(국50:지50): ('19) 20% → ('20) 50%

** (예시) 격포/위도 5톤 화물차 108,000원: (기존 20%) 86,400원 → (개편 50%) 54,000원

- 도서지역 및 육상 여객터미널의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한 이동 불편을 도서민 차량이용 지원으로 일부 해소

○ (해상운송비 지원) 8개 광역시도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도서민 기초 생활에 필요한 가스·유류 등 생활연료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1,650억원

- 공공 1,650억원(국비 825억원, 지방비 82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5년 : 총 1,650억원(매년 330억원, 국비 165억원, 지방비 165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해상운송비 지원(합계)	'21~'25	825	825	-	-	1,650	계속 사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1~'25	730	730	-	-	1,460	
- 해상운송비 지원	'21~'25	95	95	-	-	190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관리번호	5-2-자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협조부서	행자부
사업기간	2018~장기계속	담당자	김영주 사무관 (044-200-5732)

□ 현황 및 문제점

- 1일 생활권(1일 2왕복)이 미 구축된 항로(7개)와 2년 연속 적자로 운항단절이 우려되는 항로(6개)로 도서민의 교통불편 발생 우려 존재

□ 목표 및 추진전략

- 도서민에게 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자항로, 도서 1일 생활권 구축항로에 **재정지원 확대**(준공영제* 확대 지원)

* 준공영제 :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 준공영제 지원 항로 수는 점진적으로 확대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도서민 교통편의 제고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일 생활권 미 구축항로와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2년 이상 연속 적자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 '25년까지 준공영제 지원 항로 수를 확대하여 **최대 16개 연안여객항로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지원이 필요한 항로에 대한 지원 추진

* ('18) 9개 항로 → ('20) 12개 항로 → ('22) 14개 항로 → ('25) 16개 항로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120억원

- 공공 12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6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5년까지는 매년 24억씩 운항결손액 지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합계)	'21~'25	60	60	-	-	120	-
- (준공영제 확대)	'21~'25	60	60	-	-	120	-

□ 기타 사항

○ 준공영제 확대 항로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 실시

○ 해당 도서지역 주민 및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전국 주요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확대

관리번호	5-3-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8~장기계속	담당자	김진우 사무관 (044-201-3934)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교통체계에 IT기술을 융합한 ITS를 전국도로에 구축·운영 중
 -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교통수단·시설에 첨단 IT기술과 교통 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효율화하고 교통안전성을 향상
- 하지만 ITS는 도로에서 검지된 교통정보를 센터 가공 후 운전자에게 제공하므로 정보 지연으로 실시간 안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 고속주행 환경에서는 전방에 돌발상황 발생 시 짧은 시간동안 정차, 회피 등의 대응을 위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이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주행 중 차량간, 도로-차량간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확대
- (전략) 수도권 고속도로, 지자체 주요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18~'21)하고, 전국 주요도로 C-ITS 단계적 확대 구축 착수(~'22)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스마트 도로로 시범전환·운영('18~'19) 후 고속주행 환경에 적합한 C-ITS 서비스 개발·실증

* 서울외곽·경부선 등(85km) 구축 및 버스·트럭 단말기(700대) 배포

- 도심 도로 및 지역 특화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주요 도시에 스마트도로 실증사업* 추진

* 서울·제주 : '18~'21 , 광주·울산 : '19~'22

- 실증사업에서 개발된 기술 및 운영 효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구간 중심의 전국 주요도로에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고속도로 및 지자체 실증사업('18~'21)에 총 1,062억원
- 전국 주요도로 확대 구축('22~)은 실증사업 효과를 활용하여 경제성,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상 도로를 선정할 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C-ITS 전국 확대	'18~	579	397	86	-	1,062	
- 고속도로 실증사업	'18~'21	-	-	86	-	86	
- 지자체 실증사업	'18~'21	579	397	-	-	976	
- C-ITS 전국 확대	'22~	투자계획 마련 예정					

□ 기타 사항

- “미래차 발전전략(19.10, 부처합동)”에서 ‘전국 주요도로에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완비’ 목표를 발표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응한 교통체계 개편

관리번호	5-3-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정재원 사무관 (044-201-3848) 김강문 사무관 (044-201-3907)

□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AI·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차, 친환경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개인용 교통수단 등의 상용화·확산 전망
 - 특히 자율차는 미래형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통신시설·정밀지도 등 인프라 확충, 성능검증·보험 등 관련제도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나,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설계기준은 부재한 실정
 - *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하여 PM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기준 마련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27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레벨4*) 자율차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주요도로)를 선제적으로 완비
 - *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한 조건부 완전 자율차
 - 자율주행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 정밀지도, 관제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주요도로에 구축

- 자율차 제작·운영·서비스 등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발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정비
- 「자율차법」에 따라 지정되는 시범운영지구* 등을 통해 자율차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군집주행·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도입 추진
 - * 자율차에 대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용,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 테스트베드 구축, 국가 R&D 추진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
- PM, 자전거 등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PM도로 설계기준 마련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자율차의 센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車↔車, 車↔도로” 간 무선 통신망 (V2X: Vehicle To Everything)을 전국 주요 구간에 구축(~'24)
 - 도로시설·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통신시설 우선 구축 구간*을 지정하여 전국 주요도로 구간에 구축 추진(~'24)
- 자율차의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 전국 구축 추진
 - '24년까지 주요도로(국도·주요도심)에 구축을 완료하고, 주차장 등 다중 이용시설까지 확대('20~)
- 자율차 제작·성능검증 기준, 보험제도, 보안체계 등 마련
 -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완전(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교통인프라 해킹 등 사고방지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19~)
 - *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부분(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은 '19년에 마련
 - 부분(레벨3) 자율차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20), 완전 자율차를 위한 보험제도 마련도 추진('21~)

- 「자율차법」에 따라 자율차 유상 여객·화물운송이 허용되는 시범운영 지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서비스개발·사업화 지원('20~)
 - 연비개선, 물류費 절감 등을 위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 개발도 추진(~'21)
- 완전 자율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요소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실증,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R&D 사업 추진('21~'27, '20.4 예타完)
 - 산업기반·인프라를 바탕으로 부품개발·성능시험·실증 등에 특화된 테스트베드도 구축
 - * 자율차 인증·평가 시설,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행시험장, V2X 실증도로 등
- 다양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하여 정지시거, 도로폭 등 세부 설계기준 도출
 - *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20.5~'21.12)을 통해 세부 설계기준 마련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 ~ '27 약 6,057억원(미확정분 제외)
 - 공공 약 5,000억원, 민간 약 1,000억원 규모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5,045	32		980	6,057	
- 자율자동차 상용화*	계속	1,479	32	-	-	1,511	
- 정밀도로지도	'21~'24	493	-	-	-	493	
- 통신인프라(C-ITS)	'21~	투자계획 마련 예정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1~'27	3,073	-	-	980	4,053	

* '21~'24 기준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관리번호	5-3-다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 장기계속	담당자	최규용 사무관 (044-201-3820)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경제 확대, 다양한 모빌리티 등장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개별 이동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로 이용하려는 트렌드 확산

* 국내 카셰어링 시장 변화 : ('12) 450 → ('15) 6,512 → ('19) 18,801
 세계 카셰어링 차량수 변화 전망 : ('10) 31.9 → ('20) 440.6천대

- '1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국가 중심으로 적용여건이 양호한 도시에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 시작

- 한편, 우리나라는 편리한 환승, 저렴한 요금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아직 MaaS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나,

- 新 모빌리티 개발 활성화와 모빌리티간 통합 예약·결제 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으로 MaaS 도입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상황

□ 목표 및 추진전략

- MaaS는 민간의 경험 부족, 협업시스템 부재,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 전면 도입하기에는 한계

⇒ 우선 관련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유형도 다양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과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킬 필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① MaaS 기술개발

- 통합결제시스템 개발 R&D 진행 중('18.8~'20.3)으로 실증사업('19.8~11, 제주도)을 통해 기술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상용화를 위한 보완 추진

< R&D 주요 개발기술 >

- (시스템 및 플랫폼) 최적경로안내 및 예약정보 시스템, 통합결제 플랫폼
- (앱) 이용자 등이 경로확인, 예약·결제 등을 하기 위한 앱
- (디바이스) 이용자 및 체크인, 체크아웃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 R&D('19.11~'20.10, 기획과제)'에 포함하여 보완 계획 수립 추진

② 시범사업 추진

-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나, 초기에는 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용자 니즈,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심형(대구, 세종), 관광형(부산, 전주, 문체부 협업추진), 거점형(공항, 철도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 기타 사항

- 녹색위(녹색성장 5개년계획), 미세먼지위(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관리번호	5-3-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협조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간	2020~2025	담당자	장석준 사무관 (044-200-6202)

□ 현황 및 문제점

- 자율운항선박은 ICT, 센서, 스마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 기술들이 집약된 최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
-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IMO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 개정 논의도 본격화
- 자율운항 관련 기술은 향후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기술로, 경쟁국에 비해 개발이 다소 늦은 상황

□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미래 선박시장 및 국제표준 선도”

목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25년)

- ▶ Level 3.0 수준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개발
- ▶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 검증(99.9%) 및 표준화(36건)
- ▶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확보

- | | | |
|--------------------|-------------------------|---------------------------|
| - 2m 이상 물체 100% 인식 | - 3척 이상 자동 충돌 회피 100% | - 연비 10% 이상 향상 자율운항 |
| - 100% 자가진단 및 장애복구 | - 통신매체 무관 1초 이하 끊임없는 통신 | - 비상시 원격제어 (실시간, 100km이상) |

핵심	세 부 과 제
1. 지능향해시스템	1-1. 자율 항해, 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1-2. 사고방지 상황인식 시스템 1-3. 지능형 항로 의사 결정 기능 구축
2. 기관자동화시스템	2-1. 기관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2-2. 고장예측/ 진단 기술 개발 2-3.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3. 실증 및 표준화	3-1. 성능실증센터 구축 및 성능시험 개발 3-2. 사이버 안전 기술 개발 3-3. 데이터 교환 및 통신기술 개발 3-4.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 자율+기관 자동화)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6년간, 1~4차년도 기술개발, 5~6차년도 실증·운영), 해수부·산업부 공동추진

구분	주관	주요 내용	예산(억원)
핵심과제 1 (지능형 항해 시스템 개발)	산업부	자율항해, 충돌사고 방지 시스템	188
	해수부	지능형 항로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자율운항 시스템	203
핵심과제 2 (기관자동화)	산업부	기관시스템 예지 보전 기술, 장애복구 기술 개발	224
핵심과제 3 (실증지원 센터 및 실증)	산업부	실증지원센터 구축, 실증 및 성능시험	372
	해수부	육상제어, 사이버 안전, 데이터 교환통신 기술 개발	200
핵심과제 4 (운 용 기 술 및 표준화)	해수부	사고대응, 안전운항지원, 국제표준화 기술 개발	304
기술개발(R&D)/ (4개분야 13개 세부과제 : 해수부 7개, 산업부 6개)			
사업단 운영경비			113

□ 투자계획 (예산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25년(6년간), 약 1,603.2억원

- 해수부·산업부 공동추진 1,603.2억원(국고 1,196.64 민자 361.52 지방비 45)

* 산업부 : 839.49억원(국고 609.69억원, 민자 184.80억원, 지방비 45)

* 해수부 : 763.67억원(국고 586.93, 민자 176.74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해수부)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합계)	'20~'25	587	-	-	177	764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20~'25	587	-	-	177	764	-

물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관리번호	5-4-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곽병철 사무관 (044-201-3998)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상거래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물류산업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법·제도 및 정부지원 등 산업성장 기반이 불충분
- 생활물류서비스(택배·배송대행 등) 수요가 늘고 있으나 법·제도가 부재하고, 전통물류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 활력이 떨어진 상태
 - * 국내시장은 운송물량 정체 등으로 활력이 낮은 상황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
- 4차 산업혁명으로 ICT 등 융합물류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나, '질 낮은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전반적으로 구인난이 만연
 - * 물류산업은 AI, 빅데이터, 배송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술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

□ 목표 및 추진전략

- 물류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법·제도 정비, 규제 개선, 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여 산업 지원체계, 시장질서, 성장기반의 혁신을 도모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시장의 변화에 맞춰 우수물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
- (생활물류서비스 제도기반 마련) 택배·배송대행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등)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도모

- (전통물류산업 활력 제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낮은 규제를 완화하고, 위·수탁제도 및 다단계 관련 개선방안도 논의

- (해외진출 지원) 他 업종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현행 컨설팅사업 등도 지속 추진

* (예시) 해외투자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정책금융 지원 강화, ODA 등

○ 일자리 매칭, 창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정보 제공) 민간 일자리 포털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

* 청년구직자와 물류기업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채용박람회 매년 지속 개최 추진('15년~)

- (물류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등에 대응하는 융합 물류·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양성 추진(연 200명 규모)

* 시설·장비 운용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현장물류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연 400명 규모)

- (스타트업 발굴·지원) 예비창업자 등에게 보육프로그램(공간제공,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물류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연계

* 물류 스타트업 투자펀드 등을 활용하여 물류·신유통·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364억원

- 공공 364억원(국비 364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	364	-	-	-	364	-
- 물류산업지원	'21~'25	364	-	-	-	364	-

※ '21~'25년 예산은 중기사업계획에 따름, '26년 예산은 연평균 6.5% 증가율 반영

도시물류 거점 육성 및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

관리번호	5-4-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김선욱 사무관 (044-201-4007)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물류거점)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따라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지부족 등으로 수도권 인프라 확충에 한계**

* (매출액) 24조원('08) → 5.2조원('17) / (취급물량) 12억Box('10) → 28억Box('19) → 73억Box^F('30)
(수도권) 전국 택배물동량 중 65%집중 / 물류업계 신규 부지수요의 71% 집중

** 수요대비 공급율(터미널수기준/면적기준, %) : 서울 58/72.9, 경기 79/87.9, 전국 81/87.9

- 이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유희부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내 중소형 배송거점도 확보할 필요
- (물류인프라 첨단화 추세) 한정된 인프라 내 노동 의존형 택배·배달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 및 서비스 고도화에 한계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한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신산업 창출 및 물류 효율화 추진

□ 목표 및 추진전략

- (도시물류거점) 도심 내 하역, 보관, 집화 등을 위한 물류 공동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배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중소형 배송거점) 철도 유희부지, 노후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배송 거점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주택 등의 말단 배송시설 개선
-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물류R&D 투자를 확대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물류신기술 지정제 등을 통해 물류로봇, 자동 하역장비 등 첨단 물류장비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적극 유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① 도시물류거점 육성

-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국·공유 유희부지 발굴 등을 통한 도심 내 택배 터미널 등 배송거점 확충 지원
 - 3개소에 시범적으로 택배분류장을 마련('21)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22~'24) 후, 장기적으로 지하물류 구축방안과도 연계 추진('25~)
- 트럭베이, 무인택배함 등 말단 배송인프라 구축도 지원하여, 도심물류체계 효율화 및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
 - 가로변 화물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첨단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규정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21)하고 시범사업 시행('22)
- 도심의 높은 지가를 감안, 다수의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 R&D를 통해 공동 설비·인프라 운영기술을 개발(~'24)하고, 신도시에 신규 조성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접목 추진('25~)

②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

- (물류혁신 R&D) 생활물류 배송·인프라를 포괄하는 기술개발에 7년간 약 2,500억원 투자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 (스마트 물류센터) 첨단장비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국가 차원에서 인증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추진('21~)
- (물류신기술 인증) 민간차원의 물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18.12)된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20.上)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7년(7년간), 총 2,575억원
 - 공공 1,931억원(국비 1,931억원) / 민간(민자) 644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	'21~						
- (물류혁신 R&D)	'21~'27	1,931			644	2,575	-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21~	108					-

철도 물류 효율성 제고

관리번호	5-4-다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임정묵 사무관 (044-201-3971)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화물취급역 운영에 따른 인력, 열차운영 등 비효율 발생
 - 철도 물류시설 거점화 및 개량 등을 위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규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지속 미반영
- 일반화물열차(90km/h)의 여객열차 대피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인건비 및 동력비 증가 등으로 화물수송 효율 저하

* ('16.8월 기준) 고속화물열차 대피율 19.7%, 일반화물열차 대피율 67.2%

□ 목표 및 추진전략

- 고비용·비채산성 화물 취급역 거점화* 지속 추진 및 철도 물류시설 개량 등을 통한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
 - * 화물취급 실적이 저조한 화물역 통합·폐지('16년 94개역→'17년 90개역→'19년 84개역)
 -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철송화물 증가 예측 거점역의 소요 시설 개선·확보 및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일반역의 노후시설 개량
- 수송효율 증대 및 대피역 최소화를 위해 화물열차의 고속운행 (120km/h) 확대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연간 취급실적이 낮은 소규모 화물취급역 중 다른 교통수단으로 수송 전환이 가능한 역을 대상으로 거점화 추진('19년 84개역 → '20년 80개역)

○ 철도 물류시설 개선·확보가 필요한 거점역 8개소*의 시설 개량을 위해 '20년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21년부터 단계적 개량 추진

* 거점역 8개소(331억원) : 약목(154억), 삼교(23억), 수색(12억), 오류(17억), 부강화물(37억), 태화강(12억), 석포(24억), 석항(52억)

○ 경부선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고속운행비율 달성*에 따라 시멘트 화물열차 고속화 추진(1일 2회 증가)

* 경부선(오봉↔부산) 컨테이너 열차 1일 32회 중 고속열차 24회 운행(75%)

□ 투자계획 : 해당없음

□ 기타 사항

○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세부사업('21년~)으로 “물류기반 시설 개량사업” 편성 추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관리번호	5-4-라 / 2-4-다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21	담당자	이호준 (044-201-4211)

□ 추진현황

- 내수경제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외국인 인바운드(방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

* '19.12, 국가관광전략회의 계기 VIP께서 '20 방한객 2천만 명 달성 지시('19, 1.7천만)

- 항공산업 측면에서도 그간 성장을 지탱해온 아웃바운드 수요가 인구수 정체·고령화 등에 따라 정체될 전망으로 성장동력 필요

☞ 국가관광전략회의('19.12.12)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12.19) 등에서,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추진목표

- ① 양양·청주·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 ② 운수권 배분, 노선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 시범공항 연계노선 확충

□ 세부추진계획

①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 관계기관 MOU*를 통해 양양·청주·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하여 항공·관광융복합 사업 집중지원

* 지역관광·쇼핑자원 활용 해외홍보, 항공·여행사 인바운드여행객 유치지원, 공항 접근교통 지원 등(국토부·문체부 / 강원·충북·전남도 / 공항공사·관광공사)

- 시범공항 연계 국제노선 개설 및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하여 항공사·여행사 등에 지원 대폭 확대

② 시범공항 연계노선 확충 및 교통·쇼핑 등 여건 개선

- (항공) 상존하는 아웃바운드 수요에 상응하는 노선운영에서, 적극적 방한수요 창출·항공수요 유치를 위한 노선개설로 패러다임 전환

- 항공회담·운수권 배분 시 인바운드 시범공항 우선 고려, 수요가 불확실한 지방인바운드 노선의 최소운항의무 완화로 연계노선 확충

- 이를 위해, 인바운드 노선 개설 항공사에 운수권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운수권 심의위원회*에 관광전문가 포함

* 현재 항공·경영·경제·법률분야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

투자계획 : 해당 없음

기타 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상반기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전세계적으로 여객수요 급감, 운항노선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 코로나19 극복 이후 항공수요 회복 시 인바운드 활성화 추진 필요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관리번호	5-4-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국,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9~2030	담당자	추윤식 사무관 (044-200-5933)

* (세부담당자) 스마트항만·신항만(추윤식 사무관, 5933), 스마트해상물류(장석준 사무관, 6202) 배후단지 개발계획(이승두 사무관, 5920), 배후단지 운영(유현숙 사무관, 5755)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물류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에 따라 항만 내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 가속화

- 세계 주요항만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며, 항만배후를 활용한 물류부문 고부가가치** 창출

* (유럽)로테르담항, 함부르크항, (미국)LBCT, (중국) 청도항, 상해항, (싱가포르) 투아스항 등

** (로테르담항) 전체 부가가치의 54.1%를 물류부문에서 창출(한국은행, 2012)

○ 국내항만은 시설규모 및 물동량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만의 첨단기술도입 및 물동량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

- 국내 항만은 야드영역의 부분적인 자동화만 이루어져 있으며, 전 영역이 자동화된 선진항만 대비 기술수준 미흡*(KMI, 2017)

* 부산항 신항 내 유인 하역장비 대비 자동화장비의 국산화 비율 낮음

- 입주기업과 물동량 증가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 등 실질적 성과는 미진한 수준

*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중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17년)

□ 목표 및 추진전략

- (스마트항만)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관련 R&D, 용역을 수행하여 국내기술·산업 발전 도모

* (1단계) 항만자동화 → (2단계) 정보연계 → (3단계) 지능화

- 하역·이송장비의 자동화, 물류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하여 물류처리 효율성 제고 및 스마트항만 관련 국내기술·산업 발전

- (배후단지) 하역·보관 위주의 항만기능을 고부가가치 화물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로 확대

- 주요 항만*에 대한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배후단지는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산업공간으로 기능전환

* 부산항 신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신항, 포항항, 목포항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스마트항만) 부산항 신항(2-5, 2-6),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자동화장비, 외부 교통수단 연계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속

-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운영사,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일자리 전환 등의 대응방안 마련

- (배후단지) 배후단지 확충*과 함께 스마트창고·전자상거래 등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여, 배송·제조·가공 등으로 기능 확대

*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19년 13,977천㎡ → '30년 29,693천㎡ (+15,716㎡)

- 항만별·배후단지별로 특화구역*(Zone)을 지정하고,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부산항) 환적화물/위·수탁 가공, (인천항)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평택·당진항) 자동차 PDI, (광양항) 냉동·냉장/석유화학·제철, (울산항) 친환경 에너지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7년 ~ 30년(13년간), 총 1조 4,382억원

- 공공 6,014억원(전액 국비)

- 민간 8,268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연평균 700억('20년 732억원→ '21년 874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기존 사업 준공 및 신규사업 착수**에 따라 예산규모 변화

* ('20) 스마트항만 454, 배후단지 278, ('21) 스마트항만 169, 배후단지 705

** 스마트항만의 경우 부산항 신항, 광양항에 대한 구축계획 수립, R&D·용역 사업 신규 발굴·착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확대 전망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합계)	'17~'30	6,014	-	-	8,268	14,382	
[스마트항만]*		757	-	-	216	973	
-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	'19~'23	297	-	-	99	396	
- 스마트항만 도입용역	'20~'23	110	-	-	-	110	
- IoT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19~'21	350	-	-	117	467	
[배후단지]**		5,257	-	-	8,052	13,409	
- 부산항 신항	'17~'30	1,152	-	-	3,455	4,607	
- 인천항	'17~'25	882	-	-	2,646	3,528	
- 평택·당진항	'17~'25	2,228	-	-	232	2,460	
- 광양항	'17~'30	188	-	-	564	752	
- 울산항	'17~'30	285	-	-	1,155	1,540	
- 포항항	'17~'25	339	-	-	-	339	
- 목포항	'17~'30	183	-	-	-	183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전략이 현재 수립 중으로, 현재는 R&D 및 용역만 반영

**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기준

동북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관리번호	5-4-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협조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정명훈 사무관 (044-200-5792)

□ 추진배경

- 제3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10.5, 중국 청두)에서 동북아 물류 정보서비스 네트워크(NEAL-NET)* 설립하기로 합의
 - * NEAL-Net(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 : 한·중·일 3국의 주요항만 간 선박입출항, “컨”상태정보 등 물류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
-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18.7, 서울)에서 ‘물류정보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지속하기로 합의
- 제4차 닐넷 공동운영위원회(‘18.7, 서울)에서 장래계획(2018~2022)으로 “물류정보 공유대상 항만 및 연계 확대”, “데이터 표준 개선”, “국제협력 및 홍보 지속”, “이용활성화” 등 합의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 정보공유 현황

- (선박입출항 정보) ‘19.12월 기준 한국(6개항), 중국(9개항), 일본(8개항) 총 23개 항만의 정보가 공유되며 한국은 매년 1개 항만씩 공유 확대
 - * 한국(부산·인천·광양·울산·평택·당진·포항), 중국(닝보·저우산·윈저우·칭다오·톈진·다렌·베이하이·핑창·친저우), 일본(도쿄·요코하마·고베·오사카·가와사키·유키카이치·니카타·후시카·토야마)
- (‘컨’상태 정보) 한국(6종), 중국(4종), 일본(5종)의 정보를 공유 중이며, ‘환적정보’ 등 정보공유 확대방안 지속 논의
 - * ‘컨’ 상태 제공현황 : 한국(반입, 반출, 양하, 적하, 통관진행, 통관완료), 중국(반입, 반출, 양하, 적하), 일본(반입, 반출, 양하, 적하,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정보)

- (위험물 정보) 한국에서 한중일 과장급회의('19.12)에서 3국 위험물 관리정책 공유 필요성이 논의됨에 따라 널넷시스템을 활용한 위험물 정보 공유 추진 제안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3국 간 NEAL-Net 대중화 및 서비스 분야 확대
 - 복합운송(선박과 철도)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 하여 차기 회의에서 결과 공유
-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지속 추진
 - 아세안 지역 등과의 국제협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른 국가의 정보시스템까지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 추진
- 제27차 NEAL-Net 전문가회의 개최(한국) : '20년 6월 또는 7월
 - * 전문가 회의는 1년에 1~2회 정기 개최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동북아 항만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연계(합계)	'21~'40	42	-	-	-	42	
- 동북아 항만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21~'40	42	-	-	-	42	계속

해운금융 및 선박관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리번호	5-4-사	구 분	예산, 비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 항만운영과)	협조부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문체부, 산업부 등
사업기간	2010~계속	담당자	고규환, 윤현석, 나유성 사무관 (044-200-5716, 5747, 5773))

□ 현황 및 문제점

- (해운금융) 해운산업의 핵심 자산은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선박금융 환경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미흡
 - 선진 선박금융 기법과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고급 선박금융전문가를 육성하여 해운산업 질적 재도약의 기틀 마련 필요

 -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산업은 주로 선원관리 업무 위주로 영위하고 있어, 업무영역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등 국제적인 경쟁력은 미흡
 -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선박관리전문가를 양성하여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 마련 필요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 99%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간 성장 주안점이 항만 물동량 위주로 이루어져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육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 해운·조선업의 장기 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항만 물동량 확보와 더불어 항만 운영에 필수요소인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필요
-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16개 운송사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등으로 구분('19년말 기준 약 4,250여개 업체, 대부분 상시근로자 10명 내외의 중소 또는 소기업 형태)

(참고) <항만운송관련 업체 현황('19.12월)>

(단위 : 개소)

구분	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기타
계	4,257	2,428	317	204	82	266	107	90	93	99	165	55	351
항만용역	768	191	45	39	35	47	32	41	37	41	64	30	166
물품공급	2,450	1,721	174	103	16	168	46	28	23	36	66	14	55
선박연료 공급업	552	168	28	45	26	39	23	19	27	16	29	10	122
선박수리	397	295	56	5	5	9	6	1	5	5	2	0	8
컨테이너수리	90	53	14	12	0	3	0	1	1	1	4	1	0

※ 2018년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부산항만공사)

□ 목표 및 추진전략

- (해운금융)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통해 해운·금융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운산업 질적 도약을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확산 등 글로벌 해운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금융 플랫폼 시스템 등 신규교육 도입
 - 해운산업 전담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18.7)에 따라 본 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에 단계적 이관
 - * 1단계('20년~'22년) :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 → 2단계('23년~) : 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
-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사업 추진으로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로 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 구축
 - 선박관리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추진
 -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4]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국내·외 신시장 발굴 및 업계 활성화(선용품공급업), 연료유 품질 개선 제도 마련(선박연료공급업) 등
 - (선용품공급업) 국내외 수요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업계의 국제선용품협회(ISA) 등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비즈니스 영업전략 지원 등
 - * 선용품업계 단가 절감 및 구매력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 (선박연료공급업) 품질 개선(정품·정량) 및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하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급유선에 질량유량계 설치 유도 등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해운금융) 교육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본과목, 전문과정, 선도과목을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 해운금융 기초 지식, 실무 기술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형 실무과목 적극 교육
 - * 4차 산업혁명 대응과목: 디지털화 플랫폼, 해운기업자금관리 플랫폼, 해운·선박금융 블록체인 모델,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사례 연구 등
- (선박관리업) 선박관리회사 재직자와 비재직자·승선경력이 있는 해기사(3~4급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심화과정 교육훈련 시행
 - * 교육훈련과목: (양성과정) 선박관리입문, 선박관리실무, 선원관리, 운항관리, 상업적 관리, 검사 및 심사 (심화과정) 선원관리, 선박관리 I·II, 안전·품질관리, 상업적 관리과정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선용품 공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법인 설립, 공동배송 기반 마련 지원,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 추진
 - * 부산항만공사, 한국선용품산업협회,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조합을 중심으로 도매법인 및 공동배송 실행, 우수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20.상)
 - 4대 정유사 및 한국급유선선주협회로 구성된 '선박연료공급업 상생 협의체'를 통하여 연료유 품질향상을 위한 질량유량계 설치 방안 논의(20.상)
 - * 선박 연료유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12억원(국비 1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5년 : 총 12억원(매년 3억원, 국비 3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해운금융, 선박관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항만 운송관련사업체 육성(합계)	'21~'25						
-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	'21~'25	2	-	-	-	2	계속사업
- 선원정책 및 선원 인력 역량강화	'21~'25	10	-	-	-	10	계속사업

* 해양진흥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23년 이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미정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편리한 생활공간 창출

관리번호	5-5-가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협조부서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팀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등
사업기간	'2018 ~ 장기계속	담당자	정승수 서기관 (044-201-4097)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빅데이터·AI 등)을 도시에 접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미래 성장동력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시범도시를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선도모델로 조성

*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EDC) 지정('18.1), 시행계획 발표('19.2), 부산 착공('19.11), 세종 실시계획수립('19.12)

-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기업·시민과 함께 규모에 따라 ^(大)시티-^(中)타운-^(小)솔루션 3개 유형의 챌린지 예비사업 선정 및 기존 우수과제 본사업* 추진

* (시티 1기) 대전: 데이터 오픈플랫폼, 부천: 공유경제, 인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타운 2기) 통영: 스마트 전통시장, 수영구: AR·VR, 성동구: 트랜스시티, 공주·부여: 스마트 백제길

⇒ 시범도시, 기존도시 대상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등 기반마련에서 탈피, 성과가시화 와 시민체감 제고,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본격화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 추진

- (추진전략) ①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②스마트시티 확산기반 구축, ③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④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 (추진과제) 국가시범도시 성과창출,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산 등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시범도시) 4차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 추진
 -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도시 운영 및 혁신기술 도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SPC 설립·운영 추진('21년~)**
- (기존도시) 기업·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솔루션 발굴·확산 등 **100개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화 추진(~'23)
 - 중장기적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단위 확산** 및 **장애인·독거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으로 포용성 확보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8년 ~ '25년(8년간), 총 15,260억원
 - 공공 15,260억원(국비 10,651억원, 지방비 4,609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18~계속	10,651	4,609			15,260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5년까지는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21	'22	'23	'24	'25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계속	2,978	3,394	2,837	2,187	2,187

*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관리번호	5-5-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협조부서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팀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등
사업기간	'2018 ~ 장기계속	담당자	정승수 서기관 (044-201-4097)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빅데이터·AI 등)을 도시에 접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미래 성장동력
 - 도시성장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 *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특례9종,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스마트 도시법」 개정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4차산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국내외 스마트시티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양성, 산업육성 등 제도 지원 지속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 추진
 - (추진전략) ①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②스마트시티 확산기반 구축, ③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④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 (추진과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혁신성장동력 R&D 성과 창출, 스마트시티 관련 인재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통합플랫폼) 전국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외에도 복지·환경 등 서비스 분야 확대

-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20~)
- (R&D) 데이터 허브 기술 실증 및 6대 스마트서비스(교통·안전·행정·에너지·환경·생활복지) 개발 본격화하고 '22년부터 비즈니스 및 확산 추진
 - R&D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22~)
- (인재·산업육성) 석박사 과정(6개 대학 360명), 창업교육·멘토링 등을 지원('19~)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얼라이언스*) 등 생태계 조성
 - *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약 500개 기업 참여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8년 ~ '25년(8년간), 총 5,412억원
 - 공공 5,077억원(국비 3,362억원, 지방비 1,715억원)
 - 민간(민자) 335억원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계속	3,362	1,715		335	5,412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계속	2,519	1,506		44	4,069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계속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R&D (국토부·과기부 공동)	'18~'22	843	209		291	1,343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25년까지는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21	'22	'23	'24	'25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계속	558	638	728	692	692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계속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R&D (국토부·과기부 공동)	'18~'22	177	127	-	-	-

*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관리번호	5-5-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협조부서	외교부
사업기간	2018 ~ 계속	담당자	최희정 사무관 (044-201-4972)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시티는 교통·에너지 등 도시내 개별 분야와 ICT,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미래 먹거리

-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의 성장을 통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됨(Markets and Markets, '19)

-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17.12)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 스마트시티,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핀테크, 미래차(전기·수소차·자율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 한국은 다수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 기술을 강점으로 가진 만큼, 적극적 해외 진출로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 필요

- 최근 저유가 상황 등으로 부진한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도시·인프라 수출 전략에 대한 재편도 요구

* 해외건설 수주(억불) : ('14) 660 → ('15) 461 → ('16) 282 → ('17) 290 → ('18) 321

□ 목표 및 추진전략

○ 패키지형 도시 수출과 개별 스마트 솔루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종합 지원방안 마련

-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 국제행사 개최 등도 병행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K-City Network)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 정부 간 협력(G2G)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도입
 - 국제공모를 통해 아세안·중남미 등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계획수립*과 초청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력사업(11개) 착수
- *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MP)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지원
- (협력센터 설립) 해외 현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사업 발굴, 수주 지원
- (공동사업)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 세미나를 개최, 한국 전문가를 파견 공동사업 발굴
- (엑스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9.9-11) 계기, 고위급 회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스마트시티 정책·기술 홍보 및 해외 수출 기회 확대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8년 ~ 계속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이후
합계	9,500	12,000	15,000	15,000	15,000
국비	9,500	12,000	15,000	15,000	15,000

□ 기타 사항

-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및 협력센터 순차적 확대 추진

* ('20) 사업 5개, 센터 4개 → ('21) 사업 7개, 센터 6개 → ('22) 사업 10개, 센터 12개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축과 운영

관리번호	5-5-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협조부서	과기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이선영 사무관 (044-201-3465)

□ 현황 및 문제점

- 공간정보는 국토 관리 및 도시·건설·환경·교통 등 국가 행정과 민간 위치기반서비스(내비게이션, 지도포털 등)의 기본 인프라
 - * 데이터 80% 위치와 연관(2012, ESRI) →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기준(Hub)

- 특히,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및 ‘융·복합 기술’의 발달로 공간정보 중요성이 증대*되며,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구축 필요성 부각
 - * 국토부 8대 혁신성장동력으로 ‘가상현실’ 선정(’18 ~ ’27년 국토교통기술 종합계획)
 - ** 3차원 공간정보 기반으로 각종 행정·센서정보를 융합한 DB 및 플랫폼

- 국가 혁신성장동력(’17.12, 정부합동 / 13개 분야) 중 6개 분야(스마트시티, 가상현실, 빅데이터, 자율차, 드론, 로봇)가 공간정보 기반 기술

- 해외 선진국 및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적인 투자로 공간정보 및 가상국토 기술개발 및 구축, 활용 극대화 추진
 - 반면, 국내는 중소기업 위주의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미흡 (→ 국가적 차원의 가상국토 구축 추진 필요)

- * 국가별 공간정보 인프라·정책, 연구역량, 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9위로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최하위

<표> Geospatial Industry Fabric Index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미국	54.87	19	한국	9.19
2	독일	35.06			
3	영국	20.10			

출처 : GeoBuiz 2018 Report Geospatial Industry Outlook and Readiness Index, GEOBUIZ, 2018

□ 목표 및 추진전략

- ①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플랫폼’ 기술개발 및 구축
- ②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국토관리 강화



<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추진전략(안) >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①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플랫폼’ 기술개발 및 구축
 -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22 ~ '26년, 국가 R&D)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20년~)

* '20년 : R&D 기획, 예타 추진 중 / '22 ~ '26년 / 약 1,838억원(국비 1,378억원)

- 3차원 공간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국토·도시를 분석·관리하는 '디지털트윈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운영 ('20년 ~)

* 전국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추진 / 총예산 : 미정

②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국토관리 강화

- 재난·재해 대응, 국토·자원 관리 등 국토 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관측위성(2기) 개발·발사* 및 운영 (과기부 협업)

* '21년까지 위성 1·2호 발사 예정 / '15 ~ '21년 / 총 2,434억원('20년 약 389억)

* '21년 ~ : 위성센터 운영(위성영상 가공 활용 등) / 매년 약 100억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품질 통합관리·진단을 통해 공간정보 전반의 품질 향상 ('20년부터 본격 추진)

* '19년 : 시범운영 / '20년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 '20년 6억

- 공간정보 수집·제공 플랫폼을 고도화*('20~'22년)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20년 ~)하여 지능형 국토관리 기반 조성

* 전자정부지원사업 / '20 ~ '22년 / 약 280억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인재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20년 약 13억)

* 공간정보 특성화교(고교, 전문대, 대학원)에 장학금, 교육 운영비 등 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장기계속, 총 5,631억원

- 공공 5,171억원(국비 5,171억원) / 민간(민자) 46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21 ~ '25년)

- ('21) 238억원, ('22) 534억원, ('23) 552억원, ('24) 601억원, ('25) 550억원

* 디지털 트윈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예산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21 ~ '25년) >

(단위: 억원)

실천과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①가상국토 플랫폼 기술개발 및 구축	-	288	399	448	397
- 기술개발	-	288	399	448	397
- 구축·운영	(미정)				
②지능형 국토관리	238	246	153	153	153
- 국토관측위성	100	100	100	100	100
- 품질 통합관리	6	6	6	6	6
- 플랫폼 고도화	93	93	-	-	-
- 인재 양성	39	47	47	47	47
합계	238	534	552	601	550

○ 전체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축과 운영	'20~계속	5,171	-	-	460	5,631	
①가상국토 플랫폼 기술개발 및 구축	'21~계속	1,378	-	-	460	1,838	
- 기술개발	'22~'26	1,378	-	-	460	1,838	
- 구축·운영	'21~계속	-	-	-	-	-	미정
②지능형 국토관리 강화	'20~계속	3,793	-	-	-	3,793	
- 국토관측위성	'20~계속	2,489	-	-	-	2,489	
- 품질 통합관리	'20~계속	126	-	-	-	126	
- 플랫폼 고도화	'20~'22	280	-	-	-	280	
- 인재 양성	'20~계속	898	-	-	-	898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공간빅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관리번호	5-5-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협조부서	국토부, 과기부
사업기간	2014~장기계속	담당자	정은정 사무관 (044-201-3491)

□ 현황 및 문제점

-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공간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요구 증가**하는 가운데,
 - '14년부터 공간정보 기반으로 대용량 행정·민간 정보를 분석 융합하여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운영**
 - * 초기 기획단계의 높은 기대치와 달리 데이터·시스템·업무 프로세스 상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활용성이 미비한 실정

□ 목표 및 추진전략

- **(외부망 서비스)**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산·학·연 등의 민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 및 안정화
 - * 현재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내부 행정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요청 시 분석 후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 중
- **(표준분석모델 확충)** 외부망 전환에 따른 다양한 활용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형 및 확산형 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 **(플랫폼 고도화)** '19년 솔루션에 대한 BMT결과를 토대로 S/W를 교체하고 국토교통 R&D성과 도입 등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 ☞ **사회현상을 정확히 진단·예측하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및 활용확대 : '21~'25년
 - * 25년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변화정보를 AI 등을 통한 분석모델 발굴
- (활용 사례 창출) 지역개발, 교통수요 분석, 재난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강화
 - * 과적단속 최적위치 선정, 지역별 주택구입 및 이주패턴 분석(국토부), 10분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서울시), 건강보험지도(건보공단)등 24개 과제 협업 추진



- (표준모델 발굴) 기 수행 분석과제(모델)과 신규모델 발굴을 통해 지속적 생산 가능 대상을 先 분류,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 발굴
- ① [지속형] 건강보험관리공단 전국 의료이용지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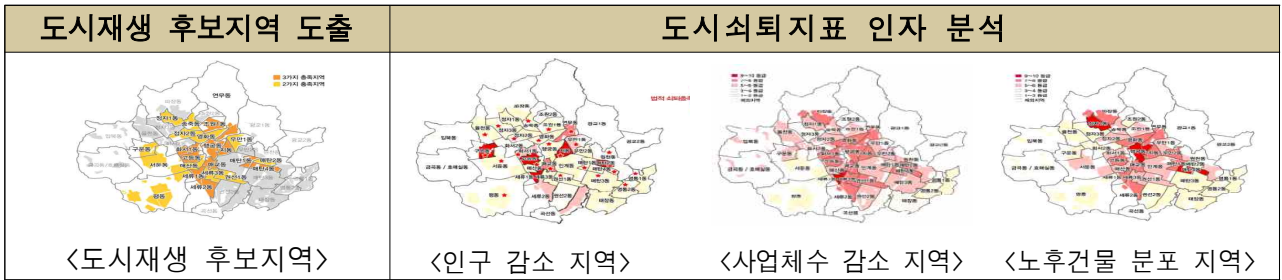
* (예시) 환자의 출발지와 병원간 시간, 거리의 분석 및 응급환자의 이용 접근 취약지역 분석

- ② [지속형] 지적재조사기획단(국토부) 유형별 지적불부합지 분석



* (예시) 도로/대지와 새주소건물과 중첩되는 정보 파악 후 지적이 부합하지 않는 공간 추출

③ [확산형] 경기도 수원시 도시재생 후보군 도출 및 모니터링



* (예시) 도시쇠퇴지표 인자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도시재생 후보지역 도출

④ 경남 함양군 지역축제(산삼 엑스포) 현황분석



* (예시) 카드매출의 축제 전, 축제 중, 축제 후, 전년대비 각 한달 간의 변동사항을 비교 분석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100억원
 - 공공 100억원(국비 1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21~'25년)
 - ('21)20억원, ('22)20억원, ('23)20억원, ('24)20억원, ('25)2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간빅데이터 체계구축	20	20	20	20	20
-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20	20	20	20	20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공간빅데이터 체계구축	'21~계속	100	-	-	-	100	

□ 기타 사항

○ '19년부터 과기부 주관으로 10대 주요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100개 공공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

* (10대 주요 분야) 금융(비씨카드), 환경(한국수자원공사), 문화·미디어(한국문화정보원), 교통(한국교통연구원), 헬스케어(국립암센터), 유통·물류(매일방송), 통신(KT), 중소기업(더존비즈온), 지역경제(경기도), 산림(한국임업진흥원)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목록

관리번호	세부실천계획 과제 목록	소관부처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6-1-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행과 경제협력 추진	통일부
6-1-나	남북산림협력 및 접경지역 산림관리	산림청
6-1-다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국토교통부
6-1-라	북한 주요 항만 현대화	해양수산부
6-1-마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 및 관리·개발	통일부
6-1-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6-2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6-2-가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도로분야)	국토교통부
6-2-나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철도분야)	국토교통부
6-2-다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국토교통부
6-2-라	신남방·신북방 해외건설 시장진출 지원	국토교통부
6-2-마	동북아 산업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교류 확대 및 한류콘텐츠 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6-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6-3-가	파리협정 후속 협상 대응 및 이행	환경부
6-3-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및 해양환경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
6-3-다	한·중·일 유해 해파리 공동대응 및 황해갯벌 보전 협력	해양수산부
6-3-라	해외인프라 건설·수주 활력 제고	국토교통부
6-3-마	교역 대상국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국토교통부
6-3-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
6-3-사	항공 인프라 활용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국토교통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행과 경제협력 추진

관리번호	6-1-가	구 분	비예산
주관부서	통일부 (교류지원과)	협조부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기간	2018 ~ 장기계속	담당자	박형준 사무관 (02-2100-2392)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정부는 정부협의체 회의, 국책연구기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안)」을 마련하고 '18.4월 정상회담에서 관련 자료를 북측에 전달
 - 또한 '18.9월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남북공동특구' 조성 및 남북 공동연구·시찰 방안 논의
- (문제점) 그러나 '19년 북미정상회담(2.27~28.) 이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협의에 차질
 -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대화국면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내부 준비) 여건조성과 사전준비에 중점을 두고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 지속

- 특히 신경제구상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바, 통일부 주관 평화경제국제포럼, DMZ평화협력국제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구상을 설명하면서 공감대 확산 노력
 - 또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열린 구상’으로 관리하며 관계부처·전문가 협업 하에 구상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
- (대북 협의) 주요 계기마다 중단된 공동특구구상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 및 현장시찰을 북측에 제의하고, 신경제구상에의 북한 참여를 위한 협력 사업 준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남북 산림협력 및 접경지역 산림관리

관리번호	6-1-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산림청	협조부서	통일부
사업기간	장기계속	담당자	하지수 사무관(042-481-1861) 김진기 사무관(042-481-8858)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 전체 산림의 28%(262만ha, '18 국립산림과학원)가 황폐화된 상태
 - 북한 산림훼손은 산림기능 저하로 이어져 북한 자연재해(가뭄, 산사태) 빈발의 원인*이 되고 초미세먼지**, 산불남하 등 국내에도 피해 초래
 - * 농지확장을 위한 산림훼손이 북한 내 홍수피해 초래('16, 벨기에 재난역학연구소)
 - ** 수도권 초미세먼지 중 14.7%가 북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18,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산림분과회담 합의사항 이행 및 협력확대를 통한 남북관계발전 필요
 - 양묘장현대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림분과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산림조성·보호 협력확대를 위한 다목적 기반구축 필요
 - 산림비율이 70%인 DMZ에서 산림재해발생 및 훼손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접경지역 산림 보전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숲으로 하나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		
추진전략	㉠ 신뢰기반 구축	㉡ 호혜적 협력	㉢ 성과 지속창출
	공동시범사업으로 초기 상호신뢰 기반 마련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 발굴, 추진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합의사항의 단계적 추진 및 호혜적 사업 발굴
 -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기 합의사항의 단계적 추진
 -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등 남북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산림협력 사업 발굴 및 제안
- 접경지역 산림관리를 통한 평화협력 녹지축 조성
 - DMZ 내 산림실태 조사, 산림훼손지 복원 등 접경지역 산림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 추진
- 남북산림협력 확대에 대비, 인프라 구축 및 생산새숲 캠페인 전개
 - 스마트 양묘, 산림병해충 대응 등 종합적 남북산림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거점별로 특화하여 조성
 - * (거점별 특화사항) △서부(파주) : 스마트양묘기술 △중부(철원) : 산림병해충방제
 - 북한 산림복구에 적합한 수종을 중심으로 묘목생산 및 종자채취
 - 산림협력 교재개발, 전문가 세미나 등 남북 산림과학기술 체계정립
 - 생산새숲 캠페인 전개를 통한 대국민 참여활성화 및 민간협력 강화

□ **투자계획**(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40년(20년간), 총 2,370억원(공공)
- 연차별 투자계획
 - ('21~'25) 연도별 투자계획 : 853억원(공공)

세부 실천과제	계	'21	'22	'23	'24	'25	비고
합계	853	153	175	175	175	175	
○ 남북산림협력	358	98	65	65	65	65	
- 남북산림협력센터 (대북양묘장) 조성·운영	328	92	59	59	59	59	
- 대북용 종자채취	15	3	3	3	3	3	
- 남북산림협력 과학기술체계정립	15	3	3	3	3	3	
○ 접경지역 산림관리	495	55	110	110	110	110	
- 접경지역 산림조사 및 산림복원	495	55	110	110	110	110	

- ('26~'40) 전체 투자계획 : 1,417억원(공공)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1,417	-	-	-	1,417	
o 남북산림협력		977	-	-	-	977	
- 남북산림협력센터(대북 양묘장) 조성·운영	'26~'40	887	-	-	-	887	
- 대북용 종자채취	'26~'40	45	-	-	-	45	
- 남북산림협력 과학기술체계정립	'26~'40	45	-	-	-	45	
o 접경지역 산림관리		440	-	-	-	440	
- 접경지역 산림조사 및 산림복원	'26~'29	440	-	-	-	440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관리번호	6-1-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협조부서	통일부, 해수부
사업기간	미정	담당자	문수빈 사무관 (044-201-3651)

□ 현황 및 문제점

- ('18년) 판문점선언(4.27.)에 따라 교통인프라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북측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
 - 남북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 연결구간 공동점검 및 북측 현지 공동조사를 거쳐 착공식 개최(12.26.)
- ('19년) 제2차 북미회담(2.28., 하노이)에서 비핵화·제재완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남북협력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 목표 및 추진전략

- (북측구간) 대화 재개, 대북제재 완화 등 협력재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측 입장에서 북측 구간 현대화 추진방안 마련
 - 향후 협력 재개시 주요 구조물의 기초자료 확보, 현대화를 위한 추가 현지조사 필요
 - 조사 후 북측과 협의하여 현대화 기본방향 등 기본사업계획 마련
- (남측구간)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등 북측협의 없이 가능한 남측구간 연결사업 지속 추진
 - * 경의선 문산~임진강 구간 전철화('20.3. 개통예정),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27. 개통목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추진('24. 준공목표) 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경의선, 동해선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연결을 단계적으로 추진**
 - 서해선(서울-개성-평양-신의주)과 북·중·러 접경지역(중국 동·북부-극동 러시아)에 대해 철도·도로 기능의 정상화 방안 모색
 - 철도는 남북 연결(경의선, 동해선)과 북한 간선철도망 성능의 복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되, 단계적인 고속화 방안도 모색
 - 도로는 경의선, 동해선의 기존도로 개보수 또는 신설을 통해 남북 연결 방안을 모색하고, 동아시아(AH1) 및 북한동부·극동러시아(AH6) 연계 검토
-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보완과 물류망 구축 검토
 - 항공은 동-서해 국제항공로 우리측 신설안에 대한 대북협약, 비행 안전 담보조치 등 추진
 - 북한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하역장비 교체, 신규 선석 건설 등 검토

□ 투자계획(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경의선 철도>

- 전체 투자계획 : '16년 ~ '21년(6년간), 총 388억원
 - 공공 388억원(국비 388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16년~'18년 문산~도라산 실시설계
 - '20년 문산~임진강 구간 전철화 공사 완공 및 임진강~도라산 구간 공사 착수('20년 예산 178억)

<동해북부선 철도>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7년(7년간), 총 28,520억원
 - 공공 28,520억원(국비 28,520억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 전체 투자계획 : '19년 ~ 24년(5년간), 총 5,634억원
 - 공공 5,634억원(국비 2,793억원, 기타(도공) 2,841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문산-도라산	1,226	1,075	1,476	1,445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						
- 경의선(철도)	'16~'21	388	-	-	-	388	
- 동해북부선(철도)	'21~'27	28,520	-	-	-	28,520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19~'24	2,793	-	2,841	-	5,634	
- 경의선(도로)	미정	-	-	-	-	-	
- 동해선(도로)	미정	-	-	-	-	-	

※ 도로(경의선, 동해선)는 현대화 추진방안 미확정

북한 주요 항만 현대화

관리번호	6-1-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협조부서	통일부
사업기간	2020~2030	담당자	김건의 서기관 (044-200-5911)

□ 현황 및 문제점

- 중국, 베트남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관심이 높은 북한에게 항만은 해외에 지하자원, 완제품 등을 판매하는 수출통로이며,
 - 북한의 부실한 육상교통 인프라를 고려할 때, 협력사업 초기에 대량의 물자와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필수적임
 - * 12천TEU 운송 시: 화물차 6천대, 철도 60량, 피더선박 12척, 대형선박 1척
- 따라서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하여 경제난으로 노후화된 북한 항만시설과 하역장비를 개보수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 북한항만의 하역능력은 약 4천만 톤으로 추정('16)되며, 남한의 3.7% 수준

< 북한 주요항구 현황 >

	항구	하역능력 (만톤)	접안능력 (만톤)	수심 (m)	부두연장 (m)	주요 취급화물
동 해	선봉	300	20	23	455	유류
	나진	680	1.5	12-15	2,515	석탄, 목재, 잡화
	청진	1,090	2	7	2,870	석탄, 정광, 원유, 잡화
	흥남	350	1	6	1,737	비료, 정광, 잡화
	원산	90	1	6	900	시멘트, 양곡, 잡화
서 해	남포	1,050 (‘컨’ 부두 제외)	5	8-14.5	2,726	석탄, 잡화, 컨테이너, 유류
	송림	198	1.5	9.8	300	석탄, 원유, 잡화(철재)
	해주	195	0.7	6.5	570	시멘트, 잡화
	계	4,253	60.2		12,073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동해관광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와 연계한 북한 거점별 항만 현대화로 대규모 물자 운송 및 수출입 화물 처리 지원
- (추진전략) 공동특구와의 연계성, 배후산업 현황, 항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요 5대 거점항만을 지정하여 현대화 및 단계별 개발

< 북한 주요 5대 거점항만 >

대상 항만	주요 내용
① 남포항 (서해)	<p>☞ 평양의 관문항으로 북한 최대 수출입 종합 거점항만</p> <p>① 시설현대화 : 컨테이너 부두 하역장비 등 항만현대화 ② 항만시설 확충 : 배후산업 발전에 따른 화물부두 신규 공급</p>
② 나진항 (동해)	<p>☞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남·북·중·러 허브 항만</p> <p>① 시설현대화 : 기존 화물부두 확장 및 현대화 ② 항만시설 확충 : 동북3성, 극동러시아와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시설 확충</p>
③ 단천항 (동해)	<p>☞ 북한 최대 광물자원 수출항만</p> <p>① 시설현대화 : 광물운송 전용설비 등 하역시설 현대화</p>
④ 원산항 (동해)	<p>☞ 환동해 국제물류·관광 거점항만</p> <p>① 시설현대화 : 기존 화물부두 대형화·현대화 ② 여객부두 조성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부두 도입 ③ 항만시설 확충 : 물동량 전망에 따른 화물부두 신규 공급</p>
⑤ 해주항 (서해)	<p>☞ 개성공단 지원 및 건설자재 수출항만</p> <p>① 항로 개발 : 항로 준설과 연계한 국내 바다모래 공급 ② 시설현대화 : 개성-해주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화물부두 현대화</p>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등 대외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실천과제 추진

- (현지조사) 북한항만 현대화를 위해 주요 5대 항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
 -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 이동, 물품 반입 등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계부처(통일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

○ (남포항 현대화) 북한 최대 수출입항이며 대외교역 정상화 시 대중교역 거점항구로 활용될 수 있는 남포항을 우선 현대화

- 대북제재 완화로 북측의 대외교역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항만시설 현대화

○ (항만 개발확대) 나진항, 단천항, 원산항, 해주항 등 4개 거점항도 거점별 특색에 맞도록 현대화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도 추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7년, 총 5,088.5억원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되, 투자비 회수방안을 수립하여 항만개발·항만운영을 희망하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 유도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항만 현지조사	1년	27.5				27.5	
항만 현대화	6년	5,061				5,061	
- 남포항 현대화	6년	557				557	
- 해주항 현대화	6년	392				392	
- 원산항 현대화	6년	2,341				2,341	
- 단천항 현대화	6년	410				410	
- 나진항 현대화	6년	1,361				1,361	

*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세부 검토 필요

□ 기타 사항

○ 북한으로의 물자 이전, 자본투자 등은 UN 대북제재와 美독자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부처(통일부, 외교부) 협조 필요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 및 관리·개발

관리번호	6-1-마	구 분	예산 / 비예산
주관부서	통일부(남북접경협력과) 문체부, 문화재청, 행안부	협조부서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등
사업기간	2020~장기계속	담당자	최진용 사무관 (02-2100-2367)

□ 현황 및 문제점

- 유관부처 협업을 통해 △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 중
 - * 대통령님, 제74차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천명 및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제안(’19.9.24.)
- 다만, 최근 ASF,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DMZ 지역 방문 및 관련 사업 본격화에 차질 발생
 -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면서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도 지연

□ 목표 및 추진전략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UNESCO 세계유산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 추진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남북 공유하천 공동 관리 △접경지역 산림협력 △남북 도로연결 등 접경지역 공동관리·이용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 DMZ 일원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벨트 구축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 단기적으로 △DMZ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DMZ 남북공동실태 조사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신청서 제출 △등재이후 DMZ 남북공동 관리기구 구성·운영 추진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 남북 협의를 통해 DMZ 및 인근 접경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조성, 평화경제 시대 구현을 위한 선도적 거점으로 개발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협력지구 內에 UN기구/국제기구 유치, 상호 안전보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국제 협력의 중심지로 육성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연계하여 실효적인 추진방안 마련
 - * 남북군사당국간 군사적 보장 합의 추진 및 UNC측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 * 우선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합의사안을 중심으로 지뢰제거작업 추진 ⇨ DMZ 내 쏘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뢰제거 시행
- 우리 軍의 역량 강화 및 민간·국제기구(단체) 참여 기반 구축
- 제반 여건 조성時, 지뢰 관련 국제레짐에 남북 동시가입 검토

【통일경제특구법 등】

- 단기적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특구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및 국회 입법심사 과정 적극 지원, 관계부처 및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법령 제정 이후 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통일경제특구 지정, 구역 내 지구 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 추진

【남북 공유하천 공동 관리】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우선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남북 공유하천 합동 유역조사 실시
 - △임진강·북한강 유역 전반의 지형특성 △하천환경 조사 △수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실시
- 장기적으로 남북 공유하천 공동 활용 체계로 발전
 - 재해대책, 수량·수질, 산림복구 등 공유하천 전반에 대한 상설 협의기구로서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설치
 - 공유하천 △유량확보 및 합리적 수자원 배분시스템 △공유하천 댐간 연계운영체계 구축 △종합개발·보전계획 수립 등 협의

【접경지역 산림협력】

- 당면하여 봄철 접경지역 산불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정보 공유 등 협력 제의
 - 산불 발생시 軍 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보공유 등 초기 협력 추진
- GP 철수·유해발굴 등 DMZ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 산림의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 북한 산림병해충 관련 △피해현장조사 △시료채취·분석 △공동방제 △방제기술 교환 등 추진

【접경지역 남북 도로연결 등】

- 대북 제재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접경지역 도로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복원 추진
- 단기적으로 남북 도로 단절구간 연결 사전 점검 및 대북협의를 추진
 - 단절구간 현장점검 실시, 접경지역 지자체 수요 파악, 도로 복원 관련 북측 입장 파악 및 노선 협의 등

- 중장기적으로 남북 도로 단절구간 연결 사업성 검토 및 추진 계획 수립
 - 통일경제특구, 금강산 관광 활성화, DMZ 평화적 이용 및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과 연계한 남북도로 복원 사업계획 수립
 - 남북 도로 복원 남측 구간 타당성 검토 및 공사 착공, 북측 구간 현지조사, 공동설계·시공 방안 등 협의

【DMZ 일원 관광벨트 구축 추진】

- ‘DMZ 평화의 길’ 운영 및 ‘한반도 평화둘레길(가칭)’ 연결 추진
 - 단기적으로 고성 DMZ 평화의 길 보존GP 코스 추가 운영
 - 중장기적으로 동·서를 잇는 DMZ 평화의 길(인천 강화~강원 고성) 개통
- 중장기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포함 남북 연계 관광루트 개발 및 연계 추진
 -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광교류 재개 시 강원권과 금강산권, 원산권과 금강산권 등 특구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 간 연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20년 남북협력기금에 관련 예산 반영
 - △DMZ 평화적 이용 126억원 △남북산림협력 1,275억원 등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필요 예산 확보 노력 전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관리번호	6-1-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협조부서	통일부, 행안부
사업기간	2013~2022	담당자	최대경 사무관 (044-203-2982)

□ 현황 및 문제점

- DMZ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서 남북 긴장과 분단 대립의 상징적 현상이며 정치·외교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임
- 우수한 생태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식생우수지역,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 국제적 관심도 높음
-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로 지리적 특성 및 자연환경자원을 통한 관광자원개발에 제약이 큼
- DMZ의 관광 잠재적 가치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

□ 목표 및 추진전략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UNESCO 세계유산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관련 국제기구 유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DMZ 일원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평화 관광벨트 구축
 - DMZ 생태·역사문화·평화 관광벨트의 단계적인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2020년 추진 계획(10개 사업 92억원 지원)
 - 지역관광개발 : 임진강 평화공원(연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철원), 공예 태봉국 테마파크(철원),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양구), 소양호 빙어 체험마을(인제) 등 5개 사업 49억원 지원
 - 광역연계사업 : DMZ 문화예술삼매경 기반조성, DMZ 문화예술삼매경 설치용역, DMZ 문화예술삼매경 연계홍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시설 연계홍보, 지역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 43억원 지원
- 2021~2022년 추진계획 : 2020년도 추진 현황 고려하여 향후 확정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13년 ~ '22년(10년간), 총 2,391억원
 - 공공 2,281억원(국비 1,056억원, 지방비 1,225억원)
 - 민간(민자) 11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연도	2021	2022
사업비(백만원)	15,863	7,476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3~'22	1,056	1,225	-	110	2,391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도로분야)

관리번호	6-2-가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0 ~ 2021	담당자	신우철 사무관 (044-201-3874)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시안 하이웨이 국제협정 당사국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노선(AH1, AH6, AH32)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북측 구간 통행 복원과 인프라 정비는 통일고속도로 구축의 선결 조건임

□ 목표 및 추진전략

- 한반도新경제지도 구상, 일대일로(中) 등의 도로망은 AH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경제지도의 수송축으로서 AH 활용
 - * 6·15정상회담^{2002년}, 10·4정상회담^{2007년} 판문점선언^{2018년}과 관련한 남북 간 연결, 또는 북측 도로들은 모두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 * 한반도 북측 구간 신설, 개량을 위해 AH 국제기준, 국가 간 수송절차 등 적용
 - * 3通(통행/통신/통관)을 위한 육상 이동로 역할을 통해 경제통일 촉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1단계) 신규노선 지정을 위한 타국 사례 분석 및 대안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우리부(안), '20. 08)
 - 타국 사례*분석을 통해 신규노선 지정을 위한 검토사항(B/C, 민감도 분석 등) 및 절차 파악
 - * 베트남/캄보디아('15, AH17), 몽골('17, AH35), 러시아('19, AH9), 이란('19, AH88)

- (2단계) 신규노선(안)과 관계된 주변국(중국) 협의 및 원활한 안건 통과를 위한 UNESCAP 워킹그룹 회원국 협의 실시(~'20. 11)
 - 제25차 한중도로협력회의(하반기) 및 '20 PIARC 연례회의 시 중국대표단(도로국장) 면담 실시
 -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워킹그룹 회원국(32개국) 중 영향력 있는 국가 조사 및 회원국 순회 협의 실시

- (3단계) 국제협정 개정안(AH 노선 신규 추가) 작성(~'21. 03)
 - 신규노선 추가에 대해 제안서 작성 및 의제 제출*
 - * WG 회의 45일 전 회원국에 배포 필요(UNESCAP 국제협정 Article 9)

- (4단계) 9차 워킹그룹 회의('21 하반기) 참가 및 신규노선 승인 ('21. 하반기)

투자계획 : 해당없음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철도분야)

관리번호	6-2-나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 ~ 장기계속	담당자	서혜린 사무관 (044-201-4643)

□ 현황 및 문제점

- 한반도 남북철도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GR) 등 대륙철도간 철도망 단절로 교통 및 물류 비효율 발생

□ 목표 및 추진전략

- 한반도 남북철도와 대륙철도간 기술적, 행정적 차이를 극복하여 장래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철도 교통·물류망 구축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러시아, 중국 등 대륙철도 운행국과 정기적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간 상이한 철도운용방식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동연구 추진

- ('21~'25년) 매년 한-중(상반기), 한-러(하반기) 철도협력회의 개최(잠정)

□ 투자계획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해당없음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관리번호	6-2-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18 ~ 2023	담당자	허원석 사무관 (044-201-3949)

□ 현황 및 문제점(추진배경)

- 유라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의 경계에 위치한 동아시아는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발전이 부진
- 이에, '18년 광복절 VIP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함께 철도를 매개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제안
- *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철도를 매개로 동아시아 경제 교류와 역내 평화 증진을 협의하는 국가 간 협의기구 설립(남·북·중·몽·러·미·일 참여)
- (전략) 철도공동체 구상 및 추진전략 정립('20년) → 관계국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포럼 설립('20년) → 정부간 양자·다자 협의체 구성('21년) → 시범사업 실시('22년) → 국제기구 설립('23년)
- ※ 구상 정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각 단계는 여건에 따라 동시 병행 추진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구상 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추진 및 이행전략 정립
-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전략('19.2~12, KDI 등, 세부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협력방안 연구('20.5~'21.5, 관계국 전문가 참여 예정)

- (국제포럼) 관계국 정부, 철도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국제포럼 설립·운영
- 국제상황 등 감안해 포럼 발족 및 포럼 국제행사 개최('20)

< EARC 국제포럼 참여주체(案) >

- (정부·공공) 국토부, 러 교통부, 中 국가철로국, 몽 도로교통부, 한·러·중·몽 철도공사 등
- (연구기관) (韓)철도연·교통연, (러)철도연, 극동해양항만기술연구소, (中)철도과학연구원, 요녕대, (日)철도종합기술연, 동북아경제연구소,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 (국제기구) 세계은행,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UN-ESCAP,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

- ('21년 이후) 국제포럼을 통해 관계국 공감대 형성 후 정부간 협의체 구성('21년말), 시범사업 등 논의·실시 후 국제기구 설립 추진(~'23년)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제포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매년 10억원, '21년~)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1~'23	10	-	-	-	10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21~'23	10	-	-	-	10	

기타 사항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은 외교부 주관 국정과제*로도 별도 관리 중

* 국정과제 98-1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內 세부실천과제에 포함

신남방·신북방 해외건설 시장진출 지원

관리번호	6-2-라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	협조부서	통일부, 외교부, 신남방특위 신북방특위,
사업기간	2018 ~ 장기계속	담당자	이윤하·이주동 사무관 (044-201-3528·3293)

□ 현황 및 문제점

- (신남방지역) 해외건설 총 수주액 중 신남방 지역의 비중은 38%('19년, 83.7억불)로 해외 건설 산업의 주요한 전략시장
 - * ('14년) 18% → ('15년) 24% → ('16년) 34% → ('17년) 32% → ('18년) 40% → ('19년) 38%
-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등 개별 인프라에서 패키지형 사업으로 변화
- (신북방지역) 해외건설 총 수주액 중 신북방지역의 비중은 3%('19년, 6.6억불)에 불과하나, 빠른 성장으로 잠재력 풍부
 - 신북방 국가들이 인프라를 본격 건설하면서 플랜트 위주에서 토목, 건축 등으로 다양화되는 한편, 재정부족으로 PPP사업이 증가 추세

□ 목표 및 추진전략

- 인프라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G2G 협력을 확대하고 공기업 중심 팀코리아를 구성, 우리 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ODA 개선, PPP사업 발굴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기업간 정보 교류·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마련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신남방지역) G2G협력을 통한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기반 조성
 - 인니 수도이전, 미얀마 달라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하여 정책·제도 마련, 기술 전수 등을 추진
 - GICC, 초청연수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필요시 정부간 MOU를 체결하여 신사업 수주 지원
 - 한-아세안 인프라·스마트시티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인프라 협력 강화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지원
- (신북방지역)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우리 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연해주 산업단지(러시아), 솔롱고 주택단지(몽골) 사업 추진, 철도·신도시 사업 등 참여와 연계
 - PPP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 발굴·검토 FS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 투자가 가능하도록 PIS펀드, GIF 등 금융수단 확대
 - 한·중 건설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추진을 위한 한-중 해외건설 협력포럼 지속 개최 등 정보교류·네트워크구축의 플랫폼 마련

투자계획 : 해당없음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동북아 산업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교류 확대 및 한류콘텐츠 진출 지원)

관리번호	6-2-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협조부서	문체부, 산업부
사업기간	2021 ~ 2025	담당자	한혜리 사무관 (044-203-2834)

□ 현황 및 문제점

- 북방지역 국가와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나, 한류 콘텐츠로 인한 호감도 증가, 사증면제 협정 체결(러, 카자흐, '14년)로 인적교류 확대 추세

* 한-러 양국 국민 상호 인식조사 결과('16,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상대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한국인 55%, 러시아인 68%

** 주변 4강 한류 현황지수('14년→'19년) : 중국 3.58 → 3.23 / 러시아 2.41 → 2.70 / 일본 2.62 → 2.82 / 미국 3.09 → 2.77

□ 목표 및 추진전략

- 러시아 월드컵 개최, '20~22년 수교 기념 등 주요 계기 북방지역 주요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우호적 여건 마련

- (정부간 협력) 북방지역 정부·민간 정책대화 활성화 및 수교 계기 '상호 교류의 해' 실시 등을 통해 상호 이해 기반 마련

* '20년 한-러 수교 30주년(문화교류의 해 추진 중), '20년 한-몽골 수교 20주년, '22년 한-카자흐, 한-우즈베크 수교 30주년 등 수교 계기 활용

- (문화행사 확대) 해외 문화 거점기관을 활용, 북방지역 주요 국가별 문화협력사업 추진

- (ODA 활용) 문화·체육·관광 ODA 확대를 통한 북방지역과 상생하는 견실한 동반자 관계 구축

- 북방지역 내 한류 확산 분위기를 활용, 한류콘텐츠 전략적 진출 도모함으로써 신규 시장 확대 및 연계산업 활성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문화교류 확대 및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콘텐츠 진출 지원
 - (정부간 협력) ‘한-러 관광진흥협의회’ 등 주요 정부·민간부문 정책 협의 채널 재개 및 활성화(‘21~계속)
 - (관광 민간 교류) 아스타나 레저 엑스포(9월), 타슈켄트 국제관광 박람회(TITF, 11월) 등 주요 국제관광박람회 상호 참가 지원(‘21~’25)
 - (ODA) ▲몽골 종합 관광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역량 강화(‘20~’22), ▲중앙아 4개국 영화 산업 육성지원*(‘20~’21, 유네스코 협력 ODA), ▲몽골 공공도서관 건립(‘21~’23, 신규 ODA) 등을 통한 모범사례 공유 및 북방지역 동반 성장 지원
 -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 확충(‘21~’25, 마케터 파견), ▲콘텐츠별 마켓 참가(‘21~’25) 등 한류 콘텐츠 홍보 확대 및 콘텐츠 기업 북방 지역 진출 지원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25년(5년간), 총 123억원
 - 공공 123억원(국비 123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문화교류 확대 및 한류 콘텐츠 진출 지원(합계)	2021~2025	123				123	
-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카자흐, 우즈벡)	2021~2025	15				15	
- 몽골 종합 관광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역량 강화	2021~2022	32				32	
- 중앙아시아 4개국 영화산업 육성지원	2021	1				1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 몽골 공공 도서관 건립	2021~ 2023	60				60	
- 북방지역 콘텐츠 해외거점 운영	2021~ 2025	10				10	
- 북방지역 콘텐츠별 마켓 참가	2021~ 2025	5				5	

□ 기타 사항

- 동 실천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 여부(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 기타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참고자료
 - 해당 사항 없음

파리협정 후속 협상 대응 및 이행

관리번호	6-3-가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협조부서	
사업기간	'20년 ~ 계속	담당자	최용식 사무관(044-201-6646)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부터 파리협정('15.12월 채택) 본격 시행
 -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18.12월)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 이행기반 마련
 - 그러나 합의되지 못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 등 이행 규칙 관련 잔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및 규칙 구체화를 위한 후속협상 대응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에 기여하고 파리협정 성실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준수
 - 기후변화 후속협상에 참여하여 선진-개도국 간 균형있는 입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달성에 대한 투명한 보고 등 협정에 따른 의무 성실 이행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파리협정 후속협상 전략적 대응 및 파리협정 성실 이행
 - 기후협약 부속기구회의 및 당사국총회 등 기후협상회의에 참여하여 선진-개도국 간 균형적인 입장 개선('20년~계속)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달성 등을 포함한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24년)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및 해양환경 협력 강화

관리번호	6-3-나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협조부서	환경부, 외교부
사업기간	2022~장기계속	담당자	김형원 사무관 (044-200-5285)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 및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문제 증가에 따라 아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구적·지역적 범위의 국제협력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환경 관련 7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7개 다자협력체 및 5개 양자협력체에 참여 중
 - * (국제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런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유엔해양법협약, OPRC, MARPOL
 - ** (다자협력체) PEMSEA, YSLME, NOWPAP, COBSEA, UNRP, APEC OFWG, NEASPEC (양자협력체) 한·중·러·일·미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일 해양환경 교류협력회의

□ 목표 및 추진전략

- (거버넌스 참여) 양·다자간 해양환경 협의체 적극 참여 및 회원국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해양환경 관리 체계 구축
 - *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OFWG) 회의, 북서태평양해양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동아시아해조정기구(COBSEA) 등
- (협력사업 추진) 주변국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접국 간 해양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실질적·효과적 대응방안 강구
 - 국제사회 주요 논의의제 및 쟁점사항, 상대국·국제기구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사업 개발 및 협력 분야 확대
 - *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해양공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해양환경 관련 국제동향 파악

- 주요 국제동향 보고 및 정책자문서(백서) 발간

○ 해양환경 관련 양·다자 협의체 대응

- 한-중·일·러 환경공동위, 한-일 해양환경교류협력회의,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등 주요 양자회의 의제분석 및 회의 참석

- PEMSEA, COBSEA, UNEA 및 유엔 해양·해양법 협약 차원의 해양환경 관련 논의 등 다자회의 의제분석 및 회의 참석

○ 양·다자 간 협력사업 수행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문가 풀(pool) 운영

- 협력사업 이행점검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락관·전문가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

- '22년부터 연간 2,65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환경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및 양·다자 간 협력사업 수행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및 해양환경 협력 강화(합계)	'22년~	26.5	-	-	-	26.5	-
- 해양환경 국제기구 분담금	'22년~	11.5	-	-	-	11.5	-
- 해양환경 국제협력 및 능동대응 지원	'22년~	15.0	-	-	-	15.0	-

한·중·일 유해 해파리 공동대응 및 황해갯벌 보전 협력

관리번호	6-3-다	구 분	예산
주관부서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협조부서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환경부
사업기간	2021~2030	담당자	이형민, 송완섭 사무관 (044-200-5315, 5313)

□ 현황 및 문제점

- (유해 해파리 대응) 최근 기후변화, 연안개발 심화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 위협 및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 해파리로 인한 수산업 피해, 국가기간산업 피해 등 연간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피해 발생(국립수산과학원, 2009)
 - 최근 국내연안에서 보름달물해파리 대량출현, 중국기인 노무라 입깃 출현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과 유해 해파리 대응 협력체계 구축·강화 필요
 - *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등 해파리 5종 유해해양생물로 지정
- (황해갯벌 보전) 국제사회는 황해 생태계를 바닷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보고, 연안습지 보호를 위한 인접국들의 보전·관리 필요
 - 황해 갯벌 보전을 위해 국가 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협력체계 강화

□ 목표 및 추진전략

- (유해 해파리 대응)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파리의 특성 고려, 한·중·일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해해파리로 인한 초국경적(transboundary)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
 - 한·중·일 간 해파리 관련 정책, 연구결과, 방제 기술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 및 강화

- (황해갯벌 보전) 황해 갯벌의 초국경적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
 - 황해갯벌 보전·관리를 위해 인접국인 우리나라 및 중국 등 해양 생태계자료 공유 및 교류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한·중·일 유해해파리 공동대응 협력체계 확대·강화
 - 유해해파리 대응 정부 협의체 구성, 기존 협력체계* 활용·확대를 통한 해파리 모니터링·예방·방제 정보 및 기술** 지속적으로 공유
 - * 한·중·일 해파리 국제워크숍('06~), 한·중 해파리 전문가 워크숍('13~)
 - ** 국내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 해파리 출현 예보, 해파리 구제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기술 전수
- 황해 갯벌 국제포럼 개최 및 협력사업 발굴
 - 중국의 황해 갯벌 세계유산 등재('19.7)에 따라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20.7) 시, 한·중 간 교대로 국제 포럼 개최('22년~)
 - 황해 보전 워킹그룹 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23년~)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1년 ~ '30년(10년간), 총 15억원
 - 공공 15억원(국비 1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한·중·일 유해 해파리 공동대응	'21~'30	15	-	-	-	15	
- 한중일 해파리 정보·기술 공유	'21~'30	15	-	-	-	15	

해외인프라 건설·수주 활력 제고

관리번호	6-3-라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이진우 사무관 (044-201-3517)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 해외진출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나, 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주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 필요

* 해외수주(억불): '14) 660 → '15) 461 → '16) 282 → '17) 290 → '18) 321 → '19) 223

□ 목표 및 추진전략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해외인프라협력센터 개소, 투자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정부지원으로 해외건설 수주제고를 목표로 추진

- (정책 금융지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등을 통한 해외 건설 금융지원 등 정책금융 조성 및 투자지원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1.5조원) 중 모펀드(6천억원) 조성('19.10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5호(신남방)/6호(신북방) 각 1,100억원 조성 완료('19.5월)

- (해외 센터설립) 핵심국가에 인프라협력센터를 신규 개소('19.7) 검토하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정보 취득 및 사업 발굴 등 역할 수행

* 인니, 베트남, 우즈벡, 케냐 4개소 운영 중(해건협은 페루, UAE 지부 운영)

- (PPP역량 강화) 해외 인프라 개발 전문기관인 KIND의 사업 발굴 및 개발·투자·금융주선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확대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정책금융 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호~7호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4호)과 신남방·북방 사업 등 투자 활성화 추진
 - 자산운용사를 활용*하여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공공부분은 정부예산 투입계획**에 따라 단계적 출자
- ** (GIF) 펀드별 각각 '19년 50억, '20년 150억, '21년 150억, '22년 150억 출자
- (사업투자) PIS 펀드의 자펀드 조성과 함께 KIND의 핵심프로젝트의 수주가능성, 예상수익률, 리스크 등 투자 검토 추진
- (해외 센터설립) 방글라데시에 KIND의 인프라협력센터* 신설('20)하고, 투자개발사업 적극 발굴('21~)
- (PPP역량 강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재무·법률·기술 등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을 연차별 확대하여 PPP사업 발굴 역량 강화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세부실천과제(합계)	'21~계속						
- 타당성조사 지원	'21~계속	약 100억원(연간)	-	-	-		
- GIF 펀드 투자	'21~계속	150억('21) 150억('22)					
- PIS 자펀드 조성 및 투자	'21~계속	-	-	-	-		

교역 대상국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관리번호	6-3-마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협조부서	산업부
사업기간	2020 ~ 장기계속	담당자	이성훈 사무관 (044-201-3527)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해외건설 수주는 '13~'14년 정점 이후 일부 감소추세
 - * 해외건설 수주실적(억불) : ('13) 652 ('14) 660 ('15) 461 ('16) 282 ('17) 290 ('18) 321 ('19) 223
 - 이는 유가변동 등에 따른 발주물량 축소와 타 국가(중국·터키 등)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
 - 또한, 해외건설시장은 국가 對 국가간 대항전 성격으로 변화,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공동 전방위적 수주지원 양상
- 이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토·도시개발에 대한 법·제도 등 노하우와 함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통한 親韓인사 발굴 도모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인프라 마스터플랜·역량강화 등 간접지원 강화,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
 -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상대국에 우리기술 표준을 전수, 향후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 해외 주요인사를 방한초청, 우리 인프라역량 홍보 및 親韓인사로 육성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 석사학위 과정, 단기연수 등 다양한 행사·연수와 연계, 타겟사업-해당인사 연결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지원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우리 '표준'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해외에 전수('20~)

- 주요 ODA 중점협력국 대상*, 도시개발·지적정보시스템구축·ITS·건설규정 등 우리나라의 강점분야를 ODA를 통해 전수('20~)

* 현재 총 24개 중점협력국 선정(국조실, '16~'20) : 아시아(베트남 등 11개), 아프리카(가나 등 7개), 중동·CIS(우즈벡 등 2개), 중남미(콜롬비아·페루 등 4개)

- 철도차량·도시계획 수출 등과 연계하여, "수출(본사업)+운영·관리(ODA)" 패키지 형태 사업지원 강화('21~)

- KSP·EDCF 사업 등과 연계한 인프라 원조 '패키지' 발굴('20~)

* 예) ('14) 튀니지 토지정보 컨설팅(KSP) → ('16) 마스터플랜수립(국토부ODA) → ('20 예정) 토지정보 구축사업(EDCF)

○ 전략적 방한초청을 통한 親韓인사 발굴('20~)

- 단기초청 연수시 '주요사업-해당국가-주제-MDB'를 연계*한 기존 프로그램 구조를 지속 추진하여, 실질성으로 도출('20~)

* 예) (협업기관) 철도 공공기관 / (주요사업) OO국 경전철사업 / (연수주제) 한국 철도 인프라 개발경험 공유 / (MDB) ADB·AIIB 등 MDB 관계자

- 방한초청하는 GICC 행사 개최시, 국토교통과학기술대전, 스마트 시티엑스포 등 유관행사와 연계, 우리기업 인프라역량 홍보강화('20~)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단위과제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세부 실천과제	사업 기간	공공			민간	합계	비고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계속	241	-	-	-	241	
인프라 ODA	계속	224.5	-	-	-	224.5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계속	8.0	-	-	-	8.0	
GICC	계속	8.5	-	-	-	8.5	

□ 기타사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제개발협력종합계획·시행계획 등)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관리번호	6-3-바	구 분	예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협조부서	-
사업기간	20 ~ 장기계속	담당자	차상헌 사무관 (044-201-3520)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수주시장은 단순도급형에서 개발자가 설계·금융조달·건설·운영 등 사업全过程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PPP)으로 전환 추세
- 동 분야는 금융 경쟁력과 정보력 등을 갖춘 주요 선진국이 이미 장악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진출은 미흡
- * (원인) 민간기업들의 경험(사업발굴 및 개발, 기획 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부족, 실현 가능한 사업발굴 및 자원조달, 국제입찰의 우위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투자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발굴·기획, 개발, 국제입찰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법률, 재무 등 관련 분야를 총괄하여 이끌어 갈 종합전문가 양성
- *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교육(매년 20~60명)

□ 투자계획 (예상소요 기준으로 추후 기획재정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전체 투자계획 : '20년 ~ 계속, 3억원/년(100% 국비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매년 3억원

□ 기타 사항

- 3년간('20~22년) 관련교육 시범운영 후 교육기관 확대 등 추진

항공 인프라 활용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관리번호	6-3-사	구 분	비에산
주관부서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협조부서	통일부, 국토부
사업기간	2021~장기계속	담당자	이호준 사무관 (044-201-4211)

□ 현황

- 일부 도시 대상 항공노선 자유화 협정* 체결, 항공 공급력 확대**, 직항 항공노선 취항 등으로 유라시아 네트워크 확장 계기 마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12년), 하바로브스키('17년)

** ▲('19) 한-몽골 인천·부산-울란바토르 노선 확대, ▲('19) 한-조지아 항공 협정 가체결(추진중) ▲('18) 한-우즈벡 항공노선 확대(주8회→주10회)

《 주요 도시 간 항공여객(내·외국인 출도착) 수 》

노선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김해-울란바토르(몽골)	37,375명	54,759명	46.5%	64,649명	18.1%
인천-타쉬켄트(우즈벡)	226,118명	250,228명	10.7%	310,792명	24.2%
김해-블라디보스톡(러시아)	52,851명	98,054명	85.5%	176,851명	80.4%

□ 목표 및 추진전략

-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항공 인프라 구축
 -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항공노선 확장 등 항공운항 활성화

□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 (러시아) 항공자유화 설정 지역(블라디보스톡, 하바로스크)과 지방 공항을 잇는 항공노선 확대를 통해 항공 인프라 기반 구축

* 러시아 관광객 공항 입국객 수('19.1~11) ▲(인천) 212,766명, ▲(김포) 1,255명, ▲(김해) 39,257명, ▲(대구) 1,457명, ▲(무안) 402명, ▲(제주) 781명

《 러시아 국제공항 노선 취항 현황('19) 》

구분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정기편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도모데도보,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야쿠츠크, 이루크츠크, 하바로보스크	블라디보스톡	-	-	-
부정기편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보스크	블라디보스톡

○ (몽골) '91년 항공협정 체결 이후 1노선 1社제로 유지되어온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복수항공사 취항으로 항공 활성화 기반 마련

* 한-몽골 간 항공수요 : '18년 기준 약 33만명으로 추산, 연평균 약 11% 증가

- 앞으로는 최대 주 9회, 주 2,500석까지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수권 보유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해 항공운항 확대 예정

○ (중앙아시아) 한-조지아 공급력(주3회) 설정으로 직항 운항 기반 마련 추진

□ 투자계획 : 해당 없음



Ⅲ. 기관별 추진 과제

- 1. 총괄 현황 / 375
- 2. 기관별 추진과제 현황 / 376

소관부처	실천 과제 수	예산사업		비고
		예산	비예산	
합 계	138	116	22	
문화체육관광부	10	10	-	
통일부	2	2	-	
농림축산식품부	3	3	-	
행정안전부	2	1	1	
산업통상자원부	2	2	-	
환경부	16	14	2	
보건복지부	2	2	-	
국토교통부	80	61	19	
해양수산부	17	17	-	
산림청	4	4	-	

※ 2개이상 공동부처 추진과제는 각각의 부처 사업으로 산정(중복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10)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1-1-라	지역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관광분야)	관광개발과 (044-200-2897)
2-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2-3-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2)
2-3-다	지역 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관광산업 진흥기반 확충)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6)
2-3-라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관광개발과 (044-203-2893)
2-3-바	재생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노후관광지 재생, 관광콘텐츠 발굴)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5)
2-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2-4-가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공간 조성 (문화서비스 시설 확충)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31)
2-4-나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관광거점도시 육성)	관광개발과 (044-203-2893)
2-4-라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글로벌 수요 창출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83)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6-1-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관광개발과 (044-203-2982)
6-2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6-2-마	동북아 산업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교류 확대 및 한류콘텐츠 진출 지원)	국제관광과 (044-203-2834)

통 일 부 (2)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6-1-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행과 경제협력 추진	교류지원과 (02-2100-2392)
6-1-마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 및 관리·개발	남북접경협력과 (044-205-3517)

농림수산식품부 (3)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1-3-가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농촌정책과 (044-201-1516)
1-3-나	농촌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	지역개발과 (044-201-1554)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4-4-라	자연과 조화된 농산어촌 경관 조성	지역개발과 (044-201-1558)

행정안전부 (2)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1-3-사	접경지역·도서지역·특수상황지역 발전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3-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3-4-사	지진 대피장소 관리	지진방재관리과 (044-200-5192)

산업통상자원부 (2)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1-1-다	시도간 협력을 통한 광역 협력권 산업육성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7)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2-1-가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8)

환경부(16)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4-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4-1-가	전국의 생태축 복원사업	자연환경정책과 (044-201-7231)
4-1-나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자연공원과 (044-201-7326)
4-1-다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및 IoT 활용 대기배출관리시스템 구축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4)
4-1-라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 설치 지원사업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9)
4-1-마	지능형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운영	폐자원관리과 (044-201-7362)
4-1-바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
4-2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4-2-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행 점검	기후전략과 (044-201-6647)
4-2-라	미세먼지 정보관리기반 구축 및 친환경차 보급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2)
4-2-마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국제협력과 (044-201-6564)
4-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4-3-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수자원정책과 (044-201-7624)
4-3-마	수돗물 안전성 확보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4-3-바	하수 재이용 사업	생활하수과 (044-201-7024)
4-3-사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자연공원과 (044-201-7313)
4-3-아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 이용체계 구축	해양생태과 (044-200-5318)
4-3-파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강화 (재생에너지사업 갈등 관리)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4-4-나	국립공원 해양 생태축 관리	자연공원과 (044-201-7313)
6-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6-3-가	파리협정 후속 협상 대응 및 이행	기후전략과 (044-201-6646)

보건복지부 (3)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처
3-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3-2-가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보육팀 (044-202-3545)
3-2-나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충)	치매정책과 (044-202-3537)

국토교통부 (69)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1-1-가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지역정책과 (044-201-3665))
1-1-나	지역을 잇는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도로정책과 (044-201-3881)
1-1-마	남해안 경관도로 및 명품전망 공간 조성	기획총괄과 (044-201-4549)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1-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행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46)
1-1-사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정책과 (044-201-3665)
1-2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1-2-가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수도권정책과 (044-201-3658)
1-2-나	지역경제 거점간 연계성 제고(철도 단절구간 연결 등)	철도건설과 (044-201-3953)
1-2-다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정책총괄과 (044-201-4458)
1-2-라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행복도시·새만금·기업도시 건설)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2-1-나	혁신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캠퍼스혁신 파크 등)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63)
2-1-다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2-2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2-2-가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재생역량과 (044-201-4912)
2-2-나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구조고도화 추진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739)
2-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2-3-마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해안권발전지원과 (044-201-4559)
2-3-사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설악동 재건 사업)	해안권발전지원과 (044-201-4568)
2-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2-4-다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국제항공과 (044-201-4211)
3-1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3-1-가	도시의 적정개발, 관리강화 및 도시공간 구조 개편	도시정책과 (044-201-3708)
3-1-나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4)
3-1-다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주거재생과 (044-201-4941)
3-1-라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건축정책과 (044-201-4752)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3-1-마	용도지역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	도시정책과 (044-201-3708)
3-1-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기능 강화와 관리	녹색도시과 (044-201-3747)
3-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3-2-다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정책과 (044-201-3665)
3-2-라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3-3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3-3-가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3-3-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9)
3-3-다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진화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3-3-라	미래형 주택보급 확대 추진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4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3-4-가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건축안전과 (044-201-4989)
3-4-나	소규모 교량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2)
3-4-다	노후철도 시설물 적기 개량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5)
3-4-라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설안전과 (044-201-3587)
3-4-마	생활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기반시설 안전투자 강화	시설안전과 (044-201-4997)
3-4-바	기후변화에 대응한 철도사고예방 및 열차안전 운행 확보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17)
3-4-아	지하공간 안전체계 구축	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4)
3-4-자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시설안전과 (044-201-3587)
3-4-차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정책과 (044-201-3557)
4-1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4-1-바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국토정책과 (044-201-4744)
4-2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4-2-나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	도로정책과 (044-201-3874)
4-2-다	수소철도차량 기술개발	철도정책과 (044-201-3949)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4-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4-3-가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토지정책과 (044-201-3399)
4-3-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관리	하천계획과 (044-201-3615)
4-3-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녹색건축과 (044-201-3769))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4-4-가	개성과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4-4-다	통합적 관리를 통한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4-4-사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경관 향상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5-1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5-1-가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도로분야)	도로정책과 (044-201-3881)
5-1-나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철도분야)	철도건설과 (044-201-3961)
5-1-다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센터 구축	광역환승시설과 (044-201-5132)
5-1-라	도로 네트워크 보완 및 효율적 운영	도로정책과 (044-201-3876)
5-1-마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철도정책과 (044-201-3940)
5-1-바	협력조정형 광역교통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46)
5-2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5-2-가	노후 인프라의 적기개량을 통한 안전성 제고	시설안전과 (044-201-4997)
5-2-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정책과 (044-201-3557)
5-2-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4)
5-2-라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개량 추진	도로정책과 (044-201-3874)
5-2-마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일반국도 횡단보도설치)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6)
5-2-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철도이용편의 시설확충)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5)
5-2-사	교통취약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대중교통과 (044-201-3826)
5-3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5-3-가	전국 주요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확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934)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5-3-나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응한 교통체계 개편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8)
5-3-다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신교통서비스과 (044-201-3820)
5-4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4-가	물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물류정책과 (044-201-3998)
5-4-나	도시물류 거점 육성 및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5-4-다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	철도운영과 (044-201-3971)
5-4-라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국제항공과 (044-201-4211)
5-5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5-5-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편리한 생활공간 창출	도시경제과 (044-201-4097)
5-5-나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도시경제과 (044-201-4097)
5-5-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도시정책과 (044-201-4972)
5-5-다	디지털트윈 가상국토의 구축과 운영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5)
5-5-라	공간빅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1)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6-1-다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국토정책과 (044-201-3651)
6-2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6-2-가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도로분야)	도로정책과 (044-201-3874)
6-2-나	대륙 연결형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축(철도분야)	철도정책과 (044-201-4643)
6-2-다	한반도-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철도정책과 (044-201-3949)
6-2-라	신남방·신북방 해외건설 시장진출 지원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8)
6-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6-3-라	해외인프라 건설·수주 활력 제고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6-3-마	교역 대상국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27)
6-3-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20)
6-3-사	항공 인프라 활용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국제항공과 (044-201-4011)

해양수산부 (17)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1-3-라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1-3-마	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활력 제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174)
1-3-바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업생명지원과 (044-200-5673)
2-3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2-3-나	지역맞춤형 해양 레저관광 거점 구축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5)
4-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4-3-자	연안 및 해양환경의 관광자원 활용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7)
4-3-차	연안정비사업 추진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4-3-카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4-4-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보전과 (044-200-5302)
5-2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5-2-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해상운송비 지원	연안해운과 (044-200-5734)
5-2-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연안해운과 (044-200-5732)
5-3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5-3-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044-200-6202)
5-4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4-마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항만개발과 (044-200-5933)
5-4-바	동북아 항만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항만운영과 (044-200-5792)
5-4-사	해운금융 및 선박관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운정책과 (044-200-5716)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6-1-라	북한 주요 항만 현대화	항만정책과 (044-200-5911)
6-3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6-3-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및 해양환경 협력 강화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6-3-다	한·중·일 유해 해파리 공동대응 및 황해갯벌 보전 협력	해양생태과 (044-200-5315)

산 림 청 (3)

관리번호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전화번호)
1-3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1-3-다	산림자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산촌 발전 유도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4-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4-3-나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3)
4-4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4-4-마	전통마을숲 복원 및 산림경관숲 조성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6-1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조성	
6-1-나	남북산림협력 및 접경지역 산림관리	남북산림협력단 (042-481-1816)